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1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49조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 사 개 요

- ☐ 감사기간 : 2023년. 11. 2.(목) ~ 11. 15.(수)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023. 11. 1.(수) ~ 12. 22.(금) <52일간>
-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22. 11월 ~ 2023.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세 부 추 진 계 획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195개 기관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 영	행 자 정 치	기 경 획 제	환 경 수 자원	문화체육 관 광	보 건 지	도시안전 건 설	주 공 택 간	도시계획 균 형	교 통	교 육
계	195	3	13	15	40	12	53	44	5	6	4	42
위원회의 결	128	3	9	7	40	6	7	43	4	5	4	42
본회의 결	67	-	4	8	-	6	46	1	1	1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28),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67)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28)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67)
운영 위원회 (3)	○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위원회 (1 3)	○ 비상기획관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기획경제 위원회 (1 5)	○ 기획조정실 ○ 경제정책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서울연구원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품물시장(백상코퍼레이션(주))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환경수자원 위원회 (4 0)	○ 기후환경본부(2)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 푸른도시여가국(7) - 푸른도시여가국 - 공원여가센터 • 동부, 중부, 서부, 북부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상수도사업본부(17)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28)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67)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 수도자재관리센터 ○ 미래한강본부(13)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 안내센터(11개소) • 강서,광나루, 난지, 뚝섬, 망원, 반포, 양화, 여의도, 이촌, 잠실, 잠원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 2)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5 3)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3)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가족센터(舊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동부아동복지센터(舊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복지정책실 소관(14)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고덕양로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광역),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28)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67)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은평의마을,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 시민건강국 소관(19)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4 4)	○ 재난안전관리실 ○ 도로사업소(6개소)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특수구조단 ○ 소방서(25개소)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2개소) • 중랑, 난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서울기술연구원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28)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67)
주 택 공 간 위 원 회 (5)	○ 주택정책실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정책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디지털재단
도시계획균형 위 원 회 (6)	○ 도시계획국 ○ 균형발전본부 ○ 디자인정책관 ○ 미래청년기획단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서울디자인재단
교 통 위 원 회 (4)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교 육 위 원 회 (4 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4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17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11개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 감사위원회 편성 : 각 상임위원회별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1	운 영 위 원 회 (1 3)	김지향 (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 훈, 김 경, 박유진, 이병도	이병수, 신은주, 박태현, 이시우, 김혜진, 장수진, 김정원, 임재빈, 채학기, 전은애, 박은영,
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9)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김태한 김성택, 김정덕 류홍섭 최석훈 정찬일 이태기, 최문숙 손정욱 박소현 김경선 강태영 민현범 박수형 양옥수, 양윤진 이슬기 이정수
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1 2)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이준석, 정진영, 김성만, 안나현, 최범준, 성동준, 김용우, 김광철, 유상준, 이성찬, 김혜진, 김소연, 정희숙, 신현두, 양성옥, 서인석, 송수진, 김범석, 안태호
4	환 주 자 위 원 회 (9)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성옥현, 박귀수, 배성진, 조창훈, 유시범, 정주현, 김선희, 윤소민, 박완규, 김경혜, 박세경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9)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주우철, 이선희, 임창균, 이지영, 박지혜, 심형준, 정재운, 홍민지, 임은덕, 배태웅, 이현주, 이순복, 박은비, 홍수희, 김동규, 박은샘, 김보미, 송선영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9)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 경, 최기찬	주병준, 황동연, 김소은, 박현우, 김나운, 손은영, 심선영, 이정화, 이윤진, 우현재, 도미화, 김종훈, 신현태, 박서영, 박지연, 백순정, 김지혜, 박진수, 박연희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7	도시안전설 위 원 회 (1 0)	송도호	김용호 박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 신	이상근, 고은미,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정민선, 김성연, 남기태, 홍민아, 김시환, 백제리, 공혜정
8	주택공간 위 원 회 (1 3)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 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오정균, 김숙희, 강대만, 이정현, 이샘이, 조동륜 박영신, 한승윤, 최지현, 김태훈, 조윤길, 전재성
9	도시계획 위 원 회 (1 3)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 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조성준, 김상원, 하미경, 박성원, 권수정, 김금란, 이주병, 유은아, 이지인, 장미영, 김연희, 박정열
10	교통 위 원 회 (1 3)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장 훈, 민향식, 박준영, 배효인,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김유라, 남승연, 지연경, 이동남
11	교육 위 원 회 (1 3)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윤희, 우형찬, 전병주	김창범, 박광선, 김 구, 노이안, 정진국, 이가영, 김한수, 김지수, 이현주, 최명현, 박세은, 백경하, 온현지, 조지훈, 백승호, 이진석, 김보미, 이윤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1.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5.(수)	10:00	○ 서울특별시청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실	

2.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행정자치위원회	11. 2.(목)	10:00	○ 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실	
	11. 3.(금)	10:00	○ 자원봉사센터 ○ 민생사법경찰단		
	11. 6.(월)	10:00	○ 재무국		
	11. 7.(화)	10:00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11. 8.(수)	10:00	○ 자료정리		
	11. 9.(목)	10:00	○ 자치경찰위원회		
	11. 10.(금)	10:00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50플러스재단		
	11. 13.(월)	10:00	○ 평생교육국		
	11. 14.(화)	10:00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 15.(수)	10:00	○ 종합감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3.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기 획 경 제 위 원 회	11. 2.(목)	10:00	○ 기획조정실	기 획 경 제 위 원 회 회의실 및 현장	
	11. 3.(금)	10:00	○ 경제정책실 ○ 서울시립과학관		
	11. 6.(월)	1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품물시장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11. 7.(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연구원		
	11. 8.(수)	10:00	○ 자료정리		
	11. 9.(목)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11. 10.(금)	10:00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11. 13.(월)	10:00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 14.(화)	10:00	○ 종합감사 실시		
	11. 15.(수)	10:00	자료정리		

4.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1. 2.(목)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회의실 및 현장	
	11. 3.(금)	10:00			
	11. 6.(월)	10:00	○ 푸른도시여가국 - 푸른도시여가국 - 공원여가센터(4개소)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11. 7.(화)	10:00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11. 8.(수)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9.(목)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10.(금)	10:00			
	11.13.(월)	10:00	○ 미래한강본부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 안내센터(11개소)		
	11.14.(화)	10:00			
	11.15.(수)	10:00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1. 2.(목)	10:00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120다산콜재단	문 화 체 육 관 광 위원회 회의실	
	11. 3.(금)	10:00	○ 대변인 ○ 홍보기획관		
	11. 6.(월)		○ 자료정리		
	11. 7.(화)	10:00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11. 8.(수)	10:00	○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11.9.(목)	10:00	○ 서울관광재단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11.10.(금)		○ 자료정리		
	11.13.(월)	10:00	○ 서울문화재단 ○ 문화본부		
	11.14.(화)		○ 자료정리		
	11.15.(수)				

6.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1. 6.(월)	10:00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실 및 현장	
	11. 7.(화)	10:00	○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 북부여성발전센터 -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여성보호센터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가족센터 (舊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 동부아동복지센터 (舊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11. 8.(수)		○ 감사결과 자료정리		
	11. 9.(목)	10:00	○ 복지정책실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11.10.(금)	10:00	○ 복지 관련 기관 - 시립고덕양로원 - 서울시아르신돌봄중사자종합지원센터(광역) - 서남아르신돌봄중사자 지원센터 - 동북아르신돌봄중사자 지원센터 - 동남아르신돌봄중사자 지원센터 - 시립평화로운집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시립은평의마을 -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11.13.(월)	10:00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1.14.(화)	10:00	○ 서울의료원 ○ 직영 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위탁 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동북)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 정신건강통합센터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결과 자료정리		
	11.15.(수)		○ 감사결과 정리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11. 2.(목)	10:00	○ 재난안전관리실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회의실 및 현장	
	11. 3.(금)	09:30	○ 재난안전관리실		
	11. 6.(월)	10:00	○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1. 7.(화)	09:30	○ 물순환안전국		
	11. 8.(수)	10:00	○ 소방재난본부		
	11. 9.(목)	09:30	○ 소방재난본부		
	11.10.(금)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11.13.(월)	09:3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11.14.(화)	10:00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기술연구원		
	11.15.(수)	10:00	○ 감사결과 정리		

8. 주택공간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주 택 공 간 위 원 회	11. 2.(목)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택 공 간 위 원 회 회의실 및 현장	
	11. 3.(금)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1. 6.(월)	10:00	○ 주택정책실		
	11. 7.(화)	10:00	○ 주택정책실		
	11. 8.(수)		○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11. 9.(목)	10:00	○ 미래공간기획관		
	11. 10.(금)		○ 현장 확인 감사		
	11. 13.(월)	10:00	○ 디지털정책관 ○ 서울디지털재단		
	11. 14.(화)	10:00	○ 주택정책실 ○ 서울주택도시공사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정책관 ○ 서울디지털재단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도 시 계 획 균 형 위 원 회	11. 2.(목)	10:00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 시 계 획 균 형 위원회 회의실	
	11. 3.(금)	10:00	○ 미래청년기획단		
	11. 6.(월)	10:00	○ 도시계획국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11. 7.(화)	10:00	○ 도시계획국		
	11. 9.(목)	10:00	○ 디자인정책관		
	11.10.(금)	10:00	○ 서울디자인재단		
	11.13(월)	10:00	○ 균형발전본부		
	11.14(화)	10:00	○ 균형발전본부		

10. 교통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교 위 원 통 회	11. 2.(목)	10:00	○ 도시교통실	교 통 위 원 회 의 실	
	11. 3.(금)	10:00	○ 도시교통실		
	11. 6.(월)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 7.(화)	10:00	○ 서울시설공단		
	11. 8.(수)	10:00	○ 서울시설공단		
	11. 9.(목)	10:00	○ 감사결과 정리		
	11.10.(금)	10:00	○ 서울교통공사 - 9호선운영부문,자회사5개포함 (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서해철도(주) <포함>)		
	11.13.(월)	10:00			
	11.14.(화)	10:00	○ 도시교통실		
	11.15.(수)	10:00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11. 교육위원회

위 원 회 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교 위 원 회	11. 2.(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11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	교 육 위 원 회 의 실	
	11. 3.(금)	10:00			
	11. 6.(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11. 7.(화)	10:00			
	11. 8.(수)		○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검토		
	11. 9.(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사무)		
	11.10.(금)	10:00			
	11.13.(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사무)		
	11.14.(화)	10:00			
	11.15.(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및 총평		

6

감사결과 총괄표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450	1,677	889	884
운 영 위 원 회	101	43	37	2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301	145	69	8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428	225	103	100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354	144	89	12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411	196	112	10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334	110	114	110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61	178	27	56
주 택 공 간 위 원 회	298	103	111	84
도 시 계 획 균 형 위 원 회	193	74	81	38
교 통 위 원 회	344	217	70	57
교 육 위 원 회	425	242	76	107

시정·처리요구 사항 ----- **1,677건**

1. 운영위원회 ----- **43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15건**

1. 송현공원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송현동 부지 매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
2. 송현동 이전희 기증관 건립 기재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3.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용절차 중인 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잘못임
4. 의회 사전 동의없이 서울시가 업무협약 체결한 사례가 다수임. 2019년 조례가 발의되어 의회 사전동의 받도록 돼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법 위반하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람
5.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비 등 규정에 맞지않는 방만한 지원이 되고있음. 노조법을 어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운영비 기준을 엄격히 하기 바람
6.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는 단지 중 SH공사가 관리중인 단지는 58%만 회의 구성 중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있는 사항을 협의없이 결정한 사례가 있어 확실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7. 메타버스 사업은 22년 24억, 23년 28억, 24년 예산(안) 7억 편성, 이후 26년까지 약 405억 원 예산 투입 예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 23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0개월간 총 약 15만 명이 이용했으며, 월 평균 1만2천 명이 이용함. 이는 전체 서울시민의 1% 수준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보여짐
 - 메타버스 민원상담 건수는 10개월간 총 365건이며 ‘테스트’ 이용이 절반 이상임 120다산콜재단이 같은 기간 상담건수가 총 540만 건인 것에 비하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사업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대표적 사업임.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 중심을 두고 디지털약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8.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규가 정부 지침에서 어긋나거나 시 공무원 기준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여전히 운영 중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 (사례1) SH공사는 강사료 별도 지급기준을 정해 외부 강사에게 매시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표에 따르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학총장, 대기업 총수에게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 원의 강의료가 지급됨
 - 그러나 SH는 별도 지급기준을 정해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시간 100만 원씩 지급해 과도하다고 생각됨
9. (사례2) SH,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물식품공사 등 9곳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임직원에게 ‘최고위 과정’ 수료를 위해 약 5억 원 지원함
- 지원금에는 학비, 교통비, 식비, 교육과정 일환 중 하나로 짜여있는 해외출장과 국내연수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자부담 없이 기관이 전부 지원해주는 경우는 과도하다고 생각됨
 - 수혜자 중에는 성비위로 해임, 강등 처분 받은 임직원도 있는데 별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침 등 근거는 없으므로 규정 보완이 필요함
 - 또한 기본적으로 ‘업무병행’을 원칙으로 하고, 비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운용돼야할 것
10. (사례3)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로여행비 55억 원을 지급함.

- 공사는 비위자 23명에게 공로여행비를 지급했는데 비위 내역에 따르면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무단결근 등 비위자 23명에게 공로여행비를 지급했는데 '의무 복무기간'을 준수해 별도 환수조치는 없었음
 -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보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근 몇 년 내 징계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규정이 미흡했던 것을 지적
 - 금번 임단협에 '공로여행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쇄신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관심 가져주길 바람.
11. 인재개발원 5월 승진 역량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결과도 해당 기관 통보, 주의 정도에 그치고 인재개발원 자유게시판에서도 별 문제 없다는 뜻이 글이 올라옴. 채용에는 무엇보다 공정이 중요하니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12. 김포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토부 의견 제출 전 의회 보고 및 동반 방문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음. 국토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고도제한 완화 관련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는지 보고 바람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유재산안을 심의해야할 위원회를 늘리고 예산확정 직전에 제출하는 관행도 수정이 필요함
14. 자원봉사센터는 투출기관이 아닌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서울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음, 법인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필요함
15.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모든 실국 사업이 약자 동행 사업이고 서울시민도 대부분 약자에 해당되는 등 매우 포괄적임약자와 의동행추진단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시의회사무처 : 28건

1. (언론보도 관련) 보도자료 배포 이후 보도된 기사에 대해 홈페이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재조정, 인력충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것
- 2. (알림톡 발송 관련) 중복 발송 및 지역신문 누락되는 사례 있으며, 기자 입장에서 편의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알림톡 발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자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 필요
- 3. (인사변동에 따른 자료 현행화 미비) 신입 사무처장 발령 이후 수일이 지나도록 서울시 전화수첩에 사무처장 현행화 안되어 있는데 조치바람
- 4. (관용차량 관리) 특정 관용차량의 교통위반 다수 발생.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시정 바람
- 5.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련) 상임위 회의용 노트북에 보급된 한글 및 MS오피스가 뷰어 프로그램으로 편집 불가능. 조치 바람
- 6. (회의실 대관 관련) 본관 1층 접견실(舊 귀빈실) 관련 대관 규정도 없고 이용절차 불명확함. 규정 정비를 통해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본관 포함 회의실 대관시스템 정비 바람
- 7. (방송콘텐츠 관련) 예산 투입에 비해 방송콘텐츠 시청률이 낮아 실질적인 홍보효과에 의문
- 라디오 광고가 특정매체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개선 바람
- 8. (보도자료 배포 관련)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기준이 모호함. 배포기준 재검토 필요
- 9. (의회 홈페이지 로그인 관련) 시의회홈페이지 로그인시 간편인증 방식 도입 필요
- 10. (의원 사무공간 복합기 관련) 교체된 복합기 소음발생 및 성능 저하 문제가 있음. 구매처에 점검 요청하고 향후 다기능사무기기 제품 보급시 사전 성능 파악후 보급 바람
- 11.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임기제 공무원 결원 관련. 퇴직과 채용 사이 업무공백 발생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초래, 이에 대한 개선 요청
- 12.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태 관련) 한시임기제 채용 후 병가 등 활용하여 실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발생.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필요

13. (여성 휴게실 관련) 의원회관 여성휴게실 환경 개선 필요
14.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관련) 관련 규정에 따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숙지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 요청
15. (비용추계 개선 관련) 상임위 안전심의시 비용추계 미첨부 건 발생
 - 주공위와 행자위 안전 중 비용추계가 가능함에도 미첨부2호로 작성, 환수위 안전 중 예산수반으로 예상되나 비대상으로 분류된 안전이 있음
 - 집행기관과 논의해서 비용추계 양식 통일해 주기 바람
16.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서울시의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선구매비율은 연평균 0.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전국 17곳 시·도 의회를 대상으로 비교해봐도 가장 낮은 수치로 장애인 배려 정책 취지를 감안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17. (속기직원 근무 편차 관련) 의사담당관 기록팀 속기 직원 간 근무량 편차 심함. 적정 업무량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8.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불법 점유에 대한 연체료 전액 미납중인데 적극적 대처 필요하며, 향후 공간 정리 시점에 대한 고민 필요
19. (서울의회 배부 관련) 서울의회 배부처 관리 부실에 대해 DB 정비 조치 바람
20. (개인정보보호와 감사권 상충 관련) 의회 감사권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법 상충시 제출 거부가 가능한지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검토하고 결과 보고바람
21. (의원 연서 관련) 전자에서 수기방식으로 변경되어 많은 의원들이 불편함 토로. 의원 의견 조사후 전자-수기 병행 가능한지 여부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함
22. (의원 연구단체 운영 관련) 의원연구단체 지원규모 연간 600만원 미만으로 기재시 오해 소지 있음. 자료에는 연 평균 지원액으로 기재 요망

23.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관련) 의원 연구실 법적 기준 미달한 상황 고려해서 설계 및 집행 해주기 바람
24. (의정정보화 지원 관련) 최근 교체된 상임위원회 노트북 성능이 떨어져 사용 불편,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확인 후 조치 바람
25.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집행 철저)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사고이월 등 활용 적극 집행 필요
26. (상임위원회 현황표 현행화 관련) 상임위 위원 변동사항 발생 후 현황표 즉시 현행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 보고해 줄 것
27. (의정모니터 관련) 의정모니터 의견 반영률이 1,738건 중 4건으로 극히 낮음.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28. (의회 본관 도색) 본관 뒤편 주차장 외벽 도색 벗겨진 곳이 많음. 미관상 좋지 않으니 조치 바람

2. 행정자치위원회

----- 145건

□ 비상기획관 : 9건

1. 을지훈련, 민방위훈련에 관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음. 제도가 잘 알려져서 시민들이 병역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
3. 드론의 적극적인 보급과 교육을 통해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시대비 훈련실시 필요함.
예비군 훈련 시 드론 보급 활성화시켜 예비군이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민방위 6종 장비 종류별, 자치구별 확인한 편차 및 과잉 보유 장비 추가 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5. 대피소 환경과 안내에 대한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왔음. 6년만에

재개된 민방위 훈련 취지는 ‘대피’가 주된 목적임에도 대피소 관련 통계자료는 여전히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고 홍보와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피소 정비 후 대피소 규모와 정보를 현실화해서 시민에게 안내할 것, 자치구 관리에 대한 협조 및 총괄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 필요.

6. 행안부의 민방위 지침에 보면 재난약자 편의시설 갖추도록 되어 있음. 재난약자(이동약자, 장애인 등)의 대피 지원과 편의시설 보강 조치할 것.
7. 을지훈련 관련 국가사무인 비상대비훈련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을지훈련에 대한 기획, 통제 등 총괄은 행안부가 하고 있으므로 국비 지원이 필요함. 적어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의견 개진할 것.
8. 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많은 문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5건

1. ‘해외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사업의 경우 매해 편성된 사업예산 불용 발생. 직원 국외연수 기회를 열어두는 건 좋지만 매년 불용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듦.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실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줄 것.
2. 수사기간을 담은 수사매뉴얼 업데이트가 필요함.
3. 전문수사자문단이 없어졌는데 향후 어떤 검증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자문을 구할 예정인지 관련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4.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한 불법숙박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조치 필요
5. 대포킬러는 요청 후 반영까지 기간이 길어 대포폰을 활용한 지능적인 범죄에 효과적인 방편이 되지 못하니 기간 단축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6.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전문성을 위한 전문관 확대가 필요.

□ 행정국 : 22건

1. 직원 장기국외연수 대상 선발 시 국장급 등 4급 이상이 다수로 편중되어 있음. 하위직군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2. 올해 7월 서울시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평가에서 부적정 처분 178건이 발생하였음. 민간단체 지원 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주고, 또한 회계 감사 시 공인회계사, 외부전문가 등을 공개 채용하여 정밀하게 감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
3. 서울특별시 속초 연수원 북카페에 비치된 도서들이 낡고 오래 되었으며, 사용자도 현저히 적음. 북카페 정비해줄 것.
4. '2022년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시 직원들이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함. 연수원 및 콘도 주중 이용, 연금매점 할인 등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
5.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집행 시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현금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일부 금액만 카드로 처리되었으니, 이 같은 보조금 집행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6.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란 환경이 달라져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기초수급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를 벗어나堂堂한 서울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7. 서울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인력개발과에서는 공문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당연한 권리인 연가, 조퇴 등을 사용하라 하였으나, 체육대회는 직원 간의 단합이 우선 목적이므로 개인의 휴식으로 볼 수 없어 체육행사와 관련한 복무처리 개선이 필요함.
8.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은 각 층마다 전자렌지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어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비위생적이며, 뜨거운 것을 데우고 객실로 들어갈 때 위험하므로 객실마다 전자렌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9. 임용 대기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짐에 따라 공무원 합격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임용대기자가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보도 자료

가 나오고 있으며, 행감 제출자료를 보면 임용대기 인원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신중히 채용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임.

1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내구연한이 무려 15년이 지난 경유 차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외에도 30인승 경유 차량이 무려 12년이 지난 채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전과 환경을 위해 차량 관리에 주의를 요함.
11. 장기국외 훈련자 과제 선정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서울시 역점 사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과에서 사전에 훈련 과제를 조율 및 유도할 필요가 있음.
12.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주요 부서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3. 재정자주도가 높아져야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가 교부금 규모를 23.3%로 권고한 적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22.6%임. 교부율 상향 검토 바람.
14. 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비율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바람.
15.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가족체험시설 운영사항 개선이 여전히 미흡함. 공공이 운영함에도 활용도는 낮고 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타부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6. 연수원 운영현황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적 사항과 동일함. 시정할 것.
17. 민간위탁연수원 2곳(서천, 수안보)의 유료매장 이익금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함. 수익과 지출 구조 및 결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시스템 마련할 것.
18.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변상금 부과 내용을 전면 검토하고 조치할 것.
19. 서울시 배포 보도자료에 동주민센터 명칭이 동행센터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행정국과 협의 및 공유도 되지 않았음. 검토해서 조치할 것.

20.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 및 특별배려대상별 지원 실적이 미미함.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 있음.
21. 유연근무제 관련 시차출퇴근제 만족도는 높지만 실제 사용 인원은 부족한 바, 민원처리 부서 등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함.
22.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저연차(MZ세대) 공무원의 퇴직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재무국 : 16건

1.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음.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이를 수의계약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약에서는 기준에 맞게 진행해주길 당부함.
2. 최근 2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총 11건이 재상정 되었는데 사업목적 변경, 설계 변경, 금액 재상정 등의 사유로 재상정 되었으며 이들 중 1건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로 인해 삭제되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세무조사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자치구 취득세가 과다하게 누락된 것으로 보임. 자치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마을 세무사들의 동별·인원별 편차도 심하고 심지어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세무사들이 많은데, 홍보와 더불어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
5. 재무국 소관 위원회 중 세수추계 자문회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위원 수당 지급에 활동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 자문회의 운영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6. 외국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으며, 특히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외국인 체납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체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납세 의무가 있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철저히 인지도시킬 수 있도록 납세의무 홍보 강화할 것.
7.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세금 수납창구를 다양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8.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24년 재무국 정책목표에 공동과세 제도 확대

방안 반영 바람.

9.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청취 등 설득 노력 바람.
10.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세입추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함. 세외수입이 매년 추계와 징수 간 편차가 매우 크며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 매년 세외수입은 덜 걷히고, 지방세는 많이 걷혀서 세입추계와 결산상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다 정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재무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취합 및 제출 전 단계에서 재무국의 적극적인 사전 분석·검증 및 조정을 통해 의회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12.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13. 시민에게 반환되지 않은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할 것.
14. 38세금징수과의 가택조사 등에 있어 공무원의 사전 법적 보호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1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결손 과목의 징수율에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16.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시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평생교육국 : 12건

1. 서울청소년센터 시설대관 운영 규칙에 따라 행사가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승인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달 10월 광진청소년센터에서 대규모 정당 관련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향후 시설대관 시 규칙에 기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과 우려가 큼. 여성가족부의 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게 프로그램 관리 감독을 잘 해줄 것.
3. 서울런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을 보면 2년 동안 사업 추진 후 사업평가 결과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음. 그런데 사업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원 대상만 10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만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 바람.

4. 저소득층에게는 온라인으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지원이 필요함.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서울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데 만오천여 명을 위해 백억이 넘는 예산을 쏟는 것은 맞지 않음.
5. 평생교육국은 중장년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나, 2024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정책과 예산 기조가 상이하어,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및 예산 편성 사이에서 일관성 유지가 요구됨.
6. 서울런은 정책 수혜대상에 대한 지향성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보건 복지부와 협의가 잘 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인지,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인지 명확히 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7. 소관 출연기관의 감사결과와 성과평가가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보다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계획 및 관리계획 등 개선 및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
8.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소수 부류 또는 집단 등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시민 또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9. 민간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 후 형식적 점검과 개선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진흥 대책을 수립이 요구됨.
10. 사업성과평가에 서울런 대상자 중 서울런 미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함.
11. 자치구 50플러스 센터 지원 예산 삭감은 사업의 효과성 저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요구됨.
12. 청소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청소년시설을 찾는 청소년이 적으며, 청소년시설은 수익성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인재개발원 : 13건

1. '2022 직원 만족도 조사' 교육, 훈련 분야에서 시 직원들이 학습목표시간 과다. 필수 의무교육 축소,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개선사항으로 응답함. 교육 훈련의 효과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국과 협의하여 조정 및 개선 필요함.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 평가 진행해주길 바람.
2. 공무원 시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인사혁신처 간의 기준이 상이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립할 것.
3. 교육과정간 집합교육 이수율 편차가 크게 나타남(ex. 소송실무 210%, MICE 14%). 인기과정의 정원은 늘리고, 비인기 과정 정원은 줄이는 등 이수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4. 인재개발원 도서관 홈페이지 부실 운영 개선 필요함.
5. 인재개발원 도서 구입 예산이 도서관의 본래 목적이 아닌 직원들의 사적 도서 구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재개발원 도서관의 위상과 목적에 맞는 도서를 구비할 것.
6.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채용인원은 법정 목표이자 서울시의 사회적 책무이므로 목표 인원을 충실히 채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2023년도 HRD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 추진한 내용이 사실상 없음.
인재 개발원 직원대상 HRD 역량 강화 사업의 중요성과 프로그램 강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여전히 연말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재개발원은 '우수인재 선발'과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두가지 축을 목표로, 이에 걸맞는 HRD 역량강화 사업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
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p32. 연말에 집중해서 진행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감·추경을 고려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조치결과는 문제가 큼. 예산집행률보다 예산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예산집행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9. 인재개발원 시설에도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기자재 등 시설 보강과 콘텐츠에 대해 강력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0.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제시된 대안(정원축소, 교사축소, 이용비율 조정 등)은 여전히 빈약함. 미리미리 중장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할 것.
11. 5급 역량평가의 경우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크고 평균점수도 직렬간 편차가 큼. 또한 연령별 점수 차이도 큰 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12.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저연차 직원에 특화된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과정 개선이 필요함.
13.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직원의 수요가 많은 전문자격증 강좌 확대가 필요함.

□ 감사위원회 : 12건

1. 9월 기준 실 국별 청렴교육 이수율 살펴보면 20% 미만인 기관들이 많아, 해마다 온라인교육은 연말에 몰아서 이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온라인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이것이 과연 교육 목적에 부합한 지 의문.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매해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2. 올해 제3차 서울시 인권계획(23~27) 수립하였는데 향후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 시대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인권 개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개선해 줄 것.
3. 감사 결과 처분 통보 후에도 시정, 조치 현황까지 챙길 것.
4. 보조금 지급 민간단체를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
5. 담당부서에서 수탁기관 등의 횡령 등은 감사위원회에 필수 제보하고, 제보 부서는 보호해야 함.
6. 2024년 감사계획에 부패청산을 포함하고, 사업소 중심 공직기강 해이 감사를 강화해야 함.
7. 시의원이 공익제보를 접수받아 시에 이첩하는 절차에 대한 별도 안내 바람.
8. '대외주의' 표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
9. 업무보고 자료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누락됨, 포함할 것.
10. 업무보고에 9~10월 추진계획이 너무 많음, 감사결과보고서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줄 것.

11. 50플러스재단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성 자체보다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일자리 사업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직과 운영 방향을 지적해주는 것이 타당.
12. 출연기관 직원들의 병가·휴직 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3건

1. 예산집행을 낮은 사업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2. 민원배심제 실적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와 행감자료에 차이가 있음.
3. 내지역지킴이 사업의 경우 인원을 평가항목에 넣는 것은 각 자치구 별로 인원 확보에만 주력할 수 있어 우려됨.
4. 내 지역 지킴이 단체복(조끼), 우양산, 보조배터리 등 단체물품 구매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5. 현재 홍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홍보비용 사용을 줄이고 내부 조직을 활용하여(ex. 다산콜센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6. 현장민원 사업추진 시 자치구의 활동가에 대한 소속감을 늘려주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시민의식 강화, 민간과의 관계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주고, 다산콜센터 직원의 고충도 늘어나니 그에 대응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임. 자치구와의 사업은 떠맡거나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안착해 나가길 바람.
7. 내년도 중점 감시대상 사업 선정시 사업비 기준 등으로 하기 보다는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사업소, 미래한강본부 등 신규 조직의 추진사업이나, 서울런 4050 등 시장 역점사업의 경우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가 더욱 필요함.
8.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청구 시스템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올해는 예산 규모가 훨씬 커졌음에도 실적은 2건뿐, 홍보 방법과 실적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분석에 따른 방안을 마련할 것.

9.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경우 예산 대비 활동이 너무 저조함. 실적 대비 규모와 예산만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은 대부분 참관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
10. 위원회 고유업무인 주민감사, 시민감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일 것.
11.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 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
12.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해결해야 할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13. 직원 비위가 많은 분야, 시장의 역점사업 등에 대한 중점 감시를 해줄 것.

□ 자치경찰위원회 : 15건

1. 학교폭력 대응에 관해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혼선이 있음. 이와관련하여 권한 소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2. 스쿨존 단속현황이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인지? CCTV 등 무인단속 기기 설치 비율은 자치구별 차이 없는지, 위치는 적정한지 등 살펴볼 것.
3.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연도별 2~4회 개최했으나 회의록이 없어 안전에 대한 회의결과,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음. 시정 필요함.
4. SPO의 학교 범죄예방 교육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인식변화, 등 성과지표 마련해 줄 것.
5. SPO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임. 적극적인 홍보 바람.
6. 2022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년 대비 46.4% 증가하였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 등 많이 노력해줄 것.
7. 유실물 처리 업무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하는데, 유실물 매각 대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 촉구 요청.
8.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적 전무 관련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9. 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교육에 있어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환경과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
10.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들을 통해 서울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경찰청 조직개편 위법성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닌지? 동원 가능한 언론 등 자원 활용하여 적극 대응 요청.
12.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년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권한 없이 협조 요청, 개선안 논의 등 정무적 역할만 가능한 실정임, 조직, 예산, 인사권을 갖춘 실질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3. 자율방범대 관련 법령 시행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자율방범대 관련 해서 경찰청은 간섭만 할 뿐 책임이 없는 상황, 현장의 구조와 목소리를 반영한 자율방범대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
14. 노인·아동·장애인 실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5. 시민경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3건

1.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경향이 있음. 봉사자 등록 수는 20대, 30대가 많으나 실제 봉사 시간을 살펴보면 60대, 70대가 가장 많은 시간 참여하고 있음. 향후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 참여자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것.
2. 자원봉사 유공자 포창의 경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기관장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부서장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음. 공정성이 담보된 명확한 추천기준을 정비하고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봉사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유사 중복사업이 많이 있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만의 특색있는 사업 개발을 고민하고 자치구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어 유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4.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재능기부 실적이 저조한 상황.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5. 서울동행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대학원생, 청소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낮음.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 써 줄 것.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업무보고서 등의 외래어 남발에 대해 시정조치요구 하였으며 이에 '처리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외래어가 남발하고 있어 적극 개선 필요.
7. 사업의 신설과 폐지가 잦은 것으로 보임. 전략적으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오래 이어나갈 수 있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대표사업을 고민해주길 바람.
8.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검토요청에 대한 진행 상황이 미흡함. 관제동원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9.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출연금 외 재원 조달 노력 요청에 여전히 소극적임.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은 하되 적극적인 모금행위는 지양한다는 내부 소극성은 심각한 문제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기부금 모금이 가능한데 소극적인 부분은 타 시·도·단체와 비교했을 때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정 필요.
10. 서울시 조직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령단체로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급하게 처리할 것.
11.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바,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비중이 높은 바, 사업비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 있음.
13.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 있음.

□ 서울장학재단 : 4건

1. 재단의 기본재산 136억 원에 대한 회계 담당자는 1명으로 관련 자격증 또한 미보유한 상태로, 소극적 비전문적으로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어, 전문적이며, 적극적, 안정적 기본재산 운영이 요구됨.
2. 장학재단의 성과는 장학금 지급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성과관리가 부족함. 사회적 효과 등 장학재단의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성과급도 여전히 받았는데 다음 경영평가 등급은 더 낮아 지는 등 조직운영과 경영평가 관련하여 개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속한 조치할 것.
4. 장학금의 특정시기 지급 및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적인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연중 고른 집행과 조건 충족자 사이에서도 차별력이 있는 지원이 요구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3건

1.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가 성원 13명 중 7명 공석인 상태로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것.
2. 이사회 구성은 인원의 수보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제천시의원 및 충북도의원 출신 비상임이사 위촉에 대한 적절성 의문이 들며, 파악 후 보고 바람
3. 지역별 평생학습 기관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8건

1. 50플러스재단 복무규정 중 병가 및 병 휴직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과 비교 시 부여되는 휴일과 급여 수준이 2배 이상 높은 편임. 복무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사협의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50플러스재단 고위급 간부들이 동일시기 특정 단체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사 관련하여 확인 바람.
3. 50플러스센터 12개소에 예산 지급 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센터의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함. 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평가 기준은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 반영하여 정립할 것.
4. 프로그램 이용의 지역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5. 서울런 4050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레 근거 없이 장년층 대상인 50+재단 사업범 위를 40대인 중년층까지 확대시켰음. 관련 조레개정이 필요함.
6.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사업이 전작이었던 인생이모작사업과 기능을 달리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변경되었다면 조레 개정이 필요하니 검토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
7. 다른 일자리 지원 기관과 유사·중복 사업은 불가피하다 보여짐. 중복 여부에 연연하기보다 오히려 재단의 설립 취지를 살려 강점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 등을 네트워킹하여 사회적 자원화하는 방향에서 차별화된 일자리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8.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노후대책, 일자리, 복지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획조정실 : 27건

1.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기부금이 홍보비용과 비슷할 정도로 투입한 홍보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홍보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2. 위례신사선(민간투자사업), 탄천변 동측도로(재정투자사업) 사업이 진척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예상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3. 동일한 사업임에도 민간위탁 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음. 평가 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4.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동일한 지표로 모든 투출기관에 적용하여 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유불리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 있음
5.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법정 제출 시한인 8월을 지키지 못해 성과급 지급 시기 늦어지고 있음. 개선해주기 바람
6.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와 차별화된 서울시정 평가지표 고민해주시기 바람
7.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진 선임 관련)몇몇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이나 역할과는 무관한 분들이 이사진으로 선임된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市 차원의 이사진 선임 기준이 필요함
8.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통합 관련) 잘 진행되고 있다던 보고와는 달리 기술연구원 노조의 원장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등 화

학적 통합 갈등 고조 우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결 노력 필요

9.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엠보팅 참여 연인원 감소, 조례상 시민으로 구분되지 않는 분야의 사람들이 엠보팅에 참여 가능 등 시민 관심 촉진 및 기술적 개선 필요 사항 발견. 조치 바람
10.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정대로 엄정히 대응하고 투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11.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하는 부분 시정 필요함
12.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나 규칙들 중 형식적인 오류가 많이 발견됨. 법제심사 시 꼼꼼히 확인바라며, 법제 관련 교육 및 인력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3. 서울시립대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14.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운영비 전반적인 지도점검 필요
15.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의 경우 예산낭비, 안전성 문제 등 고려해 필요시 과감하게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16.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생략된 절차 등은 간소화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 바람
17. 보탬e처럼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8. (양재동 파이스티 부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양재동 파이스티 부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362억원 예비비 지급하고 월 5.8억원 사용료 부담하고 있음. 판결문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파이스티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해당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법률적 문제

가 패소의 원인이 됨

19. 행정의 귀책사유로 시가 450억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지적. 2심 패소시 토지매입 비용 등 천문학적 재정지출 부담 우려. 사건진행상황과 1심 대응 전 과정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 계획 별도 보고할 것
20. 상설 위원회뿐만 아니라 비상설 위원회의 회의 정보도 공개조치가 필요함.
2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공개 대상 기관의 정의에 직속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시립대 등 조례 위반 시정하고 조속히 공개 조치할 것.
22.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인기가 좋고 효과도 좋음.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에 걸맞는 판단(집행부 부서간 사전조율 철저)을 하여 위탁/대행사업에 차질 없도록 예산·정원을 확보해 줄 것.
23. 외국인 가사노동 인력 논의가 육아 돌봄 시스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 진행하여 매끄럽게 진행하여 줄 것
24. 시비 보조금 사후 관리, 작년에도 제기되었던 질의, 아직까지 그 방법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음.
많지 않은 액수더라도 전체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
25. 서울연구원과 기술원 통폐합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여야 겠음. 필요한 적정 연구원 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점도 마련돼야 할 것.
26. 각 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구분이 잘 되어야겠음.
27.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간을 대기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청년층 신속히 임용하는 배려 필요.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포함) : 57건

1.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마련 관련)13년 만에 예산안이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 필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타 시·도(경기, 충남 등)와 비교해서 특별한 활동이 부재함
2.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전망 양상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마련 필요
3. (중장년 1인 미디어 교육 사업 관련)예비창업자의 자격요건에 프리랜서, 타 지자체 수상자는 제외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응모요건에 주의를 기하는 등 중장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공모 허점 보완 필요
4. (서울형 R&D 사업 관련)국가 R&D 예산이 16.6% 감액 편성된 것에 의한 서울시 영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 마련 필요
5. (스케일업 사업 관련)최근 경제위기로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스타트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초기 스타트업 위주로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시리즈 A~B 이상 단계의 기업도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함
6. 서울영화센터 건립 지연 관련 공사비, 감리비 증액과 이미 반영되었어야 할 자산취득비, 실내인테리어 비용 등의 과도한 증액에 대해 재검토 및 조치하기 바라며, 내년도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가칭)서울큐브 관련 공사 지연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기 바라며,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 시설로 추진하기 바람.
8.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중, 2022년에 특정 업체(쿠팡)에 채용된 인원 5명이 인턴 채용 직후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이유로 집단으로 이탈했는데, 원인을 검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9. 취업날개 서비스 연체료 부과 관련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인데 정장 대여기간(3박4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연체료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람.
- 지점별 연체료 부과 기준이 다른데, 통일된 기준 필요
- 면접 대여기간이 3박4일이 적정한지 검토 필요함
- 취업날개 지원 대상자를 청년만이 아닌 대상자 확대 필요

10.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에 졸업 이후 생존율을 포함해 사후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창업지원사업 종류가 다양한데 창업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제정책실이 해야 함.

11. 서울패션위크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추진 시 전문성 유지, 협찬·기부금 활용이 용이하였는데, 서울시 추진으로 인해 전문성이 미흡하고, 민간자본 수용에 한계가 있음. 관련 유관 협회와 협력도 미흡해 보임.

12. 동대문종합시장 4층에 입주한 패션허브 창업들 운영비와 임차료로 매년 2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창업들 입주기업 매출 실적은 마이너스임. 투입 대비 실적 전무한 상황이므로 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하기 바람.

13. 패션허브 사업이 본래 취지인 '동대문 패션상권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패션허브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 바람.

14. (창업허브 관련)퇴거한 업체들 생존율을 조사해 성과 평가에 반영해 주기 바람.

15. (파트너스하우스 관련)공관, 파트너스하우스 전체에 대한 명확한 관리 이원화 필요

16. 파트너스 하우스 행사 운영 목표 40회 대비 116건으로 초과 달성

한 것처럼 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기업투자 유치 지원 등에 비해 도시 외교 분야는 거의 보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 필요

17. 민간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행사 대행공간 전략, 폐쇄적 운영 우려.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필요
18. (서울형 강소기업 관리 관련)강소기업 협약 해지 기업 명단 공개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관리 필요
19. 강소기업 탐방 영상 등 재인증 탈락 기업이 여전히 강소기업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등 신뢰도 측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 존재. 개선 필요
20. 지원금을 받는 기업 수가 400여 개가 넘는 것에 비해 현장 점검은 표본 추출 통해 소규모만 진행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21년~'22년 노동법령 위반으로 협약 해지된 기업이 11개인데 이 기업들이 현장 점검 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불분명.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21. (새활용플라자 운영 관련)새활용플라자 운영 이원화로 입주 기업 등 이용자 불편 사항이 다수 발생(식당 미운영, 소재 은행/꿈꾸는 공장 예약 절차 등)
22.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3. 2022년 솔루션앵커가 생기고 나서 창업실적 건수가 전무하고, 예산 낭비가 심하므로 창업실적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정비하기 바람.
24. 솔루션앵커의 성과가 부족하므로 솔루션앵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추가 지원 또는 예산 삭감, 폐관 등을 검토하기 바람.
25. 봉제산업 솔루션앵커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점검 후 개선방안 조치하기 바람.

26.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2024년 5월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7.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지연으로 올해 편성된 로봇과학관 운영비 예산을 감추경했어야 함에도 불용처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8.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정원이 8명에 불과한데,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의 증원을 고려하기 바람.
29. 창업뜰 임차 및 비용지급 구조 개선바람.
30. 서울형 강소기업 재선정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시 정량평가에서 고용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아름다운 가게’는 평균임금도 낮고 퇴사율이 높는데 22년 재선정 되었음. 강소기업 중 유일하게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특혜가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 또한 18년도에 선정된 ‘예평이엔씨’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담합을 하였고, 채용비리 등이 있었던 기업인데 21년, 23년 재선정 되어 문제가 있음. 강소기업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조치바람.
31. 제조지원센터 지원사업 창업자 육성 실적이 거의 없고, 관성적 집행으로 보여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개선이 필요함.
32. 고립은둔청년 직업훈련 관련
- 기술교육원에서 고립은둔 청년 대상 교육 지원하라는 시장 요청사항이 있었음에도 고립은둔청년 고작 4명 참여해 참여자 저조함. 더 많은 인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책 수립 시 고려해주길 바람
33. 캠퍼스타운 운영 관련
- 서울시내 대학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대학이 없는 자치

구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기에 소외되어 있음. 특정 자치구에 여러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사업 수혜가 특정 자치구에 몰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사업추진 시 보다 정교한 설계가 있었으면 함

34. 캠퍼스타운 관련

- 대학이 타 자치구와 연계 사업 실적이 없었던 것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사업 개선이 필요함

35. 패션허브 관련

- 60억이 넘는 예산 중 동대문 지역상인 연계 및 참여지원 사업은 4억 가량에 불과하므로 향후 동대문 상인과 연계한 사업 확장 필요

36. 신산업분야(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관련 서울시의 비전 및 계획 설명

- 의대 정원 및 쏠림현상, 인력 유출, R&D 예산 삭감 등 바이오 관련 예산·인프라는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임.
- 중장기과제이나, 실적 위주의 단기과제로 도출되려는 경향이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함
- 시스템 바이오 같은 기초과학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람.

37.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관련

- 장애인기업활동지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위원회 운영이 미비함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기채납액 환수 독려 요청

38. '22년 재위탁 이후 선정된 서울핀테크랩 수탁업체가 회계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추후 재위탁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역량있는 업체를 선발하기 바람

- 핀테크랩 장소 공유오피스 통해 임차 중인 것으로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워크 멤버십이 아닌 직접 임대차계약으로 공간 확보 여부
- 위워크 파산위기 기사가 나왔는데 향후 대응 방안

39.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관련

- 서울형 생활임금을 꼭 줘야 하는 사유
-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40.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지속적인 불용 발생

- 집행잔액이 100억 이상 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41. 뉴딜매니저, 직원 근무 관련

- 뉴딜매니저를 따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음, 직원들도 오래 근무하지 않는 것도 조치 필요
- 정책 유용성 검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42. 서울푸처랩 관련

- 일평균 이용자가 51명. 온라인 예약자로 발생하는 노쇼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으로 전용한 문제 재발 방지 바람
-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 시정조치 바람

43. (외국인 투자 활성화 관련)시장의 ‘첨단기업이 몰리는 세계 5대도시 선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 투자유치 정책 중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필요한데, 외국기업이 서울에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예를 들면, 마곡에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필요

44. 투자유치 전문위원회 구성,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 다양한 상담노력 등 부족. 국내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강화는 있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는 없음.

45. 지방정부에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서울의 과밀화

규제 등 한계점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요청도 없었음. 이런 노력이 없이 투자유치 활성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46.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조달부터 협상전략 등 서울시 지방정부의 권한의 범위 및 한계 실태 파악하기를 바람. 부족하다면 서울연구원이나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결과물을 받아 투자유치 활성화 노력해주기 바람

47. (서울시 세입전망 및 예산편성 관련)서울시는 10.13. 일본기업 MN 인터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 MN인터패션은 미쓰이물산과 닛테츠물산의 5대5 지분을 가진 회사로 두 기업은 전범기업임.

48. 일본시장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동의하나 전범기업 검토없이 업무협약 체결한 것 문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철회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람

49.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준 개선 관련)서울창업허브 입주기준 개선. 서울창업허브 성수 등 창업지원 시설 입주 모집 시, 파트너스 추천 선발은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해당 사항이 공고되지 않음. 입주기업 선발시 투명성 결여 및 출발선의 불평등 문제 개선 필요.

50. 서울시 창업허브가 민간VC 파트너스 추천에만 의존해서 선발하는 것 문제. 상당한 투자를 받은 기업이 파트너스 추천을 통해 입주기업이 되면 나머지 일반기업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음. 출발선을 다르게 파트너스가 추천하는 곳은 일정 비율로 나머지 공간에 일반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성 측면을 고려해 입주기준에 대해 검토바람

51. 금융중심지 서울 조성 관련

- 법인세, 소득세 감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외국계 기업 유치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가?
- 국책은행 (한국은행, 기업은행), 대형은행 등 집적화 위해 여의도 이전 추진해달라

52. 청년취업사관학교 인력 및 운영체계 관련

- 성과가 큰 사업임에도 '계획 따로' '예산 따로' 탓에 사업 수행기관(SBA)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큼.
기획조정실과 사전 조율 필요.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인력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고정 운영비용 고려할 때 25개 자치구 모두에 조성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필요.
-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착된 후 SBA의 계속 운영 여부 및 전문교육 기관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SBA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53. (국제)영화제 지원사업 관련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로서, 소규모라도 국제영화제에 대한 육성 및 관리 계획을 세울 것.
- 한강 관광자원을 활용해 서울시가 직접 한강수변영화제 기획해보면 어떤지 제안.

54.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관련

- 요즘은 여성 기업인들이 제대로 선정하려하면 많이 있음 여성기업 지원위원회를 기업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뒀
폐단은 골라내고 제대로갈 수 있도록 조치바람.

55. 도시형 소공인 성장 기반 확충 관련

- 성수동 제조산업 허브, 디자인과 달리 창고로 사용되거나 비어있음, 설치된 장비의 입지에도 문제가 있음.

56. 서울형 강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 기업 육아휴직 비율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지?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강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람.

57. SBA 해외사업 관련

- 서울시의회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 고민 바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품물시장,**

먹거리창업센터 포함): 41건

1.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관련)전통시장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와 협업으로 진행되어 가입자가 많은데, 화재공제보험도 타 시·도 사례 등과 비교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검토 바람
2. 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기 바람.
3. 품물시장 불법 임의증축에 대한 철거기간 동안 상인들이 영업중지 기간동안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
4.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백상에서 무방비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올해 안으로 품물시장 관리 소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서울품물시장)현재, 품물시장 보수공사가 당초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였으나 공사 완료기간이 계속 미뤄지고 있음.
7. 이로 인해 상인들이 시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텐데 어떻게 책임을 질건지?

8. (서울풍물시장)16년도 위수탁협약서, 17년도 위수탁협약서를 비교해볼 때 백상의 주요 업무는 시설관리 업무임에도 17년도 협약 체결당시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등 서울시가 기존에 해야할 업무를 백상에 떠넘김. 이는 갑질이라고 생각함
9. (서울풍물시장)풍물시장이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지 확보가 필요함. 답은 현장에 있음.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부지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마련이 필요
10. 풍물시장 위탁 시 백상과의 계약관계를 보면 시설물 관리로 위탁을 받겠다 했음에도 운영 부분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한 건 책임 떠넘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11. 관리실이라든지, 전통 체험관이 외부로 나오게 될 경우 건폐율이 초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함
12.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서울신용보증재단 '24년 출연금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금액보다 50% 넘게 삭감 편성된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저해하는 것임. 출연동의 요구 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의 증감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요구하여야 함
13. (사회적경제 기업)서울시 사회적경제 3.0 정책에는 그동안 방만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이 다수 감액되거나 폐지되었지만 앞으로도 같은 정책적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생력 있고 실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재정립해주시기 바람
14. 서울풍물시장 점포에 대한 관리비, 사용료 체납시 지속적인 조치 필요
15. 서울풍물시장 폐점시간이 7시인데 여러 이유로 문을 닫는 점포가 많음 폐점 시간 변경 등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조치 필요

16. 서울풍물시장 주변에서 노점 영업으로 인해 주차난, 소음, 통행혼잡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
17. 풍물시장 관련, 전대부분 자료가 미흡함. 551명 중 283명이 전대를 통해 명의를 변경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추정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백상이 면밀히 확인하여 검토해주길 바람
18. (착한가격업소 관련)착한가격업소 관련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과정 필요함
19. 착한가격업소 서울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최신화 등을 위해 업소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바람.
20.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시 여러 부서의 다양한 정책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고민 바람.
21. (사회적기업 관련)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므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통합을 계기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바람.
22. 서울풍물시장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했는데, 이에 대해 백상에 페널티 등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음. 향후 페널티 부여 방안 마련하기 바람.
23. 서울풍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서울풍물시장의 불법 임의증축에 대해 서울시는 백상이 배상하게 하기 바람.
25. 서울풍물시장 9개동 무허가 건물 신축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바람.
2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기 바람.

27. 직원 격려를 위한 명절 선물 구매시 카드 분할 결제 사용이 확인됐는데, 동일 업체에 대한 분할 결제 방식은 적절치 않음.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시 분할 사용을 지양하기 바람.
28. 위탁협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약서상 책임있는 제3자의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백상에서 시에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백상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바람.
29. 전태일기념관, 노동권익센터, 사경센터 등 수탁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음.
- 인건비 관련하여 기본급은 정해진 것이겠지만 수당 부분은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보임.
 - 사업내용이 부실해 보이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 챙겨봐 주시기 바람.
3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수당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음. 시정조치 바람.
31.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전수조사 및 환수조치 필요.
32. 특정 사회적기업에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거나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 규모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부분 시정조치 바람
33.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근황과 대학에서 재정부담 증가하는데 이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4.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보수비를 사용 주체인 지역구보다 소유주인 서울시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35. 풍물시장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잘 관리되어 있는데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 같음. 활용도를 더 높여주실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바람

36.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협상 중인 비즈플레이는 웹캐시의 자회사이며, 웹캐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은 회사이므로 조치 필요
- 2022년 행감 지적된 문제였는데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자료만 내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문제 있는 회사 자회사가 들어오게 된 것 지금이라도 시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37.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이 기존 시설현대화나 특성화시장 같은 사업과 중복되는 요소가 있음
- 전통시장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38. (위원회 관련)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위원회가 24개가 존재함.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노동안전분과위원회, 가사노동분과위원회, 서울형 입원생활비 위원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위원회 등 노동권익과 관련된 위원회는 모두 상설위원회임. 노동권익과 관련된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음. 25개 위원회중 23년에 개최된 것은 7개밖에 안됨. 모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개최가 되고 있지 않음. 빠른 시정 조치 바람
39. (노동단체 지원 사업 관련)24년도 서울노총 지원 예산안 3.5억 삭감하여 10.5억원임. 이미 올해 예산을 17억에서 14억으로 감액하고 내년에도 예산안을 삭감해서 2024년 예산은 21년도 예산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학자금 부정수급 문제가 없었고 워크숍 등 예산도 결국 서울시민 중에서도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가 노동자를 위한 사업에 더 많은 힘을 쏟아 줄 것.
40.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중인지 확인이 어려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보급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주

기적 개선방안 필요

41.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온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음. 전통시장 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가 됨.
- 길거리·골목상권은 복합적이므로 시설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요즘 세대에 맞는 활성화 지원책을 찾아야 할 것임.
- MZ세대의 관심사에 맞춘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필요함.
야간문화 활성화, 먹거리 전통시장 등 복합개발해야 MZ세대가 찾는 명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영등포 앞 상권이 침체되어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먹자골목이 혼재된 지역 특성 상 이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시도가 될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 11건

1. 명예교수 임용 자격규정을 총장·부총장 등 재임시 본인을 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 임용규정 검토 후 필요시 조치하기 바람.
2.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균열은 물론 준공되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이 아닌 동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3. 생활관 택배 분류를 택배 회사별 분류가 아닌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물품이 잘 정리정돈 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4. 5년간 건물 방수공사 11건을 같은 업체가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쪼개기 수의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절차 의혹과 부실공사도 의심됨. 시정하여 결과 보고하기 바람

5. 시험기간 중 도서관 앞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가 미흡한 부분
시정하여 시립대 제로캠퍼스 사업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6. 청렴도 평가 개선을 위해 교내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등을 적극 활
용해 청렴도 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7.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가 허술하여 망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
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19년도 기자재 망실관
련 사안 재검토 후 보고바람
8. 일반대학원 장학금이 전일제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 바람
9. 시립대에서 평양 전시회 연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예산 편성 시
이런 항목 반영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바람
10. 서울시 출신 학생들 장학금 혜택이 여전히 부족해 보임. 규정 개
정 추진이 필요함
 - 시장 장학금이나 복지장학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1. 임 모 교수 관련
 - 교수 겸직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교직원 전수조사하여 인사·복무규정 위반행위 근절할 것

☐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17건**

1. (안전성 검사 관련)잔류 농약,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전문인력이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2. 미등록 물류장비가 없도록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기 바람.
3. 도매시장법인이 유통 시스템 및 시설투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
극 나설 수 있도록 공사에서 유도해 주기 바람.

4. 현대화사업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기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의 주된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의 물량공급 불안정'인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급식에도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다품종 소량물량 공급 관련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하역노조의 부당한 근로계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7. 도매시장 경매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8. 강서시장 분쟁 관련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제 전용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강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을 가락시장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대아청과 품목 제한 해제에 대해 적극 추진하기 바람.
10. 복리후생 점검 가이드라인 위반사항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람
11. 현대화사업 채소2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꼭 완료해서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2.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관련 제주도 출하자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경써주시기 바람
13. 강서시장 쓰레기 무단투기 구조적으로 해결 방법 마련 필요함
14. 현대화 사업 관련
 - 신축건물 이전 관련 유통인들의 무리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
 - 채소2동 공기지연 불가피한 측면 있으나, 입주대상 유통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 완공과 유통인 입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
15.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관련 제주 지역 출하자 반대가 있는 것 같

은데, 소통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6.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운영 관련)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운영이 정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7. (재무관리 관련)부채중점관리 계획을 재무부채관리계획으로 관리하는데, 부채 관리 목표가 연도별로 상이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목표 수립이 필요함

☐ 서울연구원 : 12건

1. 기술연구원 장애인 채용률이 0%인데, 통합연구원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노력해 주기 바람.
2. 서울연구원의 연구가 시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좀 더 면밀히 파악 해주길 바람.
3.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누락하거나 부실한 일상감사 시행,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일상감사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해주길 바람.
4. 연구과제 활용도조사가 추상적이고 정형화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설문문항 및 조사방법을 보완하기 바람.
5.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한 '서울도시연구'의 등재지 승격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안에 등재지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6. 시책 업무추진비로 타 지자체 경조사에 화환 비용을 집행한 내역이 보임. 향후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기바람.
7. 선택적복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등 복무제도 관련 개선 지적사항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8.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시책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9. 최근 중장기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요즘 바이오나 ai 쪽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거나 이룰 수는 없으므로 단기적인 과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10. 연구직 재임용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평가 및 재임용 구체적인 기준을 고민하고 보완 바람.
 - 실적 등급별로 세부적인 평가 등급이 있어야 함.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재임용에 대한 명분이 있을 것임
11. ESG 경영 관련
 - 서울연구원 차원의 ESG 경영 가치 확산을 위한 서울연구원 고유 전략 필요.
12. 장애인 고용 관련
 -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용보험 납부로 대신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 전형의 개선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 개발하려는 노력 등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

☐ 서울경제진흥원 : 18건

1. 코로나19 종식으로 F&B 창업 트렌드 변화하는 상황 고려해 공유 주방 이용현황 감소에 대한 개선 및 대책 필요
2. 2018년 창업허브 퇴거 기업 84곳 중 42곳이 5년 만에 폐업하였

음. 창업허브 졸업기업에 대한 생존률 및 폐업률 관리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3. (국제유통센터 관련)국제유통센터의 글로벌 커머스 파크 전환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필요
4. 국제유통센터 입주 조건 및 퇴거 업체들 반발에 대한 관련 대책 필요
5. 근로시간 면제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규정을 명확히 하기 바람.
6. 서울콘에 섭외되는 인플루언서들의 범죄 경력 및 우리나라의 윤리적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을 검증해야 하며, 서울콘이나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7. SBA 사업부문(국제유통센터 및 서울메이드스트리트 운영) 등 감사 필요
 - 국제유통센터 및 서울메이드스트리트 운영 관련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및 감사요구
8. 서울형 R&D 사업 국가 규제나 지원사업 위축 시 관련 대안책 마련 필요
9. 디지털 규제 관련하여 역동적인 방향들을 SBA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 바람
10. 서울콘 관련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인플루언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11. 서울콘 인플루언서 프라이빗 네트워킹 및 공연 관련 소음 발생 및 질서 관리 필요
12. 진흥원 SNS채널 관련 해서 기관홍보 연계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통합이 필요함
13. 로봇기술지원모집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공고절차

기준 등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으면 함

14. 콘텐츠 IP 뉴폼 사업화 개발지원사업 관련 명의도용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바람
15. (경영실적 관련 관련)경영실적을 운영에 맞게끔 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니까 24기와 25기를 비교해보니 임대수입에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16. 사업외비용 중 기부금 관련 6억 4,500만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모집되고 지출이 된 것으로 결산처리 되었는데 재무제표에는 기부금 1억 6,900만 잡혀있음. 이 과정은 왜 이렇게 됐는지?
17.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 절차 관련)성수 창업허브에 신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없는 수백억 이상의 해외,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수백억의 매출을 달성한 중견기업급 기업이 입주해있음. 뿐만 아니라 서울시 외 타 지역에 본사와 주요사무소를 두거나, 사업목적이 타 지방 경제활성화가 목표인 기업이 입주해 있음. 서울시 창업입주 시설에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는 것은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18.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절차에 있어서 초기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전반적인 정책방향 고민 필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 13건

1. 급증하고 있는 대위변제 금액과 급감하고 있는 채권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2. 골목창업학교 사업이 서울경제진흥원의 키친인큐베이터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 우려됨.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유사 사업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기술 교환 등 협업 통해 중복 사업에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바람.

3. 경기악화로 인해 대위변제율이 증가하고 있음. 집중적인 채권관리 노력으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4.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운용배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노동이사 업무추진비가 근거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바람
6. 복리후생제도 점검에서 서울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지적사항 있었음.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7. 정원 조정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인사·경영권 침해 소지 있는 단협조항 개선바람
8. 대출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 대위변제 비율 높아진 것에 대한 대책마련 바람
9. 대외 환경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출연금 확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출연금 확보 계획 마련 필요
10. 경기 불확실성 확대를 감안, 위기대응을 위한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 준비 바람
11.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 구상권 관리 관련 착오 방지 방안을 강구 바람.
 - 수기 작업이 아닌 업무 자동 시스템(예: 대위변제 채무 관련 업무 서비스 등) 개발 필요하므로 계획 잡아서 보고 바람
12. 대위변제 증가 관련
 - 코로나 이후 다중채무자 비율이 증가 중임. 중복보증 비율이 여전히 위험 요인임.
 - 중복 보증지원 비중 감소방안을 검토 바람.
13. 보증 전 사전채무 조정 관련
 - 모델 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큼
 - 신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올바른 금융 상식을 가지고 경제활동

에 나설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 관련 금융 교육 필요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 17건

1. (인력 확충 관련)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고 성장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급여 및 인사 관리 체계임. 시정 필요
2. (기획공모 사업 관련)사실상의 단체별 고유사업들이 몇 년에 걸쳐 계속 선정하거나 동일 사업을 2년에 걸쳐 나눠 발주한 것 같은 부적절 사례 우려 있음. 선정 투명성 확보 필요
3. (주얼리 혁신성장 패키지 사업 관련)설립연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리해 선발했는데 예비~3년 미만 그룹에 대한 배려 및 독려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4. 올해 들어 센터의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비정규직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증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종로 외 자치구에도 주얼리 관련 홍보를 충분히 진행하기 바람.
6.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사들의 매출 실적이 실제 주얼리 센터 통해서 일어난 매출인지?
7. 주얼리센터를 통해서 전인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 멘토링 데이 참여자의 구성은
8. 주얼리센터 지원하는 감정의 범위와 공신력은?
 - 주얼리센터에서 하는 감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감정은 금액 등 가치를 확인하는 것인데 감정지원이 공신력이 없는데 필요한 것인지?
9. 일반시민, 사업자, 수출업자 중 전체 사업수혜 비중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10. 기존 실적대비 사업별 목표치가 항상 낮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전년도와 유사한 지표인데도 달성 대비 다음연도 목표치가 낮은 부분이 있음
11. KS링봉 게이지 보급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 링봉게이지는 표준화 되어 있어 모든 공장이 동일 규격을 지니고 있기에 개별 소비자에게 배포해야 할 이유가 없음
12. 간이사업자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간이사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센터에서 구매 또는 임대 중인 감정장비의 내구연한이 대부분 1년 미만이므로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장비 구매 및 임대 방안 마련하기 바람.
14. 해외 명품 예물을 선호하는 트렌드 등으로 인해 종로귀금속 거리 쇠퇴하고 있는데,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15. 센터 접근성이 낮는데 굳이 1,2관을 나누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바람
16. 기획전 방문객 수와 판매수익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 고민 필요
17. 주얼리지원센터를 15개 주얼리 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데 독점 위험성 있음
 -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임대방식, 용역방식 등에 대한 검토 후 보고 바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2건**

1. 올해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은데,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마을기업 지원 과정에서 마을기업 취지에 부적합한 곳은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함께누리몰/캐빈닷넷 운영 관련)2022년 분리 운영을 실시했으

나 두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고 성과 저조. 함께누리몰의 경우, 작년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만 못한 운영. 근본적인 대안 고민 바람

4.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예산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협동조합지원센터와의 통합 절차를 잘 마무리해주고 통합 후 운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 비율 높은 부분 개선하기 바람
7.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전수조사 및 환수조치 필요
8. 특정 사회적기업에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거나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 규모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부분 시정조치 바람
9. 애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용 등 최소화하고 예산 수립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기를 바람
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원 관련)서울시의 센터 민간위탁 공고의 고용승계 25%는 너무 낮은 수준임. 내년도 정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만 고용승계되면 사업의 안정성과 고용불안으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11. 새로운 수탁법인은 간부급을 5명을 제외한 10명이 고용승계가 되어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봄. 내년도 고용승계 인원을 현원 기준 40%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봄. 소관부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12.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목적임.
현재 사업 취지와 상반되는 상황이 많음.

4. 환경수자원위원회

----- 144건

기후환경본부 : 19건

1. 기후환경본부 통계 자료의 오류 및 부실 문제 해결 및 철저한 관리 대책 요구.
2. 소규모세탁소 친환경세탁기 시범 보급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적재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
3. 대행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이 자치구 조례 개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절히 조치할 것.
4.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비정상 가동률이 매우 높은바 현장점검 등 개선 후 보고 할 것.
5.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대상 기업 선정 절차 등 서울시가 직접 참여를 통해 사업효과 제고 할 것.
6.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은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7. 배달앱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예산 중복지원 여지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8.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 공모 관련 일부 대학·교수의 중복 수행 및 평가 기준 등 점검 필요.

9. 무단투기 단속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종료 또는 개선 등을 검토할 것.
10. 차량정비센터 정비공사건 내역서 기초산출조사 오류 존재. 공사계약 시 내역 등을 정확히 하기 바람.
11.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 다소비 단체 관리 부실.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임.
12.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육 자료 현행화(리뉴얼) 시행할 것.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감사 지적 및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기준점 이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운영 능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탁 업체 선정 후에는 철저히 감독하여 감사 지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4.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사용처를 부과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5. 민간 운영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모빌리티 사업자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더 비싸게 부과되므로, 환경부 카드 요금과 동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16. 에너지플러스사업의 사업비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17. 노후주택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이전인 5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
18. 원활한 기후예산제의 추진을 위한 작성기준 구체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기관)의 운영 정상화 추진, 기획조정실의 적극적 참여방안 마련할 것.
19. 다회용컵 회수기 설치·운영 관련 철저한 관리와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절한 추진 필요.

푸른도시여가국 등 : 54건

[푸른도시여가국] : 34건

1. 본청 및 여가센터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해서는 연초에 교육 이수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
2. 유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시행 철저히 할 것.
3. 공원 내 전동카트 운전 시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일반차량과 마주치는 주차장 등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되도록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별도로 이와 같은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임.
4. 경춘선 숲길 공원 노후 전동카트 교체 등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람.
5. 공원별 주차장의 월정기권 금액, 면수 등이 모두 상이하며, 북서울꿈의숲 등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월정기권 주차로 인해 일반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현상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북서울꿈의숲 월정기권이 50% 발생인데 과다하다 판단되며, 특히 대형차량 면수는 50% 넘어서 해당 면수보다도 더 많은 월정기권을 발행한 것은 시정조치할 것.
7. 각 업체별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말이라도 월정기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8.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관련하여 토지소유주와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부터 토지 소유주와 대화를 많이 하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임. 향후 소송 없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
9.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업신청, 설계심의, 예산교부, 준공결과 제출 등 전체 행정절차상 대상지 위치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대상지 주소와 위치도를 표기하여 정확성을 기할 것.
10. 등산로 등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대한 활동 개선 바라며, 법정 탐방로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써 줄 것.
11. ‘보라매공원 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설계공모’에 당선된 위원이 해당건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하고, 회의록을 보면 해당 위원이 회피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를 하지만 않을 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심의에 간섭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도록 개선해 줄 것.
12. ‘북서울꿈의숲 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은 이전 ‘보라매공원 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설계공모’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전 과정에 참석하여 1위작의 설계내용을 보았으나, 동일사업에서 다른 대상지 설

제공모에 참여한 것은 사업정보의 접근성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공정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써 대책과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

1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적감소 사유 및 사업 관리 철저히 할 것 .
14.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공원여가센터의 사용수익허가 조건 미준수 경우가 있고,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적 등이 많은데 조치 할 것 .
15. 중랑캠핑숲의 캠핑장에 특히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많아 관리가 부실하고, 연초에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 소홀로 판단되며, 공원 내 사고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태도 개선할 것.
16. 중랑캠핑숲의 경우 가족캠핑장과 청소년체험의숲을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는데, 해당업체가 적자가 나는 체험의숲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무기한 운영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운영이라 판단되고, 적자라서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청소년 체험의숲에 대해 사용료 감면까지 해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할 것.
17. 푸른도시여가국 입장에서라도 객관화되고 수량화된 평가지표를 준비하여, 서울로 7017 존치 등에 대한 재검토 할 것.
18.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점검도 연2회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점검실적도 부진하고, 동의안 제출시기도 늦었으므로 조치할 것.
19. 자원봉사 활동 및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이 매우 낮음.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물품의 가격단가가 센터별로 다르므로 확인하기 바라며, 참여현황, 일지 관리 철저히 할 것.

20. 공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시설물 관리상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의 부주의가 많음. 앞으로 영조물 사고 조사시 철저히 조사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21. 민관협력 추진사업 많이 있지만, 동행서울을 홍보하려는 서울시 총괄 시민협력과에 우수사례로 제출된 자료는 몇 건되지 않아 적극 홍보할 것.
22. 민관협력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의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것.
23. 보통 B TO B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의 우수한 단체들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할 것.
24. 기부심사 수행건수 및 기부심사명, 내용이 행감제출자료마다 차이있어 실적관리에 유념할 것. 특히, 기부심사 받았는지, 기부에 대한 공문서 기록, 기부물품, 가액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
25. 암사역사공원 조성이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게 노력바람. 특히, 공원 초입에 있는 대상지는 우선 추진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 보상이 늦어지면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토지보상가가 상승하여 재정 부담도 커짐. 적극적인 노력 할 것.
26. 멧돼지 포획 관련 총기 오인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주도하여 관리감독 철저히(멧돼지 포획) 할 것.
27.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수종변경시 도시숲 심의가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28. 총 45개 공원 주차장 중복 결정 중에 어린이공원이 22개인데 과도하며, 어린이

안전 등 문제 우려가 있음.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주 출입구가 주차장과 가까워 동선 분리 등 안전조치 할 것.

29.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 설치시 중복결정 내부기준 면적을 넘는 곳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지상에 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있어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 중인지 검토할 것.
30. 이촌동, 개봉동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보상이 너무 과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상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것.
31. 동물보호과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편입된 이후 유기동물보호 예산은 증가했으나 동물구조실적이 줄어들었고, 19년보다 안락사 비율이 높아지며, 분양비율은 감소됨. 동물보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할 것.
32. 22년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추경으로 편성된 1억2천만원 중 55백만원을 반려견 임시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관련 사업 시행 전 수요 파악을 확실히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
33. 임시 펫반려견 쉼터 관련 2달 사용하는 시설에 과한 예산 사용했으며, 지속 사용 가능한 시설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34. 맹꽂이차량에 문이 없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현행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되니 조정 검토할 것.

[서울대공원] : 20건

1. 코끼리 열차와 전기카트의 충돌 사고 등 여러 건의 사고가 있어, 일반차량과 마주치는 도로에서는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등 전기카트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할 것.

2. 서울플래닛 방만한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체납까지 발생하여 계약해지까지 검토했지만, 이후 업체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여 철회한 적이 있는데, 기반시설 공사를 서울대공원에서 해준 것은 일종의 특혜를 준 소지가 있으며, 또한 당시 업체측의 체납과 무책임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면 혜택을 체납액에 상당하는 수준만큼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운영의지가 없음에도 시설공사를 서울대공원이 해주었고, 코로나로 인한 사용료 감면까지 해주었으나 올해 또다시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업체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정조치할 것
3.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이후(2021년) 요금 감면에 대한 불편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대공원이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할 것.
4.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시 ‘스마트주차장’으로 입출차 자동을 조건으로 공고하고 해당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이후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자동감면시스템 도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함.
5. 자동감면시스템 도입이 5천만원으로 가능한지, 시스템 도입 시 출구마다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6. 지난해 침팬지 반출계획을 시장보고까지 마쳤지만 실제 추진 중 인도네시아 측과 검역과정에서 계약업체의 포기로 최종 반출이 불발된 것은 서울대공원의 행정부실로 인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향후 동물복지 차원에서 침팬지 반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그 전에는 건강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7. 종합안내소 입찰(매직플로우)시 입찰공고 나기 일주일 전 만들어진 신생회사가 참여하였는데 경력이 없음에도 낙찰이 되어 잘 운영될 것인지 확인할 것
8. 대형주차장 공고시에는 세부조건을 많이 추가하는 등 다른 입찰공고와 다르게 재원 조달에 대한 자격을 두고, 입찰참가자격에 신용등급을 BB: 이상으로 정했는데 참여업체의 등급과 같은 건 의문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 입찰을 할 때 통일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올릴 것.
9. 시베리아 호랑이가 2마리 폐사하는 등 서울대공원의 동물들이 평균수명을 못채우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멸종위기종 동물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동물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
10. 서울대공원 캠핑장 주차장 토지가 국립현대미술관과 나누어져 있는데 사용수익허가를 한 곳이 내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 검토할 것.(현대미술관에서 공고를 내고, 그쪽에서 요금인상을 논의했는데 서울대공원이 책임자가 아니라 적극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11. 캠핑장 주차요금 인상 후 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는 적용됐으나, 서울대공원에는 몇 달 동안 반영이 안되었으니 수정할 것.
12. 현대미술관 측에서 정기 주차 대수가 너무 많아서 캠핑장 이용객이 이용하는 면수가 적은 문제를 개선 할 것.
13. 주차면수가 너무 적어서 입출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 측에서는 캠핑장 주차장이 아닌 대형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이에 더해 사설 카트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바, 사용수익허가 조건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확인할 것.

14. 캠핑장 주차장 업체의 사용료 체납이 있으니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 할 것 .
15. 테마파크는 전략적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나, 전략, 홍보가 부재.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온라인 홍보 매체의 구독자 수 증가 미미(홍보경쟁력 저하는 시설 경쟁력 저하로 직결됨).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하나 실효성 없음. 적극적인 전략홍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코끼리열차 이용 시 위생상태, 직원 불친절, 유아차 이용 불편함 등 민원이 많으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17. 코끼리 열차가 경유차로 매년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는 바 전기차(저상버스)나 전기카트 등의 친환경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 할 것.
18. 시베리아호랑이 사망에 대한 병리학적 소견서의 신뢰성이 떨어짐. MOU 체결, 자문위원 구성 등 신경써서 관리할 것
19. 동물 수급 계획을 서울대공원 내부적으로 수립하지 말고, 제대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바람.
20. 사용수익허시시설을 동일 업체나 개인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입찰예정가격이 전보다 낮아진 경우가 있음. 사용료 감면, 입찰예정가 설정 등 좀 더 주의해서 추진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19건

1. 새로운 내용을 가미한 차별성 있는 홍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최근 몇 년간 슬러지 처리 용역이 특정업체 가 독과점 선정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예 :정수센터 2~3곳을 묶어서 입찰)을 마련할 것.
3.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CI 디자인으로 수정·보완할 것.
4.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품질확보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불신 등이 만연해, 음용률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
5. 금년도 신규사업인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사업이 참여업체 기술부족 사유로 중단된 바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절차 과정에서 사업 가능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6. 시계 외 지역 배수지 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해당 현안 등을 충실히 작성할 것.
8. 일부 직원의 관사 장기거주 등이 확인되어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구의정수장 관사 폐쇄 조치도 함께 고려할 것.
9. 상수도관 교체, 물세척 등 주요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 내년도에는 조기 집행 등 사업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
10.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체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가 큰 폭으로 발생,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11. '17년 우수율 방침서의 목표가 '22년도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 장기 목표 수립을 마련할 것.
12. 누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원인자 누수 발생 저감을 위해 원인자에게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관리자 교육 이수 저조 등 저수조 관리 미흡 발생에 따라 보다 해당 사업소에서 적극 감시·감독을 통해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4. 내년도 아리수데이, 아리수트릭 등 아리수 홍보 행사시에는 일회성, 플라스틱 컵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5. 스마트 계량기 하자보수에 대해 납품업체가 유지관리까지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과 유지관리를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일반회계 미보전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추후 보전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안정성 강화에 힘쓸 것.
17.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수도계량기 등 수도 자재 관리가 상당부분 방치됨에 따라 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8. 아리수본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CI 디자인이 부합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수정·보완할 것.
19. 클린닥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대상에 소외계층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추진시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강화와 홍보에도 힘쓸 것.

미래한강본부 : 32건

1.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뚝섬 2호점 리모델링 차질 없이 추진할 것.
2.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에 2인승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가 더 많이 구비되도록 노력해 볼 것.
3.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공사 지연이 계속되지 않도록 잔여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되, 추후 구상권 청구 등 추가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한강본부에서 철저히 관리할 것.
4. 한강공원 매점 반포 2호점 공고 철회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법률 자문 등 결과까지 모두 검토하여 이후 절차를 잘 진행할 것.
5.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공사 지연 문제는 부실 공사가 최종 원인일 텐데, 그 원인이 시공사 등 공사 주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주체에도 있을 것임. 결국 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6. 한강공원 내 매점 판매가가 시중 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시민에게 부담 전가가 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7. 노르웨이, 울산 태화호 사례처럼 도입 예정인 리버버스도 친환경 선박인 전기배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업비에 관한 책임 규명(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을 확실히 할 것.

9. 조성 중인 뚝섬 자벌레 키즈카페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미래한강본부라고 생각하지 않음. 또한 뚝섬한강공원 반경 1km 이내 5개의 키즈카페가 있는데도 현재 위치에 운영하게 되면 주변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서울형 키즈카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위치를 고려할 것.
10. 서울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미래한강본부가 5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임. 내부에서 나온 내용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
11. 한강공원 매점 여의도 3,4호점의 경우 운영자가 운영 포기하기 전부터 사 용허가 미납액이 상당한데, 포기 전 유지 기간 내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할 것.
12. 해빙기 체육시설 안전 점검의 경우,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는데, 23 년도에만 늦어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기에 시행할 것.
13. 또한 CCTV 유지관리 점검일지 및 고장처리보고서 내용을 보니 내용이 불일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14. 올해 이미 발표하거나 강조했던 내용과 달리 리버버스 노선 변경을 고려 한다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착장 조성 시 한강 유역환경청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제대로 하여 수상레포츠센터 같은 지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할 것.
15.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의 경우, 공모 당선작은 당초 제안 모델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다시 예산안에 반영하고 싶다면 전면적인 재검토 할 것.

16.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음. 단속 문제에 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17. 한강공원에서 규모가 있는 행사나 공연 시 소음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속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18. 수상택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대중교통용이 아닌 레저·관광용 등으로 확실히 변경 운영 검토할 것.
19. 노점상 단속의 경우, 단속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용수익허가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0. 수상레저활동 안전제도 및 단속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면, 의외로 금액이 적지 않음. 이를 해결할 만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21. 주요 시설들이 전체 한강공원 중 일부에만 집중되고 있음. 지역 간 균형 안배 할 것.
22. 공공예약시스템 이용시 단체들 집중예약으로 오히려 개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 할 것.
23. 부모, 아이들이 함께 많이 오는 창의 놀이터와 같은 시설의 활성화 할 것.
24. 슈퍼트리 공모1등 당선작은 계단 등으로 인하여 약자와의 동행 측면에서 공감미 되지 않고,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

출됨으로 다른 곳 설치를 검토 할 것.

25. 병해충(미국흰불나방) 문제의 경우, 푸른도시국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방제 대책 추진 할 것.
26. 밤섬 람사르 습지 생태 유지관리 철저히 하고, 리버버스, 수상택시, 유람선 등 운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할 것.(운행 이격거리, 소음 등 지침 마련)
27. 한강공원 화장실 월 1회 현장 점검해도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없음. 그러나 접근이 쉬운 공공화장실로 불법 촬영 위험성 높으므로 안전 관리 매뉴얼 필요함. 불법 촬영기 간이 검사기가 아닌 불법 촬영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 검토할 것.
28. 한강공원 홈페이지는 언어(영어 외 외국어) 변경 불가, 유사한 썸네일 등 획일적인 유튜브 내용 등 현재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상으로 홍보 관리 개선할 것.
29. 위치기반 정보 안내 서비스 ‘어디야 한강?’ 앱 있으나 올해 서비스 종료 예정이므로 웹/모바일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시행할 것.
30. 슈퍼트리 공모 당선작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므로 재검토 할 것.
31. 수상택시 사업을 계속 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마련 할 것.
32. 리버버스 선박의 감가상각 기간 15년 재검토 및 관광용 운영 용도·시간 대별 요금 차별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20건

1. 서남 2단계 건설의 적기 추진과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서남 2단계 건설사업 부지 선정 반대 입장인 강서구청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쓸 것.
3. 주민협의회 구성 시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차후에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것.
4.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대상이 公社 추진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 해당 부분에 대한 내부 감사 추진할 것.
5. 기부 관련 절차 및 제도 등 시스템을 정비할 것.
6. GS파워와 수열량 공급계약(20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7.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곡지역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8.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충전중단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
9. OS 운영체계 오류에 따른 전기차 충전중단 발생을 개선할 것.
10. 올해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 적극 행정과 사업관리 강화에 힘쓸 것.
11.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여주 태양광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

12. 에너지복지 수혜자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3.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가족수당 부정 수급건은 차질 없이 환수하고, 용역 감독자 수당 지급은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4. 公社 공용 차량 중, 최근 경유 차량 구매 실적이 나타나, 차후 친환경 차량 구매 등 친환경 차량 보유에 힘쓸 것.
15. 公社 재정악화에도 사장관용차량이 이외에 임원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실적이 확인, 이를 시정할 것.
16. 타 지장물에 의한 열수송관 사고의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
17. 질소산화물 처리에 필요한 요소수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요소수 대란에 대비할 것.
18. 지방공기업법 제64조 3항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의회 보고 시점을 철저히 준수할 것.
19. 대륜발전 열연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와 수열단가 협상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20.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를 이전할 것.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96건

☐ 대변인 : 11건

1. 특근 매식비 지출 시 초과근무 등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할 것
2. 국외출장 관련 비용 지출 시 법인카드를 사용할 사안이 아니라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로 진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3. 공무국외출장 관련 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정산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예산 지출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수행하기 바람
4.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5. 해외 언론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함. 특히, 현직이 아닌 간부에 관한 직급이 잘못된 보도 사례처럼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6. 외신 인터뷰 건수가 실제보다 보고한 건수가 적은 사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외신 보도 건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 필요함
7. 뉴스 저작권 구매 기준이 무엇이며, 조선일보는 비출입사임에도 구매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통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8. 서울시 입장을 왜곡한 보도, 이를 해소하고자 배포한 해명자료를 비판하는 편향적 언론사 보도에 대한 추가 대응이 소홀함. 서울시 출연기관 및 서울시 부서의 입장과 다른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및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9. 지역구 민원관련 왜곡된 보도 배포(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등)는 시와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추후 해명자료를 보도할 때 신중히 배포하기 바람
10. 시정의 글로벌 확산 및 전략적 외신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프레스투어 및 현장 취재 기자들의 참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신과의 소통 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11. 국외여비 지출 내역관련 별도 송부로 기입되어 있는 등 자료제출 시 충분하고 적절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음바 의회의 요구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함

□ 홍보기획관 : 18건

1. 이번 서울시 각 실국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신규 브랜드 표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신규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방법론이 부족해 보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시 공식 유튜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젊은층이 공감하고 시민이 즐겁게 보는 유튜브를 만들어야 할 것
3. 서울시가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기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발의기간을 놓치고 의회에 요청한 것은 면피성으로 보이며, 시의회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요청해야 할 것임
4. 시정 정기여론조사 중 목적과 다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홍보기획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업 축소와 관련 변경계약을 통해 당초 계약금을 낮추는 것 등은 자칫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음. 행감 자료로 제출된 자료와 나라장터에 게시된 3월 작성된 과업지시서 자료가 과업에 대한 내용이 다른 바 문제소지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한 확인 후 보고 필요하며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5. TBS 관련 공문서 생산실적이 저조한데 지원대책과 노력한 부분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음
6. 신규 브랜드 개발 용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 비슷한 과업 시 효율적 집행 필요
7.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국어학 전공자 또는 서울시정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 선정 필요
8. TBS 폐지조례 발의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정방송과 독립경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6개월 연장 요청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임
 - TBS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시의회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님
9.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후 시행만이 남은 상황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연기 요청을 한 행위는 의회 결정을 기만한 행동임. 또한, 홍보기획관이 TBS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을 보인적 없는 TBS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10. 누리집 전자책이 별도 등록기준이 없어 전반적 관리 체계가 부실한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11. 페이스북 팔로잉 계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12. '22.6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결하고 고시하였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단어를 소수인원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임
13. 서울시 신규 브랜드 선정 및 굿즈 디자인 기획 등 서울시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명예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14. 서울시 유튜브 ‘해치TV’ 채널의 실적이 매우 저조함. 캐릭터 디자인 변경만으로 채널 홍보가 극대화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이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TBS 폐지 조례 연기’를 요청한 것은 무의미한 일임. 국정감사를 통해 진행됐어야 함에도 기간이 지나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것이 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16.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연기’ 요청 의사를 보도자료로 밝힌 것은 부적절한 행위임. 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기 바람
17. 서울시 SNS계정 게시물에 서울시와 무관한 교육, 사기업 브랜드, 노출사진 등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태그되어 홍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18. 토너구입 관련 견적서, 비교견적서 비교 시 견적금액이 낮았음. 그러나 동일제품이 인터넷에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는 등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구매 지출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 및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문화본부 : 40건

1.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서울도서관의 노력이 필요함
2. 청춘극장의 관람객이 급감하는 등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함
3. 서울역사편찬원의 전문가 답사 프로그램이 부서 체육문화 행사와 병행되어 외유성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전문가 답사와 일반직원 체육대회의 이원화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4. 서울시 미래유산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정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기술해주기 바람
5. 서울시향의 악기 수리내역 등이시스템이 미비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문화본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임
6.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은 목표대비 카드발급률이 저조하고, 그 중 20만원 전액을 소진한 실적도 미진하여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7.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을 조성하기 위해 '24년 노들섬 내 다목적홀 리모델링은 공감하기 어려움. 현재 다목적홀은 대관 건수, 대관일, 대관 수입이 상위권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25년부터 노들섬 재구조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8.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대표적인 전시성 행사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과 같이 시민과 밀착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부적절함
9. 책읽는 서울광장 관람객 수의 실적은 운영시간, 관람객 수, 비치된 의자 수를 보았을 때 나올 수 없는 수치이므로 재검토하고, 향후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10. 국악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 사업과 연계하고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람
국악진흥위원회의 운영에 신경써주기 바람
11. 서울윈터페스타는 여러 서울시 실국 및 기관의 축제가 통합되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각 축제의 개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문화본부가 이를 잘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검토바람
12.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은 연말 내 100%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기 바람
13.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1년 만에 운영단체·명칭·로고 변경과 홍보 부족, 실적 대비 과다한 예산,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지원 단체와 연계 부족 등 사업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된 문화시설에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건물과 같은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의무고 신체나 타인의 재물 훼손을 보장하기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므로 시설별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람
15. ‘종묘대제 지원’,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어가행렬’을 재현하는 것임.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와 일반재현 사업의 예산이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할 사업이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16.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의 만족도가 더 높으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조계사 추진한 행사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바람
17. 이순신 기념관 건립 사업은 이미 타 지자체에 유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가와 역사적 의미만으로 건립을 정당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검토가 필요함
18.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은 ‘책 읽는 서울광장’과 동일한 장소 및 프로그램 등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두 사업 모두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까지 세종대로는 시위가 너무 많으므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19.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과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의 달성 지

표가 너무 단순하므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20. 삼일로창고극장의 임차료는 연극공연장이 많이 분포된 대학로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시설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해주기 바람
21. 민간위탁 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겸직일 경우 ①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②공고문에 노동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필요성을 명기하고 ③협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나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보완이 필요함
22.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과 ‘한국전통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비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있는 바,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공모기준과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바람
23. 서울대표축제는 중장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거나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23년 주요 재정사업평가결과 드럼페스티벌, 국악페스티벌 등 모두 ‘미흡평가’, 뮤직페스티벌은 대중가수 주요 출연형태로 문화본부 정체성 부합여부도 의문,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 수립 요망
24. 서울시 문화재 안정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근거 문화재 감시 1인당 cctv대수 등 규정 미준수, 문화재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및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람
25.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은 1인이 여러 장의 공연 관람권을 구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고 포털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게재되고 있으므로 적극 대응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26.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사업의 홈페이지 캐릭터와 출연진의 환도, 활, 복장 등이 상이한 바, 고증을 재검토하여 보완해 주기 바람
27. 문화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 중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방치된 채널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함
28. 정부수반유적지 운영은 방문 예약이 서울공공서비스를 통해 하고 있는데, 매년 관람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학교와 같은 단체에서 방문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서울문화포털 내 정부수반 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자원봉사 모집 절차를 간소화하여 많은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0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립되고 있지 않으며,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책심의회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함. ’19년 실시한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검토하여 박물관과는 종합적 정책·행정 기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
30. 창작극장 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 중복 지원 극단이 너무 많으며, ’17년 사업 시행 이후 특정 한 단체만 지속적으로 운영단체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환경개선 비용’과 ‘창작극장 지원 사업’을 연이어 지원받음에도 공연 가동률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31. 돈의문 박물관 마을 폐관 관련 오보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바람
32. 지정문화재의 경우 전승자 혹은 단체가 없는 종목은 해제하지 말고 적합자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33. 서울역사편찬원 편찬 도서의 활용처가 부족하고 유튜브 조회수 실적이 저조함. 다방면적인 홍보 및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4. 엄마북돋움 중 책상자 사업 신청자가 목표치에 비해 적어 추경이 불필요하게 이뤄졌다고 보이며, 수치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지 말 것
35. ’22년 KBS에서 제작한 일제 잔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 일제 잔존유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서울시의 수행할 업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6.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타 지역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안정적이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37. 문화시설과의 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혹은 자치구로 예산을 이관하는 재배정 사업들이며, 현재 업무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 조직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38. 서울대표 도서관으로 추진되던 동대문도서관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립도서관으로 격하되고, 보존서고의 면적이 축소되었음. 다만, 「도서관법」과 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람
39. ’22년 11월 시범 운영된 아트책보고의 운영과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취지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0.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을 삭제한 개정 건은 현재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람

□ 관광체육국 : 14건

1. 관광특구 중 특정구가 계속 최우수로 선정되고 있어 선정기준에 개선이 필요해 보임
2. 생활체육대회 공모 요건 중 현실성 없는 요건은 현실화하여 공모를 추진, 여러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송과 잠실 야구장 파울볼 안전사고가 올해 많이 발생했는데, 헬멧대여존 확대 등 다각도로 안전에 신경써주기 바람
4. '22~'23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요원, 의무실, 부대시설 운영 등 문제점들이 있었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 재발방지 노력 바람
5. 우수관광상품 공모 관련 지원업체 수가 감소하였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가 있었음. 끝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 확보 바람
6. BTS 페스타 관련 교통, 소음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 행사 시 미리 알려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7. 중국 국경절 대비 환대주간 운영 사업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8. 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 온라인사이트 운영 관련, 홈페이지 배너를 포털에 노출되게 하는 등 홍보가 많이 되어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개선 필요
9. [체육회] 민원 사례를 보니 협회장, 단체장 선출 관련 민원이 많았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혹은 대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10. BTS 10주년 페스타와 같은 민간업체의 행사와 '23 서울 페스타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힘써주기 바람
11. [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사업 중 서울-모스크바 교류 국제체육 행사 지원사업의 불용 예산을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민선 2기 서울시 체육회장 선거의 부족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주먹구구식의 행정력으로 인한 사업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산 책정에 철저하기 바람
12. [체육회]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단 3곳에만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가 개설되지 않음. 25개 자치구 모두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람
13. 직장 운동경기부의 장애/비장애인의 급량비가 차이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정으로 즉시 개선 바람
14. 고품격 관광 콘텐츠 상품화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연말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평가순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임. 서울 관광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격 관광 콘텐츠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 서울역사박물관 : 18건

1. 국제교류전 협약서의 경우 전시 절차의 근거와 기준이 뒀에도 실제 계약내용의 전시 진행보다 늦게 체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늦게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에 대비한 안전장치 필요
2. 백인제가옥 북촌음악회 개최 시 우천에 따른 대책 필요
3. 시설물 안전 관련 민원이 있을 후 조치된 사례가 있는데, 안전관련은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 있음
4. 한 직원이 한 업체에 연 25회 외부강의를 나간 사실이 있음. 외부강의 자문 활동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자체점검 하고, 직원의 공무 수행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해야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소장유물의 관리와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소장유물 활용률이 미미함에 활용도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6. 물납제 시행과 관련하여 타 국립박물관과 유치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 안됨.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함
7. 문화상품 판매가 저조한데, 홍보가 중요하므로 판매가 잘 이루어 지도록 신경쓰기를 바람
8. 유물기증자 예우가 미미한데, 다른 국립박물관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해 주기바람
9. 홍보 SNS 중 영문 페이스북 계정의 방문자가 급감하고 있음. 이는 영상에 자막이 없는 등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기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국제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청
10. 유료멤버십 회원수가 저조한데, 유료멤버십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함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
11. 직원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서가 전산 상으로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나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에 인사발령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인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12. 소방시설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음.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13. 청년기본법에 의해 청년은 의무적으로 3%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의 뉴딜일자리의 청년고용 실적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추후 임기제 등 채용에 있어 청년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요청
14. 최근 3년간 소방 훈련 실적이 일부 박물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소방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에 서울역사박물관 전관에서 소방 훈련을 수행하길 바라며 응급상황을 대비한 훈련 또는 인력 충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15. 뮤지엄샵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함. 상품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메타버스 서울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서울역사박물관 메타버스 사업 비용이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이 정상가동 되지 않을 때 매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적 효용성이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바람
17. 공용차량 활용도 저조, 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안 마련 요구
18. 역사박물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CTV 중 130만 화소 2개 있음. 다른 CCTV도 대부분 200만 화소로 현재 기술수준과 비교해 많이 떨어지는 상황.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 지키기 위해서 높은 화소의 CCTV로 교체 필요

□ 서울시립미술관 : 18건

1. 시청역, 소공스페이스 등 외부 현장에서 비엔날레 홍보와 안내가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해주기 바람
2.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없는 작품에 접근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동 약자의 관람이 불편한 경우가 있었음. 향후 전시 시 주의바람
3. 작품 서울랩소디 포함 고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원활히 관리하고 많은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현 저작권자(하쿠다 켄)와 원만한 교류를 요청드림
4. 서소문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절차 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지난 회기에 이뤄졌어야 함에 기본적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도록 요청
5. 백남준 기념관을 철거하는 것이 아닌데도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 사실과 맞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실과 협력하여 강하게 반박 대응할 필요 있음
6. 백남준 기념관의 상징적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폐관을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기에 새로운 운영방안을 조속히 계획하여 백남준 기념관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7. 여성기업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나치게 반복적인 계약은 주의해야 하며,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내용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과도한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할 것임
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한 제출자료, 전시 브로셔의 설명이 불명확함.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9. 세마홀, 북서울미술관 대관 가능 시간은 18시로 안내되고 있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미술관의 전반적인 ‘대관시간’과 관련해 미술관이 안내하는 것과 다름. 조속히 관련 조례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하며, 대관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 대관 사유와 맞지 않은 대관 사례가 있기에 외부 대관에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대관이 남발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10. 서울시립아카이브 필사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그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고민하여 주기 바람
11. 미술관 내 뮤지엄샵에서 서울시 브랜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바람
1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술관의 중요성이 오프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닌 디지털 미술관(VR, AR, 메타버스)으로 옮겨지고 있기에 향후 이러한 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길 요청
13.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출자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기금이란 용어 역시 조례 등 법령의 위임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함에도 협약서상 출자, 기금에 관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14. 참여형 전시에서 작품 관리에 소홀하여 작품이 훼손되었음에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시 안내 지침이가 근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용역 발주 시 해당 사항을 과업에 추가하고 민원, 문제 발생 시 용역사가 책임지도록 관리방안 개선 요청
15. 글자가 깨지거나 담당자 전화번호가 잘못 적혀있는 등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
16.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지분투자형식의 전시를 위해서는 계약 시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 결과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법령에 근거해 필요한 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었음. 절차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기 바람
17.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면서 난지 창작스튜디오 존치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시와 협의를 위해 힘써주기 바람
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내용적으로 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없고, 보고서가 빈약하여 외유성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음. 공무국외출장 시 관련 계획을 충실히 작성하고, 결과보고서 철저히 작성 요망

☐ 세종문화회관 : 12건

1. 전시 중 관람자 사진을 찍어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있음. 해당 서비스는 모든 관람자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개선할 것
2. 격월지 세종문화N 검수보고서 사진으로는 정확한 수량물품 확인이 불가함으로 납본받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검수 및 관련 교육 필요
3.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 작성, 여비기준에 따른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회관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음
4.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준을 준수할 것
5. 세종미술관 기획전시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인력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
6.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을 앞두고 옥상 노후화가 심각하여 당장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임
7.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관련 저작권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음. 각종 계약 체결에서 용역기간 중간에 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절차상 하자도 발생함. 향후 공연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절차와 시기에 맞게 진행할 것
8. ‘일무’ 공연에 가급적 외부출연자보다 무용단원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9. 공용차량 운행일지의 미결재 및 용무 확인 불가 사례가 많아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0. 예술단의 무급단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징계에 대한 규정 정비가 미비함. 이 부분을 시정 바람
11. 세종문화회관의 경영평가 결과 ‘사회적책임’ 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 및 장애인 고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 바람
12. 국외출장 관련 규정 등에 맞게 내부 기준 수립 필요

☐ 서울시립교향악단 : 12건

1. 서울시향의 정보공개율 저조하며 공개할 수 있는 문서는 전체 공개 혹은 부분 공개를 통해 공개율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정보 제공하시기를 바람

2. 서울시향의 행동강령이 규정집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해당 부분 시정하시기 바람
3. 인사경영권을 포함한 단체협약 개선이 필요함
4. 악기 관리대장 상 명칭과 업무상 악기를 지칭하는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지 않으니 개선하기 바람
5. 공연 티켓 예매 후 공연 직전 취소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6. 단순 어플리케이션 출퇴근 시스템만으로는 재택근무의 적절성을 논하기 어려움. 철저한 복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7. 보상 휴가로 인해 미사용한 연가는 지나친 연가보상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근태 관리가 필요함
8. 노조와의 협의 실패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람
9. 서울시향 단원의 겸직(출강)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10.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부 조합원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1. 서울시향의 공연과 연계된 기부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한 사항을 발견했음. 관련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향후 합당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
12. 조직 기강해이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근태 관리 문제 등 직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람

☐ **서울문화재단 : 9건**

1. 기초 예술분야 NFT 사업 관련하여 홈페이지, 홍보 및 예술인 선정 방식, 만족도 조사 등 개선 바람
2.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외부 시설 활용 서비스의 경우 권역별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며, 생활 지원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 소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
3. 노동이사의 회의비 집행 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바람. 서노이협과 같이 재단 외 단체의 회의에 재단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관련 서울 소재 예술단체 및 신규 단체가 진입하기 용

이 하도록 보완 검토 바람

5.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지원 사업은 3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창작 비용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아 보여 개선이 필요함
6.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운영 관련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7.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수요가 높는데, 권역별로 상담처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8.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대상이 다수 중복됨.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장애인, 청년 필수 고용률을 지키지 못함. 특히 청년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조례’에 따라 정원 4%이상 고용 해야하며,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됨에 따라 계획 수립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서울관광재단 : 6건

1. 단체협약서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명시하기 바람
 - 현재 조합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음
2. 단체협약서 제70조(자녀학자금 보조)에 보조대상을 보면 ‘조합원의 직계 자녀 중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라고 되어있음. 현재 고등학교는 무상제도이고 이 부분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에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살펴보기 바람
3. 서울시 관광 민박업체 13,000여 개에 대한 ‘에어비앤비’ 숙박 플랫폼의 불법숙박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중국 에어비앤비 플랫폼 협약을 재검토 바람
4. 관광재단 기념품 제작 및 홍보 사업과 홍보기획관에서 진행하는 굿즈 디자인 공고 사업이 중복됨.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정리를 바람
5. 서울시 관광안내 지도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안내 지도 지급에 대해 더욱 신경써주기 바람
6. 의료 관광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 의료 숙박 시설’ 설립을 통해 최 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하길 바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23건

1. 출연자 계약서(유튜브) 편수, 프로그램명, 출연료 명확히 적시 할 것
2. '23년도에 대외비 문서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2023 TBS 혁신안 발표 계획' 문서의 경우 비공개문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외비라는 이유로 추경 직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었음. 자료 제출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람
3. 시청자위원회 경영 간섭 단호히 대처할 것
4. 업무용 택시 이용 기준 벗어난 출연자 픽업 등 특별대우 문제 심각, 해당 경위, 지시자 등 상세 조사 요망
5. 안전관리자 예비합격자 정정공고 걱정했는지, 공정한 채용 노력할 것
6. 경영상의 책임을 간부 2명에게 물을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이므로 재고 바람
7. 소송에만 집중하고 내년 자구책을 위한 시·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 쇄신을 통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길 바람
8. 관악산 통합송신소 무인 원격 운영 예산 확보, 향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악산 송신소 2억 예산을 확보하여 원격 운영 우선 추진하기 바람
9. 방송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1/2 이상인 것이 적절해 보이며, 강행 규정 부재로 인해 방침 시행 이후 22건의 방송제제가 있었음에도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10. 콘텐츠 심의팀 조직개편 관련하여 업무태만인 구성원이 사실상 내·외부 이해관계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11. 출연료 상한선 초과 지급은 편성위원회 논의 후 대표이사 결재 후 지급, 대표이사가 편성위원회를 통해 승인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12. 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경영지원본부장을 공식으로 두어 책임자도 없는 상황임
13. 김어준 뉴스 공장 출연료 관련 비공개가 된바, 감사 차원에서 위법 적시가 된다면 의회 측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대표이사의 면밀한 검토 바람
14. 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조례 제정 및 폐지조례 유예기간 연장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보임
15. 뉴스 정체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 자치구 단위 현안 취재에 집중한다고 했으나, 자치구 단위 현안 취재 일자 및 내역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도된 날짜로 정리됨. 지역뉴스 집중 강화 추진 방향에 맞는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람

16. 지방선거 대비 심의 교육 참석자보다 tbs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의 교육 참석자 수가 현저히 낮음. tbs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 활동에 참여도를 높이길 바람
17. 언론에 배포된 tbs 의견에 따르면, 의회에 대응했던 태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 오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람
18. 콘텐츠 심의팀이 본연의 업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됨. 콘텐츠 심의팀 조직 재구성의 필요성이 있음
19. 불공정채용 건 자체 감사 자료와 '20~'23년도 감사 관련 진행 상황 자료가 누락된 상황임. 면밀한 내용 파악 후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바람
20. '24년도 주요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계획이 '24년도 예산이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고 자료 제출한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tbs 미디어재단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21. '22~'23년도 수립된 업무계획 및 방침서를 요청했었으나 계획서와 방침서는 매우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해당 사항 없으므로 제출됨. 또한 본부장 직무에 '공석'으로 기재해 놓은 것은 인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기 바람
22. TBS 미디어재단의 민원 처리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이벤트 당첨 및 상품 제공에 있어 불만이 많은바, 청취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하기 바람
23. 미디어재단 TBS의 결재문서 정보공개율은 높은 편이나 비공개문서를 살펴보면 민방 위대 편성계획, 부서의 보안당번 문서등이 비공개사유 1,2,3호에 해당하는 등 과도한 비공개문서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내용의 보안당번 문서가 부서마다 공개기준이 다른 점이 보이므로 보안문서에 대한 명백한 분류와 근거로 문서 관리에 철저할 것

☐ 120다산콜재단 : 15건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별 만족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료 협약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협소함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람. 또한, 집단 치유프로그램은 '21년 당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21년 이후 시행한 적이 없음. 해당 프로그램 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2. 120다산콜재단은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과는 달리 법적 한도 6명을 훨씬 상회한 인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복무 관리와 원활한 노조 운영을 어렵게 만들뿐더러, 특히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은 부분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치명적인 위법 소지가 있음

3. 노동이사제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기 바람
4. 비상임이상인 노동이사에 실질적인 업무추진비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엄격한 내부 감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 바람
5. 정보 소통광장을 통해 공개되는 결재문서 공개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다산콜재단의 공개대상 결재문서를 전부 재검토하길 바라며, 120다산콜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힘써주기 바람
6.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1년도 정보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1년 정보에 차이가 있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 있는 자료 제공을 바람
7. 총인입량 대비 응대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응대율 아닌지 내부 검토하여 보고 바람
8. '21~'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인테리어 및 전기·건축 공사가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 확인됨. 자세한 자료 제출 바라며, 전기공사 6회 중 4회가 같은 업체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을 확인함. 일감몰아주기로 보여질 수 있으니 향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것
9.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작 수량 단가가 '22년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22년과 '23년의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경우 비슷한 분량의 책자임에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됨. 비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낭비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수량 및 제출 수량을 조정하기 바람
10. 직원들의 휴가 사용 현황을 보면, '수업 휴가'와 '재해구호 휴가' 사용이 미흡한 실정임. 직원들의 휴가 사용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람
11. 노동이사 7박 9일 국외 출장에 대한 공무출장 귀국 보고서가 매우 빈약함. 또한, 해당 내용이 출장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으로 이에 대한 근태 처리에 관한 철저한 검토 요구
12. 노동이사 역량 강화 교육 지원비로 천만원이 사용된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합리적인 사업비 지출을 편성하기 바람
13. 챗봇 상담이 전화 상담보다 응대 시간이 늦은 특성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4. 응대 과실 뿐만 민원이 늘어났는데 개선하기 바람
15. 올해 파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발생하면 시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준비 바람

□ 여성가족정책실 : 16건

1. '22년 상반기(2기) 우먼업 인턴십 취업 후 1년 이상 재직자가 100명 중 12명밖에 안 됨. 사업 성과에 대해 의문임.
2. 아픈아이 돌봄서비스의 실적이 높지 않음. 부모님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건지 문의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적이 너무 낮아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음.
3.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홍보사업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보이는데, 예산 중복임. 사업 별도 인력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바람.
육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 및 활동기간이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할 것.
4.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사업의 만족도 조사가 이미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인지도 조사라고 할 수 없음. 만족도의 점수나 세부 문항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필요함.
5.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용 실적이 저조함. 타 돌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인프라 개선할 것. 해당 센터들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관리 부실하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함.
6.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사업 참여한 외국인의 정착 문제,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조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시행할 것.
7. 1인가구 지원사업이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안되는 등 운영이 부실함. 1인가구 지원센터나 사업들이 1인가구에게 인지도가 25.3%에 그치는 등 매우 낮음. 1인가구로 전입 신고시 리플릿 배부나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제대로 홍보가 실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문자나 온라인 홍보 등 홍보 방법 개선할 것.
8.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고 지원이 부족함. 자립수당, 양육수당, 검정고시비용 지원액이 현실화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 및 교육,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

문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탁해야 하나, 일부 목적사업이 아동과 전혀 상관없는
법인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수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음.

10.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정원 대비 입소를 낮음. 정책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욕
구를 잘 파악하여 입소률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11.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거점형키움센터에 과도하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이용
자수와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상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임차료를 지불하
는 거점형 키움센터를 더 이상 확충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
함.
12. 외국인 가사관리사 불법체류, 인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부,고
용노동부와 함께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관련하여 첫째, 민간대비 2배 이상이 되는 400개의 목표 설정
은 과다하여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며, 둘째, 정책대상자에 대한 사전 욕구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효율성을 높이고, 셋째, 2023년도 집행률이 너무 낮았
던 것을 반면교사하여 내년 예산 잡을 때 실현가능한 예산 편성을 할 것.
14. 키즈카페는 대기업에 의해 2014년 상표권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형키즈카페는 상표권 검토가 되었는지, 상표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키즈카페’ 상표 사용의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15. 결합형 키즈카페는 여러 연령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데 아이들은 1년 사이에도 발
달에 큰 차이가 있음. 한 공간에 연령별 발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기 바람.
16.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관련
 - 상시매니저의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대비 급여 책정의 적정성 및 상시매니저와 시
간제매니저 근무시간 인정의 형평성 검토 바람.
 - 동행 매니저 2인 1조 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개선 바람. 이용자 급증으로 매니저 배정 안 됐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100회 이상 이용자 5명이나 되며, 최대 147회까지 이용한 경우도 있는 등 과다 이용 사례 발생함. 지원대상 또는 이용횟수 등을 제한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 마련할 것.
-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부족한데, 단순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동행매니저의 자격요건(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제한이 필요한지 검토 바람.
-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바람.

☐ **여성가족재단 : 4건**

1. ‘데이트 폭력’ 피해당사자의 긴급구호 문의에 ‘여성긴급전화 1366’ 대신 ‘한국 여성의 전화’로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임. 시민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 민원상담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 안내해야 함. 더불어 전 직원 이 성인지적 관점을 장착하고 정책에 참여해주길 바람.
2.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평가 결과, 자체 감사 결과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도록 조치 필요함.
3. 여성가족재단 성평등언어사전의 용어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할 것.
4. 연구과제 착수자문회의 수당 지급 관련 착수보고서 기재 사항과 홈페이지 공개회의록이 내용이 다르고, 설문조사비 전체 액수와 조사 규모, 1인당 단가가 연구마다 다름 15,897원, 18,333원 3전과 같이 단가 금액이 ‘전’ 단위까지 나온 것은 결국 확보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근본적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 연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에 있어 시정할 것.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4건**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꿈나무마을 초록, 파란, 연두 꿈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 수의계약 현황 관련. 장난감도서관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같은 회사에 발주한 것은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계약 상대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데도 계약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음.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2. 2022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총평에 의하면 취약점으로 학대 행위자의 욕구파악이 구체적이지 않고 서비스계획이 미흡하게 수행된 점, 사례관리 점검표, 종결보고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등 개선해야 할 점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큰 문제임.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성과평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기관에 맞는 사업모델로 개선 바람.
3.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서구와 양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 활동’을 보면 양천구 소재 기관들과 더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구를 보면 강서구가 더 많이 있음. 편중된 활동 개선 바람.

<꿈나무마을 초록, 파란, 연두 꿈터 공통>

4. 각 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원들에 대한 학대 관련 전문성 및 역량 강화교육 등을 강화하고, 시설 차원의 노력 및 성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복지정책실 : 19건

1.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시설 공시부분에서 서울시 외의 경기도에 있는 시설의 경우 자치구 구분이 따로 표기되지 않아 검색되지 않음.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 위치한 시설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정할 것.
시설공시에서 시설들의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의 공시정보, 행정처분 내역도 등록되어있지 않아 즉시 개선할 것.

2.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료 요청하여 관련 현황을 개선할 것.
맞춤형 일자리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 성과가 미비함. 일자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파악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도록 할 것.
3.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 대부분 단순 일자리에 그치는데, 정년연계까지 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것.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실태조사를 요청함.
4. 안심소득 홍보를 위해 지면광고, 인터넷광고 등에 많은 예산을 썼는데 홍보효과가 있는 지 분석할 것. 안심소득 인지경로와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도록 시정할 것.
5. 3종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비를 보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잘못된 관행이자 관련 지침 위반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6. 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 관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 소아마비협회 관련 의혹에 대해 특감이 필요함.
 - 공문서 위조/ 비대위 규정/ 공금횡령/후원금 용도 위반/ 법인과 시설회계 분리위반/ 인사문제 등 지적
7.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직무 소양 교육 및 관련 물품 지원 내역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혹은 오후나 휴일에 실외활동을 하는 등 노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담당자 대상 회계·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관련 실태점검을 철저히 할 것.
8. AI안부확인서비스는 우리동네돌봄단에 비해 대상자 정서 안정 측면에서 효과성이 낮고, IoT기기를 활용한 상태확인 서비스에 비해 단가가 높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IoT기기 활용 서비스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쪽방상담소에 배치되어있는 우리동네돌봄단은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우리동네돌봄단 형식은 그분들에게 충분한 지원방식이 아님. 인력을 보강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방안이 필요함.

10. 장애인 일자리는 직무가 단순하다 보니 심부름하는 정도임.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직업의 유형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람.
장애인단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니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직업을 찾아서 고용하는 공모사업을 제안함.
11. 13개 유형별 사회복지시설의 이직률을 보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 주거복지 시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등 초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시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남. 이직률 높은 이유는 노동 강도 대비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처우와 서비스 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노동 강도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조정 방안 검토 바람.
12. 장애인복지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에 관외 출장지 차량 대여비 지출 등 위원회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 바람.
13. 장애인체육시설(7개소) 중 시립인 곰두리체육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이용률이 20%대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임. 원인파악을 위해 이용료, 장애인 운동기구 및 운동용품 구비 여부, 접근성 문제 등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것.
1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잡한 처리절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어려움,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 각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5. 서울시 노숙인 수는 2012년 5천명에서 3천명으로 감소했으나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했고, 장애인 수도 15,000명 정도 감소했으나 예산은 약 4,800억에서 1조 3,500억 정도로 증가함. 대상자별로 예산편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숫자가 있을 수 있고, 대상자보다 전달체계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대상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전달체계 비용 구분해 보고, 전달체계를 줄여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수립 바람.
16.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 보수교육, 단체연수, 건강검진, 마음건강 대체인력 지원 등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수교육도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한국

보건복지인재원, 중앙부처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교육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만 보수교육을 진행해 왔음. 보수교육 기관 선정을 다양화하고, 보수교육 금액 지원 시 반드시 이수 여부 확인 후 지원할 것.

17. 노숙인 인문학 강좌 관련.

- 강좌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계획했다라도 만족도 조사는 각 과정 종료 즉시 실시할 것.
- 기존 노숙인시설에서 실시한 강의는 이미 시설에서 해 오던 것으로 예산만 낭비된 것임. 시설별(재활, 자활, 요양)로 그 특성과 구성원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별 공모사업 진행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검토할 것.

18. 자활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사업은 계속 정체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달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탈 수급률과 탈 자활률도 낮은 상태임. 탈 수급 및 탈 자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것.

19.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880여 건에 99개 복지관에서 시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이 너무 적고, 매년 기능보강비가 분절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음. 기능보강 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실태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능과 역할 재설계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11건**

<서울시 복지재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재단은 외부강의 비율 높다고 지적 받았으며, 재단에서 향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를 승인하고 통제하겠다고 하였음.
2023년도에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9월 말까지 315건으로 크게 줄지 않았음.
대표이사의 시선이 아닌 시민의 시선에서 적정 수준을 정하기 바람.
2. 시민의 세금으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해주길 바람.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민이 보았을 때 어떠한 집행 사유

로 누가 식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 바람.

3. 미션,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였고, 주요 전략방향, 하위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나 하위 전략과제와 지표가 서로 맞지 않음. 개선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4. 감사위원회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 면제 인원 한도 초과에 대한 지적사항 있었음. 근로시간 면제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도 운영할 것.
5. 단체협약상 노조별 축탁 계약직 재고용 기간에 차이(공공운수노조 3년, 돌봄노조 5년)가 있어 노조 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 조정 및 정리 필요함.
6. 임금 협상 안 된 상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나서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됨. 예산안 심의 전에 임금 협상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강석주 위원장 토론회 축사 중 서사원 노조 항의 영상화면) 시의회 토론회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토론회 내용과 관계가 없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피켓 들고 항의하는 행위를 함. 해당 행위로 토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
8.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보육교사 노동권 보장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보육교사의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
 - 고용승계, 서사원에 남게 되는 인원 파악 등
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행위(토론회 축사 중 서사원 노조 항의) 관련, 복지정책실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인지수사 진행하여 법적 조치 강구 바람
10.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타임오프제에 대한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타임오프 제도로 인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
 - 명단 변경 시 10일 전 사전 제출해야 하나 명단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시정 하기 바람.
1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과도에 대한 지적이 상임위에서 1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올해가 지나기 전에 혁신을 보여주기 바람.

☐ 복지 관련 시설 : 3건

(시립 고덕양로원, 시립 평화로운집,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시립 고덕양로원>

1. 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복잡한 처리절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어려움,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에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시립 평화로운집>

2. 시설 운영 관련 신체장애, 발달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 필요함.
 - 직접케어 외 사업 관련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 바람.
 - (이용인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

3.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내 임대 서비스 제공시 배송에 대한 정보가 없음. 이용자들이 배송이 가능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배송에 대한 정보를 기재 할 것.

☐ 시민건강국 : 19건

1. 정신건강 관련 사업 수가 32개로 너무 많고, 쪼개기가 심함.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있음. 통합편성 등 자구책 개선을 마련하기 바람.
2. 미성년자가 신분증 스캐닝만 하면 전자담배 무인 판매대에서 바로 담배 구입이 가능한 실정임. 인식개선과 무인 담배판매대 제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 바람.
3.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담당 직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함. '정보 공유', '정신질환자 대면 시 2인 1조 구성' 등을 통해 담당자의 안전 확보하기 바람.
4. 지역급식관리센터의 주 업무가 식단표 편성, 위생교육이고, 대상 기관이 한정적임에도 자치구별 센터를 설립으로 인건비 등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이 듦. 센터 통합 운영 등 재검토가 필요함.

5.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여 주기 바람.
6. '우리아이 안심의원' 8개 병원 월간 진료실적의 약 20~30%가 소아청소년이 아닌 일반환자였음. 시에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이유는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진료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아이 안심의원' 현장점검은 실제 운영시간에 진행하기 바람.
7. 2021년 3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부족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만 하였고, 이들이 현장에서 분사 방식으로 뿌리는 소독제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 지속적·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고 시는 문서행정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했음. 시정하기 바람.
8. 방역용 소독제와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도 시중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사용법, 문제점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이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움. 홍보를 강화 바람.
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신설됐으므로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고 지급하기 바람.
10. 시립병원의 의료비 감면제도 운영 내역을 보면 저소득계층의 감면보다는 직원감면이 건수와 액수 면에서 월등히 높음. 전체 진료환자 대비 6~8% 정도가 직원 감면 혜택을 누리는 환자라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인지 의문이 감. 시립병원의 공공성 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함.
11. 시립병원의 불납결손액이 큰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12. 채식가능 식당목록에 햄버거집, 죽집 등이 혼재되어 있음. 채식식당에서는 채식만 가능해야 시민의 오해가 없을 것임. 채식식당 선정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하기 바람.
13.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실적 대비 종사자 인력이 부족함.
질적 사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함.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이 느리고,

답변내용도 부실하며, 실적도 적음. 시민체감도 낮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대 살충제에 대한 정보도 부실함. 센터 운영전반에 대해 개선하기 바람.

15. 마약중독치료 동행 의원사업이 원래 사업취지와 다르게 이미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스스로 치료된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세금이 적절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마약중독치료 동행 의원 사업구조를 재검토 바람.
16. 마약 예방교육의 만족도 조사에 실효성 의문이 있음. 교육전문가의 교수설계 등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17.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보조금 지원 시설로서,
 - 정치적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조금을 사용해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 및 기념품 전달을 수행함.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또는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
 - 위와 같은 부적정 운영 사례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성과평가에서는 '양호'로 평가되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운영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개정(21년 12월)으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통합(관리)하는 방향 검토 바람.
18. 통합방문 건강관리, 찾동 방문 건강관리, 건강 동행사업 등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없도록 하기 바람.
19. 시민건강국에서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대상으로 ① 인건비는 불용되면 반납해야 하고 예산변경 할 수 없는 세목인데 2022년 예산변경 승인하고, ② 시간 외 수당을 정액으로 예산 승인하고, ③ 기관에서 예산변경 요청 시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사전에 제출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조치임.
센터장 임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수로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

어 있지 않는 등 공정성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연구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2건**

(은평, 서북 병원, 동부, 북부, 서남 병원, 장애인치과 병원,
고양, 백암, 축령 정신병원)

<서울의료원>

1. 서울의료원의 유튜브 홍보비에 비하여 구독자 수가 저조함. 2022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음. 유튜브에 주력한 홍보 강화 필요함.
2. 수익 감소, 병상 가동률 및 전문의 1인당 실적 부진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보험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1.5억원인데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미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4.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 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생한 근무시간 내 음주, 폭언, 폭행, 기물파손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은평병원>

5.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담당자만의 실수가 아닌 결재선에 있는 팀장, 과장을 포함한 병원 전체의 책임이며, 문서 결재뿐 아니라 문서접수 시에도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함. 사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

<서북병원>

6. 서북병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이 66%('23.10월 말 기준)로 타 기관 이수율이 90~100%대인 것에 비해 낮은 편인데 원인은 무엇이며, 이수율 높일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동부, 북부 병원>

7. 낙상사고 3개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임.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 낙상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시스템 등을 갖추어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기 바람.

<서남병원>

8. 서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것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함. 2023년 초 스스로 설정한 진료 목표 대비 달성률이 30%로 매우 저조함. 다른 병원 달성률(60~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치과병원>

9.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립병원 의료장비 최신화 및 확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로 인해 시민의 방사능 노출이나 검사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에서 즉각 고려되어야 함.
10. 서울시 차원에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1. 불법촬영 문제를 시정조치 하고 남녀공용 탈의실을 분리 설치할 것을 권고함.

<고양, 백암, 축령 정신병원 공통>

12. 시립정신병원의 입원이 장기화 되고 반복되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입원심사에 대한 퇴원명령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입원환자들을 위한 인식개선 등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할 것.

☐ 건강 관련 기관 : 20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 제3권역(서남), 제4권역(중부) 센터, 한국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1. 센터장 병가로 인한 공백에 대해 보완대책이 필요함.
2. 청년 자살예방 플랫폼(Y RUN ON)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캠페인 및 플랫폼 구성이 청년 자살예방, 생명존중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청년 자살예방 플랫폼에 대한 방향 재고 및 개선이 필요함.
3. 2022년 특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해관계자인 운영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센터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4. 심리부검 분석결과 자살사망자 센터 이용률이 2%도 안되는데 자살예방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홍보 및 접근성이 부족하여 인지도 향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인지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22년과 홍보내역이 유사하고 행사성 캠페인, 리플릿 등 제작이 많음)
5. 서울시의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살문제라는 시민의 절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대한 사항임. 자살 예방기관으로서 이직 비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로 직원의 지속근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6. 2021년 자살예방센터 이전으로 과다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자살예방센터가 큰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서울 중앙에 있어야 할 당위성이 없고, 은평병원 현대화에 따라 이전계획이 있음에도 현 사무실 임대를 장기로 계약하여 지속적인 월세, 관리비 지출이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7. 자살예방센터 전화 응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음, 개선방안이 필요함.
8. 위탁하는 비슷한 센터를 보면 장기근속하는 직원이 많으나 자살예방센터는 이직률이 높음.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또 직원 구성이 비전문요원으로 채워져 있어 상담의 질이 낮아 전문가 채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9. 취업규칙 정관 개정 후 채용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을 반 이상으로 넣어야 함에도 내부인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센터 운영위원회 임원 소유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서울 심리지원 1권역(동남)센터>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 사업실적 오류가 많아 자료 신뢰도가 떨어짐. 시의회 제출 시 자료요구가 없도록 시정 바람

11.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12. 채용 심사 위원은 과반 수 이상을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2022년 이전에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함. 채용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람.

<서울 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13. 채용 외부면접위원 배석이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원 적정인원을 선정하지 않고 실시함. 추후 민간위탁 채용절차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람.

14. 민간위탁 예산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음. 앞으로는 예산 적정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서울 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15. 심리교육 시 중부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및 운영법인의 법인 이사장을 강사로 채용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16. 2022년 9월 센터장 채용심사 시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나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지 않고, 내부자인 감사를 외부인사로 편법적으로 구성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17. 2022년 1월 팀장 채용 시 2021년 중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겸 자문위원) 중 한 명을 팀장으로 채용한 것은 시정이 필요함.

18. 중부센터에서 활동하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곳에서 센터 홍보 및 다과비 등을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3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공통 - 증인 요구 기관>

19. 3군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이 현재 다른 센터의 운영위원 등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소지가 있음. 오늘 다른 기관의 행감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효율적으로 기관 운영할 것을 당부함.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 증인 요구 기관>

20.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거나, 센터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독려캠페인을 운영하여 기념품을 전달했음.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혹은 반환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재난안전관리실] : 57건

1. 겨울철 대비 열선,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치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할 것
2. 과속방지턱의 품질확보 및 시공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고품질의 과속방지턱으로 정비할 것.
3.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지에스건설)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대산업개발)에 따른 업체 행정처분 시 사고후 대응·복구과정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것.
4.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바,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
5. 송파안전체험관 민간위탁과 관련해 동일한 업체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비의 80프로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 투명성,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모집 방안을 마련할 것.
6. 수해예방 및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투수블록 성능회복 장비를 확충하고 청소물량을 확대할 것.
7.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중대재해감시단은 안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안전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8. 올림픽대교 남단과 북단, 송파지하차도의 충돌완충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할 것.
9. 올림픽대교 남단 교대, 북단램프 등 피복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탈락되어 내부 철근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바, 신속히 보수할 것.
10. 올림픽대교 남단 신축이음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통행하는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는바, 조속히 보수할 것.
11. 올림픽대교 북단 하부 조류방지망에 거더 콘크리트가 노후로 인해 떨어져 매달려 있는데, 차량과 오토바이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할 것.
12. 올림픽대교 주변 잡풀 및 잡목방치로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점검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3. 올림픽대교 위 경관조명 파손과 보행로 전선관 미정비, 연결통로 볼트 돌출 등으로 보행자 통행 안전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신속히 보수할 것.
14. 세굴이 발생한 성내5교 하류측 교각을 점검 보완할 것.
15. 방음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속히 방음터널 화재안전성을 제고할 것.
16.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이태원참사 원인분석이 시민들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

닌지 의구심이 드는바, 사고원인 분석과 안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임할 것.

17. 평창터널 계획 수립 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
18. 고령의 시민들을 포함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 안전보험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9. 방재등급 연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터널 특성에 맞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할 것.
20.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이전에 준공한 터널에 대해서도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할 것.
21.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용역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장기 지연되었던 바, 입찰 전 업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
22.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이 2009년부터 2026년으로 계획되어있었으나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인바,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
23. 서울시도 내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을 싹태 파악할 것.
2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내 세부 가지치기 기준을 개정하여 규정을 마련할 것.

25. 한강교량에서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26.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중 배수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11곳에 대하여 배수펌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
27.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 시 하천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차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8. 방음터널이 소음이나 먼지의 저감효과가 뛰어나나 화재위험성이 높고 설치비가 방음벽보다 2배 넘게 소요되는바, 방음터널보다는 저소음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방음벽 설치를 우선할 것.
29.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단가)’와 관련하여 일부 도로사업소는 의회 예산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조기발주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할 것.
30. 긴급출동용역반의 작업일지 내 사진대지가 빠져있는 등 작성이 미흡한 바, 시정조치할 것.
31. 긴급출동용역반은 야간에 발생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일 전 주간에 발생한 민원을 몰아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할 것.
32.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바 터널 내 화재대비 안전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33. 터널 내 은색 스테인리스 소화전은 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

34.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비롯한 도로관리 시스템들을 통합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검토할 것.
35.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층 고용 개선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36.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방역물품 비축 창고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37. 6개 도로사업소의 차량 운행일지 양식 및 작성방법을 표준화하여 통일시킬 것.
38. 보도블럭 교체 기준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작업될 수 있도록 할 것.
39.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등을 설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고려할 것.
40.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겨울철 화재 발생시 초동 대처를 위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작동점검을 철저히 할 것.
41. 지반침하 발생 이력을 원스톱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
42. 향후 지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서울시

에 도입하여 대처할 것.

43.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지 수시 점검할 것.
44. 고가차도와 같은 도로시설물 하부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하 2차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점용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용시설을 허가할 것.
45.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이후 대형차 끼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대형차 출입제한 및 끼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6.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대형차 끼임사고 발생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들이 정체를 겪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교통정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할 것.
47.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작업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바, 작업보호차량 추가임차 등 작업 중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48. 재난안전통신망 훈련과 관련하여 응답률이 저조한 기관들이 있는바, 참여를 독려하여 훈련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49. 성산대교 안전성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철저히 완료할 것.

50. 서소문고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소문고가 개축을 신속히 추진할 것.
5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구두질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적용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붙임]연번1 참조)
52.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청사건립에 400억원이 투자되어 준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사 건립 당시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 재건립 시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53. 공공시설 건립 시 지역특성 및 용도를 고려한 건설이 필요하나 시흥 청사 건립 시 계획 수립이 경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재건립 시 이를 유념할 것.
54. 남부도로사업소 시흥 청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므로 향후 재건립 시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할 것.
5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청담대교 남단과 학동로 연결 과제는 사업성이 1이 넘어 추진 가능한 과제였고 일부 건설이 진행되어 비용까지 투입되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임. 중단사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2 참조)

56.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서울 시내 솔라포지병 관련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교체나 수리 시 걸리는 기간, 설치 및 관리, 점검 방법, 공무원들이나 시행업체의 현장확인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3 참조)
57.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인파 운집 방지 등 시민 안전 예산으로 배정되었음에도 안전 강화와 직결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에 가까운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레드로드의 문제점(해당구역 사업필요성, 레드아스콘 재질 사용이유, 대체사업 등)에 대해 파악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4 참조)

[소방재난본부] : 34 건

1. 현재 소방에서는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가 설치된 일부 소방관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세탁기를 이용하고 있음. 특수방화복을 일반세탁기로 세척 시 화재현장 등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특수방화복 관리를 위해 모든 소방관서에 전용세탁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외 개인장비의 세척·관리 현황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2. 최근 3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인덕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함. 이에 강서소방서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안전덮개 사업을 구체화하여 서울시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화재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지원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4. 매년 투입되는 소방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화재 및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감소하지 않아 투입 예산 대비 그 효과성에 의구심이 드는 만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할 것.
5. '17년 「소방법」이 개정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을 현장대원이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로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강제 처분 시 현장대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동 지연을 방지하는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6. 서울은 타 지자체보다 구급대의 1일 평균출동 건수(약 10건, '23.9 기준)가 높게 나타나고 비응급 출동도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대원들의 피로도 누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구급대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급차 증설과 구급대원 편성인원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7.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및 본부 통합영상관제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해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할 것.

8. 실화재 훈련장 설치 사업의 경우 해외의 우수한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동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9. 소방활동 외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은 심리적·육체적으로 그 피로도가 상당한 만큼, 심신 단련과 피로회복 등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대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10. 한강 교량 자살사고 예방 CCTV가 미설치된 교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11. 현재 운영 중인 수난구조대(4개소) 중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타 수난구조대보다 관할지역이 넓어 일부 구간의 경우 황금시간 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난구조대 추가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립방안을 마련하고 조직편제, 비용 지원 등을 소방청에게 적극 건의할 것.
12.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소방재난본부에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적극 임할 것.
13.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운영조직 등의 행정적인 문제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으로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증원 및 조직편성 등을 추진하여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받도록 할 것.

14. 전통시장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시장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도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시장 내부의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소화기 추가 설치 방안도 적극 강구 할 것.
15. 정부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자율소방대 조례 개정 등 15개)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
16. 119항공대 격납고의 노후화 및 협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 시 격납고 부지확보 및 공사 추진사항 등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후 격납고 신축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17.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 재배치 연구용역’에 다양한 현실적 요인(거주 및 유동 인구 등)을 반영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에 서울소방 서비스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 할 것.
18.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도입(강남과 마포 일부구간)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시교통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9. 근무 중 부상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력검정 평가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바, 소방대원들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20. 무선영상시스템 및 통신장비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구호·구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1. 고가 소방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가 있어 자칫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받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진행 할 것.
22. 일선 소방서마다 과(부서) 명칭이 통일되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바 명칭 통일 등 조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3. 공동주택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철저한 소방 점검과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예방활동에 적극 임할 것.
24.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밀집 축제 행사 시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및 인원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
25. 현행법상 소방에서 해체공사장의 화재안전권한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본 개정안 통과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해체공사장 화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

26. 119항공대가 운영중인 헬기의 경우 첨단장비 미비로 인해 야간비행 및 야간산불 대응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바, 장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인력의 과실을 최소화할 것.
27. 서울시내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을 보면, 일부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거나 화단 등에 가려져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시 전역의 설치한 옥외소화전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 할 것.
28. 소화전 관련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일부에서 산출 기초조사서 기재 미흡,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산출수량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한 행정처리가 발생하고 있는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계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9.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인근 시설물로 확대되어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불위험지역 인근 시설에 대한 화재대책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비 관리와 훈련에 철저를 기할 것.
30.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의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여 서울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31. 소방관용차량의 사용내역을 보면 입력내용이 부실하거나 결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관용차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 관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32. 소방헬기 1호기 교체 사업은 300억(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종 및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국산 부품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33.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장비인 전용관창의 경우 '24년도 구매수량 및 기존보유 장비의 수량이 119개소의 소방관서에 배치하기에는 10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족수량을 추가 구매하여 모든 소방관서에 배치하도록 할 것.
34. 전기버스 화재는 일반적인 전기자동차 진압장비로 진압할수 없어 만일의 화재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 화재진압장비를 구비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 전기버스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물순환안전국] : 25건

1. 노후 주유소의 토양정밀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이행 지연 사유와 추가조치 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추적조사 등을 시행할 것.
2. 물재생센터 내 노후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다수 보유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합리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토록 할 것.

3. 수변감성도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간의 내용이 특색 없이 획일적이므로 개별 하천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4. 도림천은 현재 도보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하고 조경과 녹지도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해야 하며 대림역 근처는 화장실이 없어 하천 이용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하고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
6. 녹변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에 없던 투자심사 등과 같은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
7. 서울시 하천 내 다수의 석면 조경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비산방지제 도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석면 제거라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산방지제 원료가 수용성으로 파악되는바 하천의 특성과 상충하므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실외 공기 중 석면측정 방법은 정확도가 부정확하므로 보완할 것.
8. 하수관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중간 적치장이 주거단지 인근에 위

치한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적치장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9.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을 인터넷으로 예약함에 있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주민수요가 높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층을 고려하여 시설(파크골프장 등)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안정적인 하천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유출지하수 수질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동일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물에 유출 지하수 정수시설을 강제 설치토록 하거나 하천 방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1. '22~'23회계연도 하수도요금 체납건수 및 체납액을 살펴보면, '납세태만' 사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12.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사 이용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 간에 입주 조건 등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서운로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이 지장물 이설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자치구에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14.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물재생센터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활용하여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지역거점화, 운영방식 다각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5. 물재생센터 수질계측기가 제조사 폐업, 외산 물품 사용 등의 사유로 고장이 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제품 구매 시 A/S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16. 서울시는 현재 하천 조경석에 대한 석면 농도를 1년에 한번씩 조경석 주위의 공기질로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경석의 마모 및 훼손으로 인한 도포의 벗겨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석면농도 측정인 만큼 더욱 정밀한 석면 농도 측정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
17. 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에도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바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8.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오염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된바 조속한 조치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시민의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정화기간 안에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9.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설계량과 실제 준설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준설 설계량 산출 기준을 마련할 것.
20.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동일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1.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물순환 관련 정책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토록 할 것.
22.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구두질의] 현재 서울시에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1개소(양천구)만 설치되어 있어 폭우 발생 시 저류시설이 없는 강남권 등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람. ([붙임]연번5 참조)

24. 현재 서울시내 물재생센터의 경우 직영과 공단 관리대행 체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상황임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기 바람.

25.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8건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상반기 종합감사에 따르면, 동일·유사 공종의 경우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바 부서 내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사 이용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 간에 입주 조건 등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다른 공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정량적 지표 개선을 노력하는 등 경영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4. 물재생센터 수질계측기가 제조사 폐업, 외산 물품 사용 등의 사유로 고장이 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바 제품 구매 시 A/S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5.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동일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6.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자체감사 중 경고처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정년에 따른 당연면직으로 처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징계 대상이 처분을 받기 전에 퇴직하여 공단에 재산상, 행정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 포기조 덮개와 슬러지처리시설 강판이 부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한편, 유해가스 관리 건축물의 시건장치가 미관리 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된바 이를 조치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41건

1. 강교의 경우 최종 도장에서 현장 거치까지의 시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교량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예산절감을 위해 강교 거치기간을 최소화할 것.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공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설, 교통소통대책 모니터링,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설계변경으로 시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적절한 행정 주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이 곧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와 같이 설계변경,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4.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5.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가 최초 계획에서 공사비가 3배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약 3배가 연장되었는데, 더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준공예정인 2025년 6월까지 만전을 기할 것.
6.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중 실시 설계자의 과실로 공사가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된바, 설계자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것.
7. 설계사와 공사 감리사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8. '청렴행정시스템 대내외 협력사업'에 대해 재평가하고 변화된 건설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방침을 세울 것.
9.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공법과 관련해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10.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층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방수공법 변경도 여러번 이루어졌다는 점으로부터 초기설계가 부실했다 보이는바, 초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의뢰부서 및 향후 운영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서울시가 UN개발계획과 공유하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에 지속적인 지원 및 운영기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고' 현장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추진실태 적정 여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미흡 및 안전관리 소홀로 벌점부과처분을 받았으며 2023년에만 안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바,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3.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공사와 같이 공사가 준공된 후에야 부실이 확인되어 벌점 부과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바, 공사 중 현장에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4. 대형공사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여러 업체가 공사를 진행중에

부실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실제 벌점보다 매우 작은 벌점이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15. 건설공사 중 부실벌점을 부과받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 심의토록 하는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인력풀에 벌점부과를 받은 민간업체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심의위원 위촉 기준을 개선토록 할 것.
16. 공사중 사토장 재선정으로 사토 운반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바, 설계 시 사토장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17.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부적합자재 현장점검반 점검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서 자재 품질 부적합 적발 사례가 발생한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18.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마다 별개의 스마트 안전기술 발주보다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역단위별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동절기 콘크리트 부실 양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콘크리트 양생 관련 품질관리에 유의할 것.
20.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현장 중 지하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구획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계획을 변경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철저히 마련토록 할 것.

21. 현재 설계중인 서남병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적용할 것.
22.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3. 해체공사장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 건물 및 보행자 안전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24.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감리 근무현황을 점검할 것.
25. 방음터널이 방음벽에 비해 소음 및 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나 화재위험성이 높고 공사비 증액이 크게 발생하는바, 방음터널 보다는 저소음포장이나 방음림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방음벽 설치를 우선할 것.
26. 광화문광장조성사업 시 설계자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투수형 침투측구를 유공형으로 설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공사편의성 보다는 설계자의 설계 취지를 우선할 것.
27. 관급자재 조달에 협조적이지 않은 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벌칙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
28.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

29. 해체공사장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할 것.
3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점검과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철저히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확인할 것.
31.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원설계가 부실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사업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설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32. 관용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차량일지 및 연료 주유내역을 철저히 작성할 것.
33. 불필요하게 고가인 휘발유 주유는 지양하고 관용차량을 주유함에 있어 본부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와 가격협의를 실시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
34.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공사가 지연된바, 설계 및 공사 실시 전 주변 사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사지연을 최소화 할 것.
35.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19년 3월에서 25년 6월까지 연장된바,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개최시 지역 현안에 밝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36. 신림봉천터널 공사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나 충분치 못한 주민의견수렴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 계획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37. 신림봉천터널은 연장이 긴 터널이므로 기존 방재기준 및 방재 대책보다 대폭 강화된 방재시설이 필요한 바, 방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
38. 신림봉천터널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추가 공기연장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9. 터널 화재는 화재발생 3분 이내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바, 물분무시설 외에도 초기화재 진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40. 신림봉천터널은 최초 사업계획변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어야 하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반대 민원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향후 추가 사업계획 변경이 없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수행할 것.
4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양화인공폭포 공사’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1일)를 거쳐 양화폭포의 규모, 재질 등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을 진행(2020년 9월)하였으나, 그 과정 중 전문가검토의견서를 위조

및 행사(2020년9월)하여 특정기술 심사 자료로 사용되었음.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시 무단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공식 배포하여 진행하였음. 서울시가 배포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내용 중 입찰 시 유의사항에 따라 본 심사의 입찰 (낙찰 또는 협약)은 취소 또는 해지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발주처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도기본에서 진행 중인 ‘양화인공폭포 공사’를 중지하고, 위법사실로 진행되었던 양화인공폭포 공사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6 참조)

[기술심사담당관] : 13 건

1. 설계심의 사후평가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설계심의 사후평가 시 설계심의에서 지적받았던 의견이 미반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설계심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
3.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 위원만 현장 점검을 나가는 쏠림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4. 신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활용되어 해외시장에도 진출한 기술이 있는 등 우수한 신기술들이 존재하므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6. 품질시험소는 서울시의 건설자재 품질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능력이 미확보되어 서울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외부 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고 있는 문제가 파악되었으므로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능력을 확보토록 할 것.
7. 품질시험소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 등에서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1급 발암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품질시험소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8. 서울시는 '21년~'22년까지 점검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건설현장에 대해 평가 결과 등을 건설알림이에 공개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바, 이를 개선토록 할 것.
9.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이 '16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법률, 조례, 고시 등의 최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편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0. 품질시험소는 건설 현장 부적합 자재를 점검함에 있어 부적합 자재에 대해 단순 반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방안을 검토할 것.

11. 품질시험소의 전기자동차 수리 재검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내년도 검정장비 구매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진하다 판단되므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대응하기 위한 재검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12. 품질시험소 내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3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품질시험소의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행가능한 중·장기적인 장비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1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설계평가회의에 대한 속기록, 채점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일정기간만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된바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것.

[주택정책실] : 26 건

1. SH 매입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SH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다르게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택정책실의 별도 조치 필요.
2. 공사장 강풍 사고 관련 공사현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 동대문 영하우스 옆 한국마사회 지사, 발산역 청년주택 상가 내 홀덤 스튜디오 등 실내흡연, 도박 등 지역 청년 민원 제기.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간선변까지 확대되었을 때 유해시설 접근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사행성 시설에 대해 조치 바람.
4. 리츠 적자가 전체적으로 큼. 특히 3호는 사업구조가 다른 것은 알겠지만 적자가 너무 누적되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임. 리츠 시공사 중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이 있음. 민원 등 사업지연이 예상됨. 사업자 선정을 더 꼼꼼히 신경써주기 바람. 사회주택 지원리츠2호도 사업지속이 불가능하여 청산됨.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5. 매입임대주택 미정산금 관련 분할 지급 계획 3년으로 앞당기면서 금액 차이 발생. 이번 연도 출자금으로 미정산금 우선 상계처리하는 방안 검토 바람.

6. 면목동 공동체마을의 건물들이 누수 등 하자가 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또한 건물설계 상의 문제로 배관, 주차장 등의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관리비 및 렌탈비 기준도 문제가 있으며 관리비 세부내역도 공개를 거절함. 오히려 주거약자들에게 더 불합리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음. 공동체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울시 지원 필요.
7.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세입자 대책 수립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갈등 우려 및 사업지연 우려되므로 제도 보완 필요.
8. 반지하주택 매입 조건에 맹지, 막다른 사도 등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은 반지하주택 멸실이라는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 매입 불가 주택 기준을 줄여, 입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고 있어 공고와 심의가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반지하주택 멸실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함.
9.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7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침수대비시설 설치에만 국한하지 말고, 반지하주택 23만호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확실하게 했어야 함.
10. 법정 필수인력 채우지 못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는데, 무리하게 서울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늘리는 것 같아 우려가 됨.
11. 빈집 관련 옥인동 현장 방문했는데 호수 안 맞고, SOC 시설 낙후되어 조치 필요. 옥인동 일대가 서울의 한복판임에도 방치되어 낙후되어 있음. 재생을 활용해서라도 지역을 살릴 필요가 있음. 법령 개정으로 방치되는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적은 0건임. 부과를 검토해주기 바람.
12. 안심집수리 등록업체 자격 미달,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미비.

13. 에드가 미아 건축주 소유권 이전 관련 서울시 동의 전 이전 등기 완료됨. 철저하게 조사 바람.
14. 에드가 쌍문 일부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고 가등기만 되어 있는 등 제대로 챙기지 않음.
1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 개정 관련 유예기간 두지 않고 의회 사전보고도 안 함. 민원이 많은데 문제된 지역에 현장방문 해 보기 바람.
16. 옥탑방 주거환경개선 관련 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정 낭비가 되는 부분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신경 써주기 바람.
17. 월곡동 청년안심주택 공사 관련 소음 민원 관련 조치 바람.
18. 입주자들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변경한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취지인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과 어긋나는 정책임.
19. 전월세정보몽땅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등 분기별로 공개 중인데 월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20.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풀에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사례가 발견 되었는데, 특정업체의 임원으로 확인되었음.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 이기 때문에 올바른 강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업체 홍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강사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21. 주거복지센터 SH 대행방식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음. 고용 문제 등 장기적인 계획 검토해서 추진 바람.

22.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를 자체점검 하지 않고, SH공사의 감사결과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있음. SH공사는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에서 계속 최하인 C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체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짐.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23.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매년 업무매뉴얼을 9월에 나누워 줌. 연초에 배부토록 해주시기 바람.
24. 지원주택 공급량이 저조한데, 경쟁률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지원주택 공급은 매입임대주택 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함께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함.
25. 청년안심주택 관련 오픈채팅방에 후속 임차인을 모집하는 양도 글이 많음. 공급 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 관리에도 신경 써주길 바람.
26. 청년안심주택 사업 허가 및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이 적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랑구 청년안심주택 조망권,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조치 바람.

[미래공간기획관] : 14건

1.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통합’이라고 보고하였지만, 마을건축가 중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사례는 없으므로, 마을건축가 폐지가 맞다고 봄. 향후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2.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 관련 건축가 초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족분을 확보된 시설비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임. (‘23년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 보고)

3. 노들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변경계약으로 제경비와 기술료 요율을 정정했고, 제출한 기술용역 58건 중 7건의 제경비와 기술료 요율이 엔지니어링대가사업기준에 맞지 않음.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람.
4. 노들섬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시 예산편성 전 예산집행 등 사전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5.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정릉차고지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어 자료작성 불성실.
6.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상 서울시 예전 로고 '아이서울유' 수정하시기 바람.
7.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은 물순환국과 중복사업으로 보이며 3배나 되는 설계비의 과도한 증액 변경계약은 행정 미숙으로 보임.
8. 시민생활공간 24년도 예산(안) 미편성은 자치구를 기만한 것임.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9. 시장방침과 시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항이 시장 기자설명회로 인해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진행되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였고, 기존 문래동 대상부지로 진행했던 예산사용액은 모두 매몰비용이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10. 시장방침으로 추진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명확한 방침 없이 여의도공원으로 대상지 변경되고 문화본부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된 것은 아닌지?
11. 예산 집행을 부진으로 사고이월이 빈번한데 시정하시기 바람.
12. 용역 시행일 지연,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이월이 전제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용역사업 관리가 미흡.
13. 재정투입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던 대관람차 조성

사업에 SH 자본이 1,000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SH 자본도 서울시 재정인데 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4.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수방사부지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진출입 불편이 예상되는 바, 수방사부지 부진입로를 지구단위계획중로1-2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디지털정책관] : 14건

1. S-DoT가 2019년 최초 도입하면서 2022년까지 2,500대 설치 예정이었음. 또한 자치구별 센서 설치대수 편차가 크므로 시정바람. 센서 위치 정보를 보안상 이유로 좌표값 제공을 중단했는데 공개바람. S-DoT에 대해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2. WeGO 회비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영어 원문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였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WeGO의 공식언어인 영어로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임.
3.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서울시, 지자체, 통신사 등 각각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통합관리센터 및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장애처리 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 접수 및 처리가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품질제공을 위한 주체별 통합관리 방안 필요.
4.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수 매우 저조. 악성코드 관련 위협이 급증했는데,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들의 MySQL 서버 3306 포트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제보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므로 조치 바람.
5. 디지털재단의 해외출장 국외여비 처리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가 뒤섞여 있고 어떤 출장에는

2~3개의 사업예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6. 메타버스 이용객이 적으며,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세분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메타버스 평균 체류시간이 너무 짧음. 이에 대한 원인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확충해주기 바람. XR, MR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콘텐츠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해외유저 확충도 필요함.
7. WeGO 사무총장은 3년마다 선출하고, 26년까지 서울시가 의장도시임. 사무총장은 시장님이 임명하는데, 정관을 보면 임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연임이나 채용절차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없음. 정관개선 검토하고 방향에 대해 보고 바람. 사무총장 업무평가 만점을 준 위원도 있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사무총장이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에서의 재정자립도 실적도 낮고, 실제 회비징수율이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8.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상금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건이 있음. 사전에 업체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으며, 업체에만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음. 조속히 대책 마련해주기 바람.
9.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키오스크 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 키오스크 자체를 활용하지 않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관리가 안 되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해보기 바람.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되고, 공급사업자를 위한 특혜가 되면 안 됨.
10. 시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 수 대비하여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11. 자치구 CCTV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CCTV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지?
1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2019년 91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2.2배 증가했음. 유사 중복 서비스, 유명무실한 시스템, 기타 통합 또는 대체 가능한 시스템을 점검해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등 유지보수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13. 조례에 근거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WeGO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 위반이므로 제출해야 함. 사무총장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회비 징수율이 낮음. WeGO 겸직규정 등 내규가 미비함. 정리가 필요함. WeGO가 IMD와 협약형식으로 3년, 총 10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음. 법인이 아니라 입찰과정이 없었는데, 정책관에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었음.
14.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 9월 말 집행률이 21.0%로 저조함.

[서울주택도시공사] : 42건

1. SH는 서울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의 정책 실행기관임. SH는 서울시의 출자기관이며, 정책 및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해야 함. 매입임대 사전약정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매입이 가능한 기존주택이 많으니 매입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알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SH도시연구원이 연구개발비 유용 외에도 복무관리 등 지적사항이 아주 많음. 문제 발생 당시에는 연구원장의 방침으로 국책과제를 관리해 옴. 시정해주시기 바람.

3.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앞서가서는 안되며, 정책에 맞게 따라가는데 공사의 의무 아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람.
4. 건설현장 안전왕 선발 평가기준 상 재해발생 건당 감점을 부여하는데, 재해 발생 현장에 안전왕 선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임. 개선 필요함.
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관련, 2022년 11월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언론보도한 후 1년도 안되어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음. 용역을 중단할 정도로 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임. 본 조사는 국토부나 LH에서 하지 않는 SH의 차별화된 조사인 만큼, 중단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기존 패널을 활용할 수도 있음. 방향을 바꿔 검토해주시기 바람.
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관련, 응답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줄었고 임대료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데 공사는 5% 임대료 인상을 단행함.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게 아닌지? 6억이 투입된 조사인데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음. 이런 무의미한 용역은 해서는 안됨.
7. 공사 직원에게 1.2%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함. 공기업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차 개선해주시기 바람.

8. 그레이트 한강 관련, 행감 기간 중 제1본부장을 포함한 SH직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것은 맞지 않음. 주택정책실 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니, 행감 기간은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됨. 이런 일 없도록 해주기 바람.
9. 그레이트 한강 사업 관련, 선박 건조기간을 1년으로 잡았는데 가능한지 의문임. 세빛섬 누적적자가 1천억인 상황에서, 한강 사업에 SH가 재정투입 적정성과 성공여부가 우려됨. 템즈강은 관광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데 반해, 한강을 관광용으로 했을 때에는 엄청난 적자가 우려됨.
10. 그레이트 한강사업을 당초 PFV를 검토하다가 자회사로 전환하게 되어 PFV 출자타당성 용역결과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미리 철저히 계획했어야 함. 사업 방식도 결정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세빛섬에도 적자가 많은데, 몇 조짜리 한강 사업을 할 역량이 되는지도 의문임. 리버버스가 교통인지 관광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SH공사가 괜히 나서는 모양이 될 수 있음. 이크루즈 특혜 시비 소지가 있음.
11.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관련 비위 및 횡령사건이 발생했음.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봄. 또한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을 허용해 준 사유와 횡령금 회수 여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함.
12. 마곡엠밸리 4단지 시설민원 관련 CS기동부에서 처리한 보수를 관

리사무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공사의 소극적 업무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시설보수 접수, 처리 등)에 대한 태만이 확인됨. 해당단지의 시설보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세대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외면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민을 차별하고 있음. 임차인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13. 서울시에서 올해 6차례 매입실적 제고 개선대책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음에도,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함. 올해 매도 물량이 7천 건 넘게 접수됐으나, 이 중 계약체결은 86호뿐임. 매입실적의 부진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또한, 前 박원순 시장 시절, 디스커버리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이 사실인지? 언론에 소개된 해당 사건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부작용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감정평가사 및 심의위원을 통해 매입하는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임. 이에 대한 김현동 사장의 의견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할 것.
14. 매입임대 감정평가 관련, 공사에서 지정한 13개 업체 중에서 매도인이 선택하는 것은 매도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봄. 동일한 감정평가업체라도 매도자측이 공사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15. 반지하 매입실적이 저조함. 빌라 등 매입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공공이 매입 후 보유하는게 좋다는 입장인데,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해 온 기조에 대한 반대인지? 연내 100% 달성이 가능한지? 매입임대 공급물량 정할때 주택정책실과 협의하지 않았는지? 매입임대 공급 달성률 5.6%에 불과함. 예산이 편성되면 100% 달성해야하는데 물량목표를 설정할 때 반대했

다고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지 않는게 맞는 것 아닌지? 서울시의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편성의 기본 지침을 위반한 것임. '24년도 편성예산은 사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택정책실과 미리 협의해주시기 바람.

16. 반지하주택 매입이 힘든 이유는 매도인이 복잡한 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임. 등기부등본 등 SH가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SH가 챙겨서 매도인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전세주택 우선제공 등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감정평가금액 외 인센티브가 필요함.
17. 벌떼입찰 관련, LH 벌떼입찰 기업이 SH공공주택용지도 낙찰받았음. 이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사 내부감사를 통해 당시 공공주택용지 담당 직원들 감사가 필요함.
18. 서울링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 공동제안사업자 공모를 위한 용역계약을 공모와 함께 진행하였는데, 계약 없이 미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 사업규모가 100배 확대되면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 매립지 안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절차상 문제 없이 줄속 행정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람.

19. 서울시와 SH의 정책수행에 있어 입장차이가 커보임. 타워펠리스급 고급임대주택, 백년주택,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매입임대주택임. 사장 한 사람의 소신과 철학이 시민에게 절망을 주지 않기 바람. 서울시가 밀린 돈 주지 않는다면 재정부담을 탓하는데,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한강 사업을 추진하는게 모순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힘써주기 바람.
20. 세운4지구 지방공사채 발행 관련, 시의회 재보고 실시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이메일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임의로 시의회 보고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상 시의회의 동의 없는 무승인 발행에 해당하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세운4구역 지방공사채 발행 관련 업무실패 전반을 점검하기 바람.
21. 소셜믹스 취지는 좋으나 임대주택 차별문제는 여전함. 임대 주민들이 아파트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 분양/임대세대 갈등이 심화됨. 일부 사람들로 인해 임대세대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있는 만큼, 입주자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체 저해 행동에 대한 재계약 불가능 패널티도 있어야 함.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횡포 등도 제도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해주기 바람.
22.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지하 입구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는 아주 가파르며, 연석에 재차 부딪힘. 조속한 대책 마련 요청.
23. 아파트와 비교해 매입임대주택 시세는 취득가액 대비 자산가치 상승이 거의 없음. 일부 자치구는 취득가액보다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자치구별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심함. 자산공개 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공개 필요.
24. 옥인동 빈집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음. 관리주체인 SH가 꼼꼼히

확인해야 함. 과거 SH는 빈집뱅크 구축, 체계적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직도 축소됨. 빈집 정비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 있음.

25. 올해 임대주택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작년대비 2배가 더 늘어났으니 SH공사에서 원인분석 및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올해 임대료 5% 인상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닌지 원인분석이 필요.
26. 위례17단지 결로 등 하자민원이 많은데, 서로 입장차로 인해 행정심판까지 고려 중. 즉각적인 AS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27. 위례단지의 시설보수 지연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인원 보강 및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AS,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요청.
28.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관련, 인천시는 SH와 같은 상황에서 사전에 행사를 취소한 데 반해, SH는 어반스쿨 행사를 강행함. 협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를 시행하는 등 법적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는지? 잘못됨을 인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치가 필요.
29.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홍보 부족 때문인지 인권센터가 아닌 주변 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피해직원들은 따돌림, 가해자 처벌 수위가 약할까봐 신고를 꺼린다는 결과가 있는데 강한 처벌조치와 강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람.

30. 임대단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약 44%가 기준 충족을 못함. 신정양천, 남산타운 등 주차면수보다 차량등록대수가 월등히 많은 단지는 설치가 어려울 것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설치기준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개선 방안 마련.
31. 지능형 홈네트워크 예비전원 미시공 관련, 소멸시효 기간 내 있는 8년 동안 절감됐던 사업비가 지금 하자보수비로 지출되는 것임.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공지해야 함. 10년으로 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분양세대도 보수를 할 것.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보고 할 것.
32. 청년안심주택 관련, 홈페이지에 차량소유 관련 안내가 잘못되어 있어 예비입주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 즉시 수정하고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주기 바람.
33.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강력범죄를 살펴보면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폭행, 강도, 상해 가해자들 관련 조속히 강력 조치를 해주기 바람.
34. 터무니있는 희망아지트 관련, LH와달리 SH는 입주자 소득기준 등을 보지 않으며, 서울거주기준도 없어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입주단체 8곳 모두 재계약했는데, 활동실적보고서는 사진도 없으며 내용이 부실함. 재계약 기준 자체가 60점으로 너무 낮고, 심사위원이 4명이고 심사가 엉터리인 것처럼 보임. 재계약 시점에서 상버 정리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여지며, 입주단체는 정치적 성명을 내는 등의 문제도 있음. 이러한 곳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3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당시 부적격자 30% 중 자산/소득

초과가 가장 많았는데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부적격자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예비당첨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상의해주시기 바람.

36. 토지임대부 사전예약 관련, 반값아파트라는 말에 혹해서 분양받거나 생각보다 높은 토지임대료로 청약 취소할 것이 우려됨. 높은 경쟁률만 광고하지 말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추후 임대료 증액도 신중히 검토 요청.
37. 폭행, 시내출장비 부당수급,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등 사장님 취임 이후 징계 10건 발생.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함.
38. 필로티형 매입임대주택 내진성능조사 관련, 확실히 검사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
39. 하자관리가 부실한 업체 2곳이 제재 이후에도 지속 계약 중인 것으로 드러남.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적극적인 제도정비·개선해야.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계약 관련 사항조사 통해 후속조치 필요.
40. 현재 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지하주차장 높이가 법정 최저수준으로 확인됨. 고품격 백년주택이 목표라면 지하주차장 층고, 경사로폭 등 기준을 개정해주시기 바람.
41. 희망하우징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이 아닌 1년에 2번 모집공고하여 수요학생이 있어도 입주를 못하고 있음. 개선 필요.(정릉 희망하우징)
42. 희망하우징 관련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자주 고장남. 신속 조치 필요.

[서울디지털재단] : 7 건

1.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고충처리 조치결과를 전자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전사 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블라인드를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 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모색하여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충처리 접수 시 개개인에게 적합하게 피드백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함.
3. 연구보고서 발간 관련 관리 부실 및 내용 중복을 인지하고 시정 바람.
4.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며 현재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임.(스마트시티 서비스기획 컨설팅, 로봇을 통한 치매케어, 빅데이터 활용 버스노선 변경 등)
5. 재단에서 해외용역 발주를 하면서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하여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가장 높은 금액 낙찰됨. 이후에도 긴급입찰,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입찰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특정업체가 계속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니, 향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함.
6. 재단의 직접수행 사업은 21년 7개에서 23년에는 2개로 줄었고, 용역 및 혼합사업이 대폭 늘었는데, 용역 관리만 하는 것은 재단의 올바른 역할이 아님. 직접 수행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조직 증원도 안 되는 것이니, 재단 역할 재정립 필요함. 2023 디지털 정책연구 사업은 직접수행한다고 자료제출 하였으나, 실제로는 용역사업임.
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단 고충처리위원회관련 답변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개최 내역이 없다고 적시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주의하길 바람.
- 8.

도시계획국] : 15건

1.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의 재정비 용역기간과 유지기간이 2년 반 정도로 비
슷하여 법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인 5년인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개선 바람
2. 제319회 정례회의에서 시정질의 했던 취락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추진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2024년 예산이
요청되었다면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3. 도시계획국 산하 위원회 운영 시 중복 위원회 위축 제한을 두고 운영할 필
요가 있으며 제척 회피가 실제로 잘되도록 신경 써주길 바람
4. 실질적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방안
마련 바람
5. 보다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검토 바람
6. 고도지구 뿐만 아니라 경관지구 등에서도 높이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구
제 방안이 필요함
7.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과 한강변 특화 경관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간 상호 협조를 통한 추진 바람
8. 준공업지역은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일자리 중
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한 산업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 제도 마련 시 고려 바람

9. 「2040도시기본계획」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목표인 탄소중립의 실행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0. 자치구마다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기본계획이 법제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11. 최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 시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 고민이 필요
12. 「비온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 관련, 국토부가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제도에 대해 구역 지정 기준, 계획기준 비율, 개발이익 환수, 민간개발 관리, 공공기여 산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용역 추진 필요
13.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간선도로변 기준 명확화와 인센티브 방안 및 개발 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고민이 필요
14. 국가중요시설의 보안·방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재검토 바람
15.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곳의 사유를 주민에게 잘 알리고,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균형발전본부] : 10 건

1. 대현산배수지 공사현장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2. '25년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연남교, 중동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25년에 완료할 것

3. 월대 주변공사가 아직 진행중이라 시민 불편 많으므로 빠른 조치 바람
4. 도심 내 많은 녹지 조성이 반드시 좋은것인지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음
5.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확보 관련, KBO, 구단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대처가 소극적이므로 시정 조치 바람
6.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시민 안전이 중요한 요소임. 잠실 MICE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KBO 및 두 구단과 협의 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해주기 바람
7. 도심부에 주거 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8.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 되지 않은 사업들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영역에서 통합하여 추진되는데 의미가 있는지, 구로구 온수산단은 특례해제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9. 국가상징가로 조성과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와 다른점은 무엇인지, 국가상징가로와 일반도로와 차이점, 일반거리 개선사업과 차이점에 대해 보고 바람
10. 서울역~한강 구간은 국가상징가로와 매칭이 되지 않고, 국가상징가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므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것

[디자인정책관] : 15 건

1. 작년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은 조례근거 없는 DDP 시설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DDP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2. 서울라이트 DDP 대비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전시기간과 예산 대비 성

과가 저조한 편인데, 향후 사전 홍보 강화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함

3. 표준디자인 개발 시 디자인 요소만 보지 말고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나, 지하철 캐노피 디자인에서는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4. 지하철 역사 유희공간 프로젝트 때문에 '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제출된 약자 동행 디자인 개발의 사업방향이 변경된 것 같은데,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될 것임
5. SBA의 DDP 공간사용 관련해서 의회와 논의도 늦었으며, 첨단기술공간조성 일정안도 지연되고 있는데 허술함. 디자인정책관에서 DDP를 잘 운영했다면 SBA의 제안이 안나왔을 것임. 관리위탁 3년 기간 동안 기존 공간 철거 및 신규 설치가 반복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될 것임
6. 좋은빛위원회 등의 위원회 개최 시,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게 참석 안내 바람
7. SBA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약 체결 시 위탁방식 및 사전절차(공유재산심의 등), 권한과 책임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 바람
8. DDP 정체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수거보상제로 상업용 현수막 수거가 대부분이고 공공현수막 수거가 미비하므로,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의 인력 확대와 단속권 강화가 필요함
10.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에서 불법 전단지도 정비하는데 집중 정비해야 할 광고물 선정이 필요함
11. 용역 관련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많은데 투명하게 용역 계약 추진 바람
12.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공미술 철거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가 있다면 비교하여 보완점을 명기하여 보고 바람

13.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던 공예문화대전 서울시 예선을 '23년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안됨
14. 벽면 현수막 설치 시 창문을 가리거나 1/5을 초과 등 경우 불법 여부가 구분이 잘되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 건의 필요
15. 경관계획은 법정계획이고 디자인서울 2.0은 행정계획이므로 경관계획 수립 원칙과 방향은 법정계획이 주가 되어야 하며, 상위(관련)계획과 연계해서 수립 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10 건

1. '서울 어울림광장', '서울 약자동행 주간 운영',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이 '22년 예산편성시 유사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고, '23년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약자동행지수의 일부 세부 지표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지표정의서를 재검토하여 보완해주시기 바람
3. 약자동행지수 내 50개 지표의 자치구 단위 측정(평가) 방안 및 공개 시기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시기별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약자와의동행 백서 발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일정도 지연되고 일부 내용에서 '약자'와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등 홍보에 치중한 백서 발간이 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바람
5. 약자동행지수에 사회통합이 세부지표로서 적절한지 등 지표의 측정(평가)에서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가 적절한지 검토 바람
6. 기술동행 네트워크가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및 네트워킹 시간 확대 등을 검토 바람

7. 약자동행을 위한 현장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주도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8.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에서 정보수집플랫폼 고도화를 한다든지,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9.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SBA와의 대행계약 체결 협약에서, 책임소재 명확화 및 SBA의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제출 확인 필요
10. 자치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는 서울시에서 확대 운영하거나 계속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검토 바람

[미래청년기획단] : 12 건

1. 청년자율예산 추진에 있어 기존에 정한 일정과 달리 대시민 투표가 늦게 추진된 점은 잘못되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바람
2. 서울청정넷이 용역방식의 운영으로 인한 부서와 청년 간 서로 소통이 안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3. 청년정책제안통의 대부분 내용이 민원 내용이라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미래청년일자리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 등으로 높고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자치구 청년참여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사용에 정산 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이 많아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바람
6.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경기도의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7.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8.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이 6개월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음. 6개월만에 업무 파악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기업과 참가자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볼 것
9. 영테크 상담사의 상담료가 타 사업의 전문 상담사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이고 상담사들의 개인 영업활동이 우려됨. 그리고 상담료 지급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부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 바람
11. 청년정책 콘테스트가 실현가능성을 낮추고 재미위주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가능성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선 바람
12. 청년센터 공간을 예약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므로 개선 바람

[서울디자인재단] : 12 건

1. DDP의 관리가 분리 위탁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운영을 미진하게 했기 때문인지, 향후 더욱 신경 써서 운영 바람
2.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온·오프라인 운영이 디자인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생각되지 않음. 전면 개편방안이 필요함
3. DDP 외부 공간 이용객의 내부공간 유입방안, 이용률이 저조한 상설공간의 이용률 제고방안, 향후 철거 예정인 디자인랩 1·2층의 대체공간 조성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4. 예비비 감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 역시 예비비의 사용이므로 향후 의회에 철저한 보고 바람

5. 작년 10월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중 소장품 관련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가 미진하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개선 바람
6. 최근 4개년 경영평가 결과를 교훈 삼아 경영관리 전반에 경각심을 갖고 업무 추진 바람
7. DDP운영 공간이 30% 줄어들었으면, 운영 예산도 30% 줄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 바람
8. DDP멤버십 관련하여, 가입률이 전년대비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므로 본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검토 바람
9. 서울마이소울 브랜드 홍보 예산이 과다하며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됨. DDP 굿즈 판매율도 미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바람
10. 디자인기업 판로지원 사업관련, 온라인 부문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DDP디자인스토어 인스타 등 SNS 팔로워를 늘릴 방안이 필요함
11. 내년 DDP 혁신계획안 내용 중 이벤트성 행사 위주인 것이 아쉬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콘텐츠)이 필요함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년부터 대상 건물인 새활용플라자에 대하여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

10. 교통위원회

----- 217건

【도시교통실】시정·처리 요구 : 79건

1.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없애는 방법도 고민해야할 것임
2. 영리목적으로 사업하는 시내/마을 버스에 왜 재정지원을 해주냐는 민원도 있

음. 준공영제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빠른배송 관련〉

3. 청량리종합시장 ‘빠른배송’ 상인이 온라인 주소 입력 시 주소 수정하려 하면 전체 주소가 일괄 삭제되는 문제 빨리 시정할 것
 - 물류정책과에서 그동안 11회 간담회 등 여러 노력은 하였지만 빠른 배송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논의는 부족해 보임
4. 현재 운영기관 콜로세움은 물류 사업 경험이 없어 미숙하고, 배송 실적은 당초 목표 배송 수량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이제라도 콜로세움이 아닌 한진, CJ, 롯데와 같은 물류 대기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 논의해야 함
5.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지원 관련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지원 사업에서 자진반납 비율이 낮음
 - 어르신들이 기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에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지 않아서 반납 비율이 낮은 것
 - 관련 조례에서 30만원을 지원 금액 상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은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량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금액 증가 필요

〈 시내버스 신호위반, 속도위반 관련〉

- 65개 시내버스 회사별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상당히 많음. 반면 버스회사 징계 진수는 저조
6. 시내버스 기사들이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임. 의식 개선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
 - 시내버스 평가 시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삭감되는 점수가 있긴 하지만, 삭감만으로는 위반 수치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음
 7. 서울시와 시내버스 회사 모두 안전운행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고

려가 필요

8. 동대문구 왕산로 유턴 신설 요청

- 동대문구 왕산로에는 좌회전이 안되어서 P턴을 해야하는 구간 있음
- P턴 구간은 용두동 쭈꾸미 골목인데 식당을 찾는 사람이 많고 차량 정체 문제도 있어서 P턴 방식을 유지하는 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유턴 방안을 제안하니 변경 바람

9.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검토

-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 입구에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음. 건너편에 버스정류소와 청량리 수산시장이 위치
-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시장 입구로 나와서 양측으로 연결된 보도를 지나야 하는데 보도 폭이 상당히 좁으며 수레와 전동휠체어들도 많이 지나다녀서 어르신들이 통행 불편
- 청과물 시장 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통행 문제가 해결되고, 도로 중간에 버스정류소도 있어서 횡단보도와 연결하기에도 용이
- 현재 해당 위치에 지장물이 있다는 점을 의원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서 향후 해당 과와 현장 방문 함께하기를 요청

10.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접근성 강화

- 점자블럭이 음성신호기와 거리가 멀어서 음성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
- 더불어 횡단보도 직전 정지를 신호하는 점자블럭이 마모되어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횡단보도 앞 점자블럭 마모 및 점자블럭과의 거리로 인해 음성신호기 사용 어려운 부분 서울 전역을 조사하여 보고 바람

11. 서울시는 백화점에 대해 교통유발 계수를 법령보다 높게 설정하여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경감률도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감 비율을 낮추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경감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 필요
12. 국군의날 시가행진으로 버스 우회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음. 향후 이런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점검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바람
13. 세계불꽃축제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강변북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음. 문제점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1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담당자가 환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음. 담당 부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15. 9호선 1단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관련
 - 올해 9호선 1단계 공기청정기 점검 당시 필터 교체되어 있지 않았음
 -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까지 교체 주기 기준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공기질 관련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 기준에 맞춰 교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음
 - 필터 재고 관련해서도 예비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관리부실이라 판단
 - 앞으로 교체 주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16. 버스정류장 명칭 규정 준수 문제
 - 서남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데 버스 정류소 명칭에서는 근처 아파트 이름이 더 우선하는 실정
 - 서남병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름이 공공시설보다 앞서 배치된 정류소가 많음
 - 버스정류소 명칭 전수조사를 통해 정류소 명칭 신설 및 변경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 필요

17. 주차장 예산 전액 반납 관련

- 강서구 사례처럼 주차장 예산 전액 반납하는 경우 많음
-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한 타당성 조사비, 설계용역비 등 행정비용 낭비가 심한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음
- 자치구별로 담당자 과실로 인하여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면 징계를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

18. 지하철 9호선 운영 관련

-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현재 1단계와 2·3단계 운영사가 다른데, 1단계를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의 경우 평가가 매우 좋음
-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9호선이지만 운영 부분이 다르니 장점과 단점을 함께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임
 - 장점은 경쟁의 요소가 생긴다는 점, 단점은 같은 비용이지만 느끼는 편익차가 있다는 점 등임
- 메트로 9호선이 2·3단계까지 운영하거나, 서울교통공사가 1단계까지 운영해서 운영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

19. 지하철 9호선 동조파업 관련

-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9호선 2~3단계도 당연히 동조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1단계 운영사 메트로 9호선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구조가 다르지만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하나. 9호선 1단계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으로부터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로 계속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길 바람

20.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 문제 관련

- 과거 따릉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모를 써야 해 보급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함. 이제 PM도 동일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

- 이전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운행 속도 자체를 줄이거나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순서
- 현재 PM 때문에 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보도 환경 문제임. 주차 점유료 등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자치구별 일자리 사업으로 해결하는 방법 제안
- 예를 들어 보도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PM을 옮기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 지금 당장 주차장을 늘리고 없는 땅을 마련해 한두 개씩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PM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음. 다만 위법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는 지양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21.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

-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매각한다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노선이 없어지지 않음. 마치 엑시트를 하면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함
- 배당 또한 마치 사회악처럼 여기는 주장들이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스러움
- 우리가 기대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송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음
-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확인시켜 줘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

22. 버스준공영제 관련

- 2004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가장 좋은 교통정책으로 평가받는 환승 할인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음

- 일각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해 마치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좋은 정책을 만든 것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데 시민들이 동의한 상황
- 일탈, 횡령 등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재정지원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호도 안 돼
- 준공영제 안 하면 환승 할인 할 수 없음. 현존하지 않는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한 사인 주지 말아야

23. 마을버스 기사 수급 관련

-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임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양성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할 필요

24. 스마트쉼터 관련

- 사업성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는데 지나치게 버스정류장에 돈이 많이 들어감
-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문으로 설계했지만 현실 여건상 열어 놓고 쓸 수 밖에 없는 상황
-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처음부터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 그래야 앞으로 이상한 사업들이 또 생기지 않음
- 온돌 의자도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것은 알지만 관리운영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인 사업 중 하나
- 오히려 배차 간격을 줄여서 추운 환경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25. 목동선 경전철 관련

- 양평2동에는 목동선 노선이 지나게 되는데,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매우 답답해함
- 양천구에 있는 101번과 102번 정거장의 간격은 385m에 불과한데, 영등

포구의 111번과 112번 사이 거리는 2km에 달함. 주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 형평에 맞지 않는 노선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 계획을 서울시에서 준비해야 함

26. 현대자동차의 미인증 PM 업체 투자 관련

- 현재 현대차가 PM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문제는 해당 업체가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곳으로 아는데, 사실이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
-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인증에 참여하도록 개선할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회적 문제〉

27. 18세 이상에게는 면허 인증 강제하고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 전면 재확인 절차를 거칠 것

28. PM 주차 금지 구역 및 전용주차장을 앱에 업데이트 할 것

29. PM 주차 금지 구역 반납은 금지하고 있지만 주차금지 구역에 업체에서 비치하고 있음. 업체에서 비치하지 않도록 할 것

30. PM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되는 PM을 주민들의 견인 신고 전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것

31. 버스충량제에 서울시 부족 노선 확보

- 버스충량제로 버스노선 변경이나 신설 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동행 버스’라는 사업으로 경기도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옳지 않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일 될 수 있도록 할 것

32. 대형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대형백화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이 통행량 저감을 위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33. 지하철 노후 환기설비 교체 문제

-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던 지하철 공기질이 올해 다시 저감대책 시행 전 수준으로 악화. 4년간 3,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가 없었음
- 다행히 쌍문역, 미아역 등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한 역사만큼은 공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사실이 확인됨. 현재 지하 역사 환기설비 노후율은 79%에 달하는 실정
- 이미 저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결론 난 대책에 수백억의 예산들이 잡혀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은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같이 성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

34.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간 운송손실액 24억원. 지하철 재정적자 심각한데 재고할 필요
- 영주권자 대다수가 중국 국적인데, 우리나라 고령층은 중국에서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함. 상대주의적 개념에도 부적합

35. 저상버스 못 타는 지체장애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저상버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년에 버스를 3회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지체장애인 3명 중 2명은 탑승 거부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향후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내부공간 개선 및 운전원 교육 등 개선 방안 마련할 필요

36.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 확충 관련

-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수소버스 1,300대 보급 계획을 세웠지만,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충전소 구축 계획을 확대하고 특히,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충

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37.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관련

- 위례신사선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 LH 및 SH가 3,100억에 달하는 교통 개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음
- 시민이 낸 분담금 이자로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리는 상황으로, 이는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정액 부담 원칙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했기 때문임
- 사업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 회계에 들어왔다면 금융 수입 발생 등 물가 상승분 보전 효과도 있었을 것
- 향후 시민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LH, SH와 협상에 나서고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

38.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감차에 대한 점수 인정이 높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는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부담없이 감차를 하고 있고 일반 버스 운수회사는 자산이 줄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 감차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서비스 평가 기준이 불공평한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39. 율빠미 버스 기존 노선 조정해서 투입하고 시내버스 감차로 인해 배차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버스 준공영제 목적에 맞지 않음. 차후 대중교통 인원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나 지하철, 경전철, GTX의 노선은 서민들이 생활하는 외곽지역은 커버하지 못해 여전히 소외됨으로 버스의 감차는 서민의 발을 묶는 것과 같으므로 감차 계획을 신중히 할 것

40. 버스운행 실태점검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수정 보완할 것

41. 공항버스 노선 분리 신설에 대해 절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두 개 업체가 갈등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 추진할 것

42. PM 불법전인에 따른 전인비용 조정 검토 필요
43. 교통유발부담금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데 인센티브 강화 검토를 통해 자치구 노력 견인 필요
4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중 ‘주차장 축소’에 대한 재논의 필요, ‘택시, 자전거 이용’ 등 증빙에 대한 확인 필요
45. 티머니 사회 환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환불제도 개선 필요
46. 따릉이 결제수단 다각화로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개선 필요
47. 9호선 1단계 관리운영비 철저한 관리 필요
48. 전기버스 브레이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반영 검토 필요
49. 시내버스 평가 항목에 제동장치에 대한 점검사항 추가 필요
50.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대비한 품질 보증 체계 정비 필요. 국산 배터리 사용과 보급 루트 마련 필요
51. 공항버스 고급리무진 전환 및 좌석수 감소로 시민 불편 없도록 개선 필요
52. 계획대로 공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충 방안 마련 필요
53. 시내버스 사업자 경영상태·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에 ‘기업 지배구조’ 포함에 대해 검토 필요
54.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PM 이용을 금지해야 할 수밖에 없음
55. 택시 지원 예산이 의원 증액으로 마련되는 것이 정례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택시 요금이 자율적이지 않은 만큼 예산 부서와 함께 예산 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 필요
56.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지표 항목과 배점이 연도별로 조금씩 바뀌었음. 서로 다른 지표로 연도별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타당한 정책 판단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57. 사모펀드사 주주들이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준공영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8. 발렛파킹을 맡기는 경우 주차금지 구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 등 불법 주차를 하고 비용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59. 기후동행카드의 온실가스 저감 기대효과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0.4% 밖에 되지 않음. 기후동행카드 도입의 목적인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60. 첨두시간 등에는 버스 혼잡도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혼잡도별 대응 매뉴얼도 없음. 버스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61.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강남대로 등 일부 구간은 극심한 정체로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의 최대 대기행렬을 기준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적정용량을 산출하고 최대한 그 용량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정류장별 적정용량 산출 내역이 없음.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고 버스의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이 되는 정류장 적정용량 산출이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정체가 극심한 주요 정류장의 적정용량을 산출하여야 함
62. 지갑 없는 주차장의 시스템 이용 방법이 어려워 수년째 이용률이 10% 내외로 머물러 있음. 시스템 개선, 사업 철회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3.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64. 택시 감차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2010년 이후 실적이 없음. 목표한 택시 감차 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차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5. 안전검사소의 차량 안전 검사는 1년간 유효한데, 주행거리가 긴 노후 차량의 경우, 1년 안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연식과 함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량 연장 제한 관련 해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6. 택시 요금 인상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은 달라지지 않음. 업계 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서비스 개선 방안과 택시 업계 활성화 방안, 연말 택시 대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67.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68.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문제 관련 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도시철도 계획, 건설, 운영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함
-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통합 매니지먼트 등 새로운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
69.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미지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3년 적발 사항과 함께 향후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24년 차기 임시회 때 보고하기 바람
70.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점검 관련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24년 차기 임시회 때 보고 바람
71. 버스 재정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72. 2020년에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정책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신설되지않은 것으로 파악됨. 신설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신설을 위한 의지와 노력 필요
73. 도시교통실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진출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지?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배당구조로 나눠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하며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74. 표준 운송원가의 적절한 용도 사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이에 관한 감독 위원회 설치 및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한 수입금 공동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사모펀드 투자설계서 확인 및 이상한 부분 발견 시 즉각적인 감사 필요
75. 각 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과 문제가 있는 곳은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한 재정지원 실시 필요
76. 버스 총량제 재검토와 시민 동선에 맞는 노선 조정, 배차 간격 축소 등의 노선체계 개선요구 등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표준운송원가의 적절한 관리, 사모펀드 투자의 감사, 버스 노선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시급
77.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검 및 정비 인력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는 지하철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
- '22.5월 협의 체결과 안전인력 감축 계획의 모순: 최근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안전인력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임
 - 안전성과 전문성의 입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축하는 것은 안전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치밀하고 면밀한 재검토 필요
78. 택시기사 수급난 등 택시요금 인상 후에도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음. 국토부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것
79.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균형발전본부에서 예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도시교통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통상적인 이야기에 그쳤음. 예타제도 개선 및 4개 경전철 예타 통과 등을 위한 TF 구성 필요함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시정·처리 요구 : 15건

1.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소송에 대비해서 향후 개선책과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 보고 및 기존 소송사건 분석으로 소송관리 개선 필요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송 관련
 - 9호선 보훈병원역의 경우 현재 설계와 당초 정거장과 출입구 설계에 차이가 있음
 - 시민들이 더 적합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수용해 설계가 변경됐는데,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이 더 늘었고 발주처에 비용을 강요했다가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
 - 우리 지침이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수정할 때가 되었음. 당시 특수조건이 진접선 및 9호선 4단계 등 최근 사업에도 적용된 사실이 확인됨
 - 현장에서 이런 분쟁들이 재발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서울교통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계약 조건을 적극 개선하고 조달청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
3. 위례선 트램 중국산 부품 관련
 - 위례선 트램 전체 부품 가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을 CRRC라는 중국기업에서 조달하는 상황
 - 해당 업체는 기술 탈취 우려 등으로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기업
 - 국제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향후 수급 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중국산 부품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입찰시스템에서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책 마련할 필요
4. 4호선 증차 대비 진접차량기지의 유치선을 추가 확보할 것

5. 도시철도 공사 시 안전교육을 비롯한 안전에 좀 더 치중을 해야함
6. 안전교육 실시 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 근무 투입 전 음주 및 혈압측정 같은 기본적인 관리를 할 것
8. 위례선 트램 부품 수급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9. 위례선 건설사업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반복됨.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집행 함이 타당함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6개 건설사업이 설계변경 잦은데 불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11.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은 감리 실질적 감독시간 확보, 공공 역할 강화 등이 골자임. 공구별 공사관 중복배치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 분장 필요
12. 감사위원회에서 시공사·감리자 다수 지적, 별내선 1·2공구에 배치된 공사관 리관은 4명이었는데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13. 지하철 역사 외부 캐노피에 사용된 강화유리와 강화접합유리 모두 열에 의한 팽창에 의해 자연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신규 철도사업 진행 시 여전히 외부 캐노피를 강화접합유리로 설치하고 있음.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기관에서는 유리로 설치하고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함
14. 별내선 송변전공사와 관급자재 AC설비를 통신·신호공사, DC설비와 다르게 분할발주로 추진하는 등 개선 필요
15. 별내선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통해 국비확보가 필요하며, 차량기지 증설 진행과 안전관리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시정·처리 요구 : 49건

1.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요구

〈1회용 승차권 및 정기승차권 신용카드 충전 관련〉

- 현재 1회용 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을 신용카드로 충전이 안 되고 현금으로만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판단

2. 더불어 20인 미만 소수 단체에 대해서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부분 보완 필요

3. 내년 상반기 기기 교체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람

4. 지하철 공실상가 활용 관련

- 지하철 공실이 적지 않고 1년 이상 공실인 상가도 많음
- 오래된 공실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공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 보고 바람

5. 승진 소요 최저 근무 기간을 단축하고 4급 직원에 대한 조기 승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직장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급여 인상, 승진, 근무 환경 개선이 중요함
- 당장의 급여 인상이나 처우개선이 어렵다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승진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음
-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상 승진 소요 최저 근무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음

6. 서울교통공사가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되고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들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4급 대상자들이 4급이 가장 많은데 상급만 배수를 1배수로 해놓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 인사규정 시행내규 27조 1항 단서에 보면 상급으로 승진을 위해서는 3년 이상 현업 근무자라는 요건이 필요함
- 현업 근무자로 제한을 둔 이유는 현장을 정확히 경험하고 업무를 이해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이지만, 인사규정 27조 5항에 보면 현업부서의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7. 애매한 현업부서라는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해서 직원들이 그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살펴주기 바람

8.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전동차 구입비용 증가 및 시민 열세 낭비. 과징금 부과와 공사 차원의 손실보상 소송이 불가피

- 현재 입찰 방식은 일정이상의 기술점수만 나오면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가격 중심 입찰임
- 법 위반, 납품 지연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담합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 국내부품 70% 이상 사용을 전제로 해외업체의 입찰허용 등 전동차 제작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9. 출퇴근 시간대에 폐지를 실은 손수레가 문틈에 끼어 자칫하면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사례가 발생. 규격 이상의 손수레 등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지하철 화재예방을 위해 고무발판 전력차단시스템 절연체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10. 지하철역 위생 관리 문제

- 당산역 환승구간에 4개월 이상 오염물질이 방치되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 감사 결과나 업무보고에 따르면 역내 청소와 관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역내 여러 직원이 각 업무를 하면서 해당 현장을 봤을 텐데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
- 해당 구역 및 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에 청소 부실하게 되어있는 곳 없게 조치하여야 함

〈화재 공기청정기 업체 자격제한 등 제안〉

11. 대치역 화재 사건 사례처럼 화재 발생하게 한 공기청정기 업체에는 향후 입찰 시 자격제한 등을 두어야 함
12. 정격전압 낮은 공기청정기의 경우 장시간 가동할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당부
13. 근로시간면제제도 악용 관련
 - 타임오프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자체 감사까지 진행 중인데, 아직도 출근하지 않는 노조 간부들이 있다는 증언이 있음. 제보가 사실인지 꼭 확인해서 보고해주길 바람
 - 전수조사, 징계 절차 너무 느리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일각에서는 처벌 건이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함. 회의장에 배석한 사측 간부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모두 관행적으로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됐고, 이제야 발견된 것.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적당히 덮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 없이 끝날까 걱정
 - 징계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고, 처벌은 어찌 이루어졌는지, 환수는 어떻게 됐

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 노사 협상이나 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사장·감사·임직원은 흔들림 없는 자세를 견지해 노사관계 건전하게 개선하길 바람

- 기존 일탈행위 적발 및 향후 재발 방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청렴감찰처 인력충원 필요

14. 경영효율화를 위한 업무 재배치 관련

-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규모는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도 여타 도시철도운영사와 비교해 비대한 상황
- 인력도 꼭 필요한 곳에는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 업무에 대한 특성과 물량을 정확히 판단해 재배치하는 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
- PSD의 경우 고장 발생이 2018년도에 비해 올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그런데 관련 인력은 428명으로 1년에 1건꼴 출동하는 상황
- 해당 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 인력 수준이 적정한지 산출해 별도 보고할 것

15. 지하철 상가 관련

- 지하철 상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2018년 기준 1,800개가 넘었는데 올해 9월 기준 1,540개로 감소. 흉물처럼 남아 경쟁력 없는 상가를 줄여 시민 동선을 확보하는 방향은 동의
- 다만, 전체 임대료 수입뿐 아니라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유동인구도 많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상가를 임차할만한 매력이 줄어들고 있음

16. 근무협조제도 향후 운영 계획

- 타임오프와 더불어 이번에 문제로 불거진 근무협조도 향후 운영 계획, 사후 대비책 강구해야 함

-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할 것

17. 지하철 입구 및 역사내에 광고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조도 및 크기 등 규격도 제각기임. 표준화된 규격이 필요함

〈서울도시철도 중국산 부품 납품 문제 관련〉

- 위례선 트램 전체 부품 가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견인전동기, 브레이크시스템, 윤축 등 핵심부품을 우진산전을 통해 CRRC라는 중국기업에서 조달하는 상황
- 해당 업체는 기술 탈취 우려 등으로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기업
- 국제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향후 수급 과정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18.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위례트램을 운영할 운영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품 대체 방안을 강구할 필요

19. 향후 열차 및 전동차를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기술평가 부분을 강화할 필요

〈지하철 노후 환기설비 교체 문제〉

-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던 지하철 공기질이 올해 다시 3334억원을 투입한 저감대책 시행 전 수준으로 악화
-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승객 및 열차운행 감소와 비례해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을 저감대책의 효과라고 착각했던 것
- 다행히 쌍문역, 미아역 등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한 역사는 하나같이 공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이 확인됨. 현재 지하 역사 환기설비 노후율은 79%에 달하는 상황

20. 이미 저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결론 난 대책에 수백억 예산들이 또다시 잡혀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은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같이 성과가 입증된 사

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함

21. 또한, 서울시 환경부와 잘 협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율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2. 지하철 엘리베이터 노후 및 멈춤·간힘 사건 관련

-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836대 중 절반 이상이 1~2년 내 법정 내구연한이 도래할 예정
-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멈춤, 연기 발생, 승객 간힘 등 기능 저하로 발생한 사건 사고도 지속 발생 중
- 안전사고는 아니지만 언제든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예후 현상이 지속 나타나고 있는 것
- 하지만 그간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개량 사업은 부진했고 향후 교체 계획도 내구연한 도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소 잃고 아직도 외양간 못 고친 '에스컬레이터 사태' 반면교사 삼아 사전에 교체 계획 제대로 세워야 함

23. 노동조합에 제공한 초과 면적 사무실 관련

-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중. 규격도 내규 기준을 넘어 과도함
- 다수 노동자가 아닌 소수 기득권을 위한 궁궐 같은 사무실 행태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절한 조치 필요
- 정당한 노동운동 목적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특권 영위는 시정할 필요

24.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관련

- 승강장 발 빠짐 사고 예방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동안전발판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측면이 있음. 비용 대비 실효성 의문
- 납품 업체도 2곳에 불과해 독과점 및 담합 가능성 의심

- 비용 대비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

25. 점퍼 플러그 훼손 시 테이핑의 안전 조치 관련

- 점퍼 플러그는 전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부분을 단순 테이핑으로 조치된 상황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신속히 개선하도록 바람

26. 철도차량 제작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능력상이나 구조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

27. 근무자들이 원할 때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할 것

28. 전동차의 신차 구입으로 기존 운영중인 전동차를 대체차하는 것은 맞지 않음. 혼잡도 완화될 때까지 안전이 검증된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9. 전동차 납품 지연 하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 필요

30. 최고위 교육과정 지원 관련 방침 마련 필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관용 원칙 적용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31. 석·박사, 최고위 교육과정 중복 지원 다수, 1인당 상한액 설정이 필요

32. 퇴직예정자 ‘공로여행비’ 지원 중 비위자에 대한 환수 조치 필요

33. 선로시스템 검측시스템에서 드론 관제시스템 전환에 대한 설득 필요

34. 공사 겸직 신고 ‘보수액 없음’으로 제출했는데 실수령 보수액과 겸직 근무 시간대까지 포함시켜 겸직허가자 관리 철저 필요

35. 자회사 채용면접관 중에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임직원 출신 다수 있는데 공정한 인력풀 필요

36. 열차안내정보시스템 고장·예비품 수급·유지보수 등 개선 필요, 서울교통공사에 귀속 이후 대책 방안 마련할 것

37. 자회사 임원에 대한 내부승진을 통한 사기 진작 필요

38. 일부 노조 간부의 근무현황(타임오프제, 회행제도)에 대해 사장, 임직원들의 관리 부재에 대한 개선 필요
39. 직무태만의 노조가 사회적인 합의없이 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 행위에 대한 문제점 지적
40. 빈대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사전 대책을 철저히 계획하고 시행하기 바람
41. 비냉방 역사에 임시로 설치한 이동형 냉방기기의 운영 기간(8월~10월) 중 절반은 냉방기기 운영이 필요없는 기간으로 예산이 낭비되었음. 오래 전부터 비냉방 역사의 폭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무계획적 행정조치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42. 신호시스템은 결함 발생 시 열차 운행 안전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임. 그러므로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에 중점을 둔 입찰방식이 타당함.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사업 등 향후 진행될 입찰에서 타당한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바람
43.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2건의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최근 3년간 82건을 체결하였음. 하지만 업무협약 이후 관리에 소홀하여 무의미한 협약이 되는 경우가 많음. 무분별한 업무협약(MOU)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하고 체결 이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함. 사전·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협약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44. 사내독립기업 9호선운영부문은 사실 경비 용역을 운영하면서 자격요건 없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비전문적 인력을 운영하는 등 임시방편식 인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 협약한 조직진단과 적정인력 산정 연구를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인사 운영을 하고 있음. 또한, 1~8호선과 동일 직급, 동일 직위, 동일 노동에도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고 있음. 9호선운

영부문 인사 운영 전반에 노출된 다양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 바람

45. 서울교통공사에는 역사별로 여성 휴게실이 없거나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휴게실이 많음. 수유실이나 사무실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휴게실이 많음. 또한, 휴게시설 최소 면적은 노동자와 협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 없이 휴게실을 설계하는 등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휴게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역사 휴게실에 대해 일체 조사하여 휴게시설 법령과 고용부의 가이드에 부합되지 않는 휴게실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6. 도시철도 역사·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는 화재에 취약함
- 난연성 소재와 방염처리된 재료가 만능일 수 없으며, 고의 방화한 경우, 유독가스 배출 문제가 심화할 수 있으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별 현장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화재 위험성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역사별 화재 위험성 패턴 예측을 통해 대비 훈련에 대한 구체 계획이 필요함
47. 국내 제작 3사 독과점으로 철도차량 담합과 관련 카르텔이 만연하고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 검찰고발을 면제받은 불합리한 사례 발생됨.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 정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48.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검 및 정비 인력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는 지하철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
- '22.5월 협의 체결과 안전인력 감축 계획의 모순: 최근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제와서 안전인력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임

- 안전성과 전문성의 입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축하는 것은 안전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치밀하고 면밀한 재검토 필요

49. 지난해 지하철 유실물 건수 12만 7387건. 전년대비 125% 증가. 매년 유실물은 늘어가지만 유실물센터 인력은 변동이 없음. 증원 및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

【서울시설공단】 시정·처리 요구 : 74건

1. 업무보고서에 감사실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건과 현안 등을 담아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기 바람
2. 해외학위 지원인력 돌아와서 사직하게 되면 어찌되는지? 해외학위 지원인력 선정 관련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람
3. 市와 협의하여 동파안전계량기 도입 등 동파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5. 계량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6. 수도계량기 교체 사유는?
7.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은 무엇인지?
8.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건수는?
9. 동파를 방지하고자 유리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 없었는지?
10. 市 동파안전계량기를 써보니 어떤 점이 좋은지
11. 자동염수살포장치와 열선 장치의 효과성 비교 사례 등을 검토하기 바람
12. 도로 블랙아이스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3.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많이 설치했는지?
14.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15. 자동차전용도로에 열선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16. 수락산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관련

- 수락산고가차도 방음판 교체 시 방음판 프레임을 기 사용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 요청
- 기존 프레임에서 방음판을 제거하고 새 방음판을 설치하려면 실리콘 제거·프레임 해체·다시 실리콘 작업 후 프레임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 기존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을 썼을 때 가격 차이 및 안전성 등 용역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 요구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관련〉

17.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기울이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문 기관 용역 등을 통해 대기시간 감소에 대해 체계적인 고려를 하여 장애인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당부

- 장애인 콜택시 등록 차수, 운전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를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다수 존재. 심지어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민원도 많음

18. 임규호 의원이 질의한 화장터 관련 사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19. 화장터 관리 감독 관련, 서울시설공단 내에서는 감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향후 보고할 것

20. 서울시설공단 직원 위탁교육 관련

- 직원 외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공정하게 교육받는 것이 중요
- 석사나 최고위 과정 교육은 우선 본업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움

- 더불어 교육 후에 약 3년간 일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주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음. 서울시설공단 측의 개선 필요

21. 따릉이 적자 및 방치 관리 관련

- 많은 사람이 따릉이 이용하는데 불구하고 적자가 적지 않음
- 대여 반납에 대한 민원이 70%에 해당. 해결 노력 필요
- 지하철 입구 등 인도에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방치 되어있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 철저 당부

22. 청계천 수질 관리 관련

- 비가 많이 내리면 청계천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폭우 시 오수가 함께 섞여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등과 협의해서 점점 요망

23. 지하도 상가 공기질 관련

- '21년 및 '22년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 예산 편성에 비해 실제 집행은 많이 남음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와 같은 반복되는 집행 예산에서 실제 예산 집행이 적으면 그 후에는 편성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음
- 해당 부분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길 바람

24.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공원의 공간 활용방향, 유지 보수방법 등과 동물원의 동물복지 동향, 전염병 예방 시스템 등 적용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25.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대 SEMBA 과정에 보낸 인원 수와 선발 기준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SEMBA 과정의 선발 절차에 공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람

26. SEMBA 졸업자들이 경영, 행정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며, 매년 SEMBA 관련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27. 돈이 많이 드는 제도보다는 해외 사례를 직접 시찰하는 등 비용 대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28.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타 기관대비 SEMBA에 많은 인원을 보내는 중인 만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향후 교육과 관련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 서울교통공사는 SEMBA에 5명을 보내는데 서울교통공사보다 인원이 적은 서울시설공단이 10여명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29. SEMBA 졸업자의 교육 이후 업무성과 활용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보고

30. 공영주차장 서울시설공단 민간 위탁 관련

-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는데 다시 민간 위탁 맡긴다는 것은 공단 취지에 맞지 않음
-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민간 위탁을 점차 지양해야 함

〈공영차고지 사용료 관련〉

31.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운영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차고지 토지 가치가 사용료 산정에도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고려를 하여 사용료 수입 증대로 이어지길 바람

- 공영차고지가 29군데인데 사용료 수입은 약 70억에 불과
- 더불어 사모펀드사가 이용하는 공영차고지들도 있는데 사모펀드사가 기타 회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건 맞지 않음
- 차고지 사용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조례상 1,000분의 10 비율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 전문적인 논의와 분석을 통해 제한을 풀어서 유동성 있게 해야 함

32. 근로시간면제제도 남용 관련

-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남용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됐음
-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적절하게 인원에 맞춰 배분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부합하는 것인데 법을 위반해서 추가로 부여됐고 혈세가 투입됨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경영진의 총책임자로서 노사관계 건전화와 정상화에 늘 신경을 써야 함. 그러나 원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문제의식을 가진 임직원도 없었음
- 결국 외부의 감사로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고발까지 이어지고 나서야 인지한 현 상황은 깊은 성찰 필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설공단에 위법한 사실들이 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람

33. 도림보도육교 처짐 관련

- 도림보도육교 처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 설치 당시 공사 감독을 서울시설공단에서 했음
- 조사 결과를 보니 안전 담보 없이 설계, 설치됐고 시공 부적정 사실도 드러남. 꼭 거쳐야 하는 과정과 검사들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 중에 다리가 무너짐
-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이 사건만 보면 서울시설공단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34. 추모시설 봉안당 관련

- 봉안 장소 이동을 원하는 민원이 있음.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동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기 바람

35.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익금 집계 관련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항상 보유해야 차기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됨

-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감사 결과들을 보니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21년도 23억, 22년도 26억, 올해 상반기 10억 차이 발생
- 결국 다음 민간위탁을 줄 때 이 금액들이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될 텐데 정확히 얼마 만큼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는 상황 발생. 사후에야 발견하고 있어 더 정밀한 시스템 구축 필요

36.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시스템 관련

- 장기 주차 수요가 있는 곳은 장기 주차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일 것임
- 그러나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주차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곳은 정기권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음
- 특히, 직영은 대기 순번을 고지받을 이용자의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없음
- 민간위탁 주차장들의 정기권 수요를 확인하고 비율을 정해야 함. 대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37. 최근 서울시의 심벌이 바뀌었는데, 청계천은 아직 그대로임. 신속히 교체할 필요

38. 청계천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QR로 제공되는데,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어 접근하는 데 굉장히 노후한 측면이 있음.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설공단이 철저하게 운영할 필요

39. 따릉이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고 있고 지하철 입구 앞까지 막고 있어 이용률이 높은 시간 때에 집중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0. 장애인콜택시 기름값 빼돌린 주유소, 리베이트 받은 운전원

- 장애인콜택시에 기름을 공급하는 공공협약주유소 중 일부가 운전원과 짜고 주유비를 편취한 사실이 서울시 감시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됨

- 주유소와 운전원의 유류비 편취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서울시설공단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
- 협약에 따라 유류비 소재지 평균 가격의 105% 초과하는 주유소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함

41. ddp 패션몰 3층 공실 관련

- ddp 패션몰 3층 공실이 많음. 주인의식을 갖고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했으면 활성화됐을텐데 안일하게 운영한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
- 공공성 외에 임대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성도 고려할 필요
- 뷰티허브 점포 이전 대상 상인들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살피는 등 세심한 배려와 관리 필요
- 서울시설공단의 사업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모두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 각 부서 책임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서울시설공단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함

42. 방음터널 소재 교체 관련

- 화재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소재를 아크릴에서 아케이드로 비슷한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되는데, 수백억 예산이 투입됨
- 수백억의 예산을 들일 대책인지 효과 의문. 향후 방음시설이 아닌 터널이라는 구조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함

43.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의 인성교육이나 보수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44. 추모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 및 설문지 등을 실시할 것

45. 중랑차고지 기사 화장실이 위생적이지 못하므로 즉각 조치할 것

46. 따릉이 적자가 거의 90억임,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 비용 등 市와 계속 논의

필요

47. 따릉이 결제수단 다변화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개선 필요
48. 15세 미만 사망보험 적용 불가 정확한 공지 필요
49.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관용원칙 적용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50. 지원자격·교육비 환수 관련 '직원 학위취득 지원관리내규' 제2조·7조에 준한 최고위 교육과정 지원 관련 방침 마련 필요
51. 석·박사, 최고위 교육과정 중복 지원 다수, 1인당 상한액 설정이 필요
52. SEMBA 학위 과정 1년은 '과전' 형태로 학자금과 월급을 이중 지원받는데 적절한지 의문임. 학위 과정 지원 시 '업무병행'을 원칙으로 할 것
53. 도로 차선 시인성 정비주기 단축 필요, 품질이 더 좋은 유리알과 도료 정비가 필요함
54. 서울시설공단 성 비위 사건 발생 중 30%가 임원 가해 건으로, 비상임이사 대상 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혁신 필요
55. 사내 교육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율 개선 필요
56. 직원 대상 장기국외훈련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예산 집행기준 준수 철저, 복귀 후 활용 계획 마련 필요
57.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포트홀 발생 잦은데 재발생하는 원인과 아스팔트 함량, 배합 설계법 등에 대해 재검토 필요
58. 얼룩말 세로 담당 사육사 휴가 등 마음 건강 챙김 필요. 동거 스트레스 등 감안해 신중한 추가 반입 필요
59. 지하철도의 비상사다리는 호우 등 재난발생 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임.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도가 있음. 모든 지하철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0. 잠실 돔구장 건립 관련해서 공사 기간동안 대체 구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고척돔 구장이 대체 구장으로 선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 대책 마련 필요
61.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장애인콜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올해에는 오히려 심화되었음. 이는 현재까지 해왔던 교육 강화 수준의 대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조직문화,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6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전원의 음주 측정을 시행하기에는 음주 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실제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행 전 운전원 전원의 음주 측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3. 새싹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고령층을 태울 수 있는 단체권을 없앴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새싹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4. 안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율과 예산 집행율이 매우 떨어짐.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65. 기후변화에 따라 빈대 등 외래 곤충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지만, 서울시설공단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소관 시설 중 빈대 등이 확산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고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보고 바람
66.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 법령 위반과 화재 위험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안내표지·광고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함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안내표지·광고

물에는 다수의 가연성·난연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법령을 위반함

-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다수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 폴리카보네이트는 화재 시 연기발생량이 많고 유독가스 방출하여 위험성이 높음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모두 미흡하여 화재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위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67. 연희-홍제구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저소음 포장 관련

- 연희-홍제구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저소음 포장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및 저소음 포장의 실질적인 효과와 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68. 정기권 불법 판매 제보: 서울시설공단 몰래 주차장 정기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서울시설공단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69. 2020년 감사에서 이미 유사 사례가 지적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서야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함. 민간위탁 주차장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이러한 사건들은 고객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정확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

70. 민간위탁된 주차장의 규모, 불법 정기권 판매 사건에 대한 관리 부재, 그리고 이전 감사 지적에 대한 미처리 문제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에 대한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71. 청계천 메타버스 이용객 부진: 최근 6개월간 청계천 메타버스 이용객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는 처음 도입 시 설정한 목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

72. 따릉이와 비교하여 청계천 메타버스의 활성화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따름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메타버스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73. 현재 청계천 메타버스의 저조한 이용 현황은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따름이와 같이 활성화된 서비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청계천 메타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

74. 화장로 기능보강을 위한 상당 규모의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수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능보강 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서울특별시교육청

1. 지도점검 공무원 31명이 학원 및 교습소 25,000개소와 개인과외교습자 26,000여 명의 교습시간 위반행위, 교습비 위반행위를 지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중해 보이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3. 교육청은 학원강사 및 교습소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4. 교육청이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지원사업(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에 협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체결한 부분 및 사업 내용 등에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5.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
6.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이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7.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패소 시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형태를 파악할 것
8.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
9.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임기 도중 공약 이행 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10. 언론사마다 광고비 지급액의 차이가 큼에 따라 광고비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것
11. 교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할 것
1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청렴시민감사관 채용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위촉에 대한 객관적인 기

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14.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교육청 소속 내부 위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부위원의 비중을 높여 연구용역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15. 학생과 교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 수 감축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것
16. 물리적·학습적 근거를 고려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출 기준을 마련할 것
17. 안전한 디벗 사용을 위한 기기관리프로그램(MDM)의 도입 지연 사유와 사용자가 디벗을 분실했을 때 비용부담 기준(감가상각 등)을 마련할 것
18. 대안교육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위 조례가 폐지되면서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학교 내 석면안전 관리 및 유해성 사업의 담당부서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업무 이관된 사유와 석면 유해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업체가 내부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업체 선정에 신중을 가할 것
20. 석면 관리 업무 담당부서(보건안전진흥원, 교육시설안전과)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학교 내 석면해체 공사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1. 학교에서 실시하는 생존수영 수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명확한 예산 집행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22. 학교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23. 도서관 또는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4. 교육청은 이수초 체육관 공사, 서초중·동덕여중고 급식실 공사 등 관내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중대부고와 인근 지역간의 장기 간 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
25. 유희교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26. 교육금고 선정 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기준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27. 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획조정실장직이 공석이 되어 관련 부서의 원활하지 않은 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부실한 답변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을 시정할 것
28.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국 교육의 변화를 위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9. 행정구역 개편 담론과 관련하여 선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30. 일부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1. 서울미래교육지구의 25개 자치구별 협의체 구성에 있어 자치구별 편차가 심하므로 각 자치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2. 장애인교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시 실제 이용대상인 장애인교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
33.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전담인원의 배치와 전담기구의 설치 등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
34.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이 3곳에 불과함으로 추가로 다른 대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많은 교원이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
35.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관리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주기적인 도서관리를 통해 비치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36. 일부 종립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종교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
37. 전체 특수학교에 위클래스가 추진된 곳은 1개교에 불과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클래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으로 다른 특수학교에도 위클래스 상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
38. 학교 급식에 하루 적정 당류 제공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가공식품 배식을 제한하고 대체 식단을 마련할 것
39. 관련 법령상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관련 법령상 창업기업제품 의무 구매기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40. 시설관리직렬의 비위,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
41. 5년차 미만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들

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2. 갑질신고센터의 신고 접수방식에 실명인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
43. 학교도서관 내에 성교육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는 도서(음란도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4. 교원이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45.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
46. 현재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정규직 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시정할 것
47. 전자칠판이 고장났을 경우 전반적인 수리 방안 및 수업 도중 전자칠판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 교감이 출생일을 조정하여 정년연장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49. 특정 식품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50. 기숙사형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51. 현재 급식비 단가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보고할 것
52.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422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 학교에 비해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3. 학교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 이외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54. 학교내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 발생시 교육청의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
55. 화변기 교체공사 추진시 진행한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표본 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설문조사의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정할 것
56. 학교시설 안전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이 오랫동안 조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 완료 기한을 설정할 것
57. 학교 도서관에 유해논란 도서를 보유중인 학교들의 경우 도서 선정 절차가 권

고사항에 불과하여 도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앞으로 도서 선정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할 것

58.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도시형캠퍼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계획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재고할 것
59. IB 역지사지형 토론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과가 미비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60. 학교급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생태전환교육이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61.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사무소 공간 지원 시 전세권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62. 학교장 등 고위직의 위법사항이 자율감사제를 통해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3. 전교조 등 노동조합의 보조금 지원 시 해당 조합의 목적에 맞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합이 목적외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것
64. 노동조합 사무소에 무분별한 비품 및 경비지원을 중단할 것(비품 외 수수료, 이사비용 등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65. 전교조에 대해 공유재산(화양초등학교)에 사무실 공간 외에 창고 공간까지 제공하는 점, 창고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점에 대해 조치할 것
66. 동답초 어린이창작영화제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 시정할 것
67. 영월야영교육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잘못된 용역 진행으로 예산이 낭비된 점을 시정할 것
68. 과정중심 평가 시 교사가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9.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공무원 채용과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서 성격과 맞지 않는 점을 시정할 것
70.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청 본청에서 공무직을 대규모로 채용하여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조리실무자의 채용을 지원청에서 지역학교의 수요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1. 교원의 겸직신고는 사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신고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것

72. 경계선 지능인에게 난독성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3. 교사가 학교협동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으로서 업무와 교사로서의 교육업무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그 경계를 명확히 할 것
74. 급식 잔반처리 비용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됨으로 타 시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5. 학교협동조합 내에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겸직이 많은 행태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76.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임으로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77. 교육청의 학교 공유재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78.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할 것
79.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의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80. 학교부지를 양도, 사용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1.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청 방안을 마련할 것
82. 디지털 과노출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
83. 공유재산 계약 관련 교육시간의 확보와 교육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4. 교장, 행정실장 교육 연수 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할 것
85. 사교육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해 공교육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6. 최근 빈대 출몰에 대한 예방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집단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유병률 통계 자료를 마련할 것
87. 학생교육원의 집단 기숙 공간을 체계적으로 방역 관리하고, 신체에 유해한 방역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88.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9.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체육 과목 구성 및 교과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하고, 특수학생에 대한 체육 과목 편성에 신중을 가할 것
90.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체육건강예술과와 특

수교육과가 협력가능한 프로그램의 로드맵과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

91. 디딤돌을 통한 예체능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92. 수영장 전대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복합화시설 운영, 유지보수 등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할 것
93. 건축물 용도에 대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대안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4. 특수학교 과밀화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는 학교 밖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을 더 요구해야 하고, 필요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95. 신구초등학교 수영장의 수탁업체(신구스포츠) 관련 계약, 축조 승인 등 행정 처리에 대해 미흡한 점을 시정할 것
96. 신구초 전 학교장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에 관한 위탁업체 선정 계약절차를 진행하면서 낙찰자 선정 과정 개입한 의혹이 있고, 학교장은 공유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7. 학교와 복합화시설의 공공요금에 통합 고지됨으로서 공공요금에 대한 체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8. 학교장 등 최종관리자가 공유재산 관련 고액 미납료에 대한 독촉·압류 등 채권 확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99. 공유재산허가 등 법률 관련 전담변호사의 조속한 채용 및 파견조치 할 것
100.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
101. 청렴시민감사관의 편향성 등 활동 관련 제도 정비할 것
102. 공익제보센터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제도 정비할 것
103. 급식실 폐암 발생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할 것
104. 급식실 환경개선 조치를 조속 이행할 것
105.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6. 교육 후견인제 사업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
107. 유아교육, 생태전환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념편향성을 수정 보완할 것
108.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립유치원 설

립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

109. 일반고교의 서열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110. 학교급식을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잔반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1. 학교급식의 식재료별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공식품, 공산품 구매비율이 높은 점을 시정할 것
112. 지역마다 필요한 조리종사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어려움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3. 항공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 시설 개선을 촉구할 것
114.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5. 동북중·고등학교의 이전 설립 문제 해결과 둔촌동 재개발 이후 늘어난 학생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6. 통학로 전수조사의 결과물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7. 초등학교 통학로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선임된 구성원 중 안전 전문가나 특정한 전문분야 식견을 가진 사람이 없어 유권해석을 내려줄 사람이 없으므로 협의체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시정할 것
118. 지역청에 안전전문 관리자 배치가 미흡하므로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19.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이 120억 가량 되는데 경직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예산은 5억에 불과함. 따라서 2024년 예산에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증액재편성할 것
120.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주변 재개발로 인한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1. 안전 전담부서 축소 이유 및 현 지역청 배치 안전 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원수 적정여부를 파악할 것
122. 각급학교 통학거리 측정 기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부서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보도 통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3. 학교 배정방법 중 서울시교육청 고시에 규정된 내용대로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한편 문제점을 시정할 것

124. 중대재해 관련 위험성 평가가 미 실시된 현황을 개선하고 학교 및 기관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율을 높일 것
125. 학생들의 디벗 기기 분실, 도난 및 사적 활용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디벗 기기를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6. 사용자가 디벗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을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7. 디지털 교과서 관련 학교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및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128. 디지털 리터러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쉽게 유명인을 통해 광고 및 피싱 사기 등을 접할 수 있어 학생 스스로 유해성을 인식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각매체에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29. 디벗 충전함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130. SNS상 타인을 사칭한 광고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31.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중 유아학비 부대경비(신용카드 수수료) 집행률이 매우 낮으므로 사립유치원 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것
132.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육 사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33. 학생들이 하교 후 또는 방과후과정 공백시간 동안에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및 시설개방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34.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이에 대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135.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 교실 내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망을 설치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청, 통신서비스 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행할 것
136.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유흥비나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한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

는 상황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실질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7.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킨 가해학생이 재범을 범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138.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139. 학교폭력 처분시 주기적인 중간점검을 통해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 충실히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40. 행정소송 등에서 개인정보사항이 있는 경우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여 외부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의식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육할 것
141.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배정과 관련하여 통학거리문제 및 예비 고등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1단계 선발부터 기존 할당비율인 20%를 배제하고 그 이상의 비율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와 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42.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전교조 사무실이 이전하였는데 교육감 특재 사용이 올바른 예산 사용이었는지를 검토할 것
143.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관리 재정비 및 현행 채용제도를 시정할 것
144. 상시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 개선할 것
145.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공익제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센터 내에서 한달간 처리하는 자체조사 건수가 매우 적어 실적이 미비한 점을 시정할 것
146. 공익제보센터장은 그 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 및 업무 편성을 시정할 것
147.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일반학교와 비교시 특혜성 비용으로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해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8. 디벳 사업은 공유형 태블릿을 활용할 경우 기기구입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디벗 활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할 것

149.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어 영재 대상 학생은 한명도 없음.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외국어 영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
150. 서울 관내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제2외국어를 중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 언어 선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판매점과 같은 신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이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2.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등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할 것
153.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각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1인에 불과함에 따라 정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지원이나 변호사 추가 배치 등 양질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4. 교육행정국장은 화변기 교체사업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전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시정하여 교체대상 학교에 정확한 수요 및 선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상할 것
155. 교육행정국장은 화변기 교체 1대당 단가가 기준가격인 17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을 지출한 학교의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에 진행한 공사의 세부내역 및 대당 책정 이유와 그 근거를 분석해 시정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
156.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교원은 연평균 30건에 달하는 반면,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정도로 무고성 신고 규모가 상당함으로 교권침해 감소를 위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157. 사교육 교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8. 지난 10월 실시한 ‘공동조리교 간담회’에서 교육감이 약속한 급식비 격차해소를 위한 본예산 편성, 조리사 인건비 현실화, 급식운영 컨설팅에 대해 검토할 것
159. 저경력공무원 퇴사율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TF구성 인력에 저경력을 포함시키고, 저경력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획일화하여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
160. 교권 침해 대책마련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1. 학업과 생계, 부모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영케어러를 발굴하여 학업지원을 검토할 것
162. 청소년들이 미(美)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가짐에 따라 섭식장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3. 공동조리교 급식비, 유당불내증을 가진 학생들의 대체 급식문제, 중증장애학생의 섭식장애 문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4.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제2호, 제7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쪼개기, 돌려쓰기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5.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에 균형있는 지원 방안 마련할 것
166. 용산구(용암초, 이태원, 한남) 통학로 주변 설치예정이었던 과속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할 것
167. 학교 내 흥기사고 문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대비할 것
168.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원별로 분류하여 검색이 용이하게 개편할 것
169. 중복되어 규정된 조례를 통합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사회적 가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70.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것
171.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였음에도 교부금을 단순예치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고, 기금 운용 지침 및 당해연도 세입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회계처리 할 것

172. 학생 안전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학교-주민과 협력하여 조사결과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할 것
173. 유치원평가를 자율에 맡긴 셀프평가로 진행하다보니 인접한 유치원들 간에 평가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일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할 것
174.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초중고 도서관에 유해 도서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닌지 판단 후 조치할 것
175.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집행정지로 인해 현재 기금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 후 기금계획운용안에 이를 반영할 것
176. 학생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177.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교습소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단속인원에 대한 정수인원 확보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
178.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증가 추세임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문화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79. 산업안전보건, 일자리를 위한 목적으로 특성화고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내신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성화고 진학이 대학진학의 지름길로 변질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부에 건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180. 환기설비 설치한 학교 중 75%이상 학교가 공기순환기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바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공기질을 개선할 것
181.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관련된 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

고, 지침상 소화장치를 소급하여 설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점진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82. 계속해서 지연되는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

183. 학교 내 일부 도서가 학생의 성적 문란과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은 도서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84. 관내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18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강서구 관내 학교 중 보궐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한 학교는 10%에 불과한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할 것

186.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저조한 문제와 일원화된 지침을 마련할 것

187.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안전통행로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통학로 내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통학로 협의체에서 이를 추진할 것

188.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

189. 학교협동조합 내에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겸직이 많은 행태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190. 급식 잔반처리 비용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됨으로 타 시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1.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임으로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지원청

■ 전체 교육지원청

1. 교육장의 전용 관용차량 이용시 차량 사용 취지와 다르게 1회 운행 당 출퇴근목적과 관용 사용시에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시정할 것
2. 편법 운행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관용차 사용 실태를 시정하여 편의에 가려져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고, 특정 사례보다 전체 사례를 조사하여 반복적인 관행을 시정할 것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 23년 예산에 책정된 꿈꾸는 연구실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예산 집행을 시행할 것
2. 통학로 전수사업 결과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검토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1.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장이 인사자문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1.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협력수업의 우수사례에 본래의 취지와 무관한 수업을 우수사례로 지정한 부분을 시정할 것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복합관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 있어 안전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할 것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

1. 교육연구정보원은 뉴쌤3.0에 장애인교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 교육연구정보원은 건강 장애학생들을 위한 꿈나무 무지개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할 것
3. 교육연구정보원은 학교 내 무선인터넷 장애 및 고장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디지털 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 환경 구축할 것
4. 교육연구정보원은 앱서버점검 진행을 할 때 사전공지가 미흡했던 점 시정할 것

■ 융합과학교육원

1. 융합과학교육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정식 문서에 이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2. 융합과학교육원은 노후화된 전시물을 교체할 것
3. 융합과학교육원은 개방형 실험실에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융합과학교육원은 남부분원 영재교육원의 중도포기 학생수가 높음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연수원

1. 교육연수원 수영장 대체 활용을 위한 서초구-교육시설사업본부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장 활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교육연수원은 직무연수과정에 기초학력과정,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있는 것이 연수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
3. 교육연수원은 평화통일교육이 교원연수 과정에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
4. 교육연수원 해외연수로 인한 소속 직원의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이석 요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1. 유아교육진흥원은 다문화 가족 및 다양한 구성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사이트의 사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사이트에서 영어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영어사이트를 재검토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건안전진흥원

1.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향후 학교 석면건축물 내 석면노출로 인한 유해 환경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석면보수키트 및 용품 구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에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행할 것
2. 보건안전진흥원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부서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해당부서에 자료요구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3. 보건안전진흥원은 공동조리교의 경우 급식비, 조리사, 급식운영 시간 등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유희교실 등을 활용하여 공동조리교 급식실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보건안전진흥원은 학교환경위생과 예산불용율이 제출한 자료마다 상이한 잘못을 시정할 것
5. 보건안전진흥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10배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것

도서관 · 평생학습관

■ 정독도서관

1. 정독도서관은 올해 노후시설 개선 공사로 휴관 횟수가 잦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노후시설 개선 시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학교안전분야 전문성이 없는 교육감 측근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
2. 자사고 등 재정결함지원 하지 않는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필요
3. 학교안전공제회는 이사장 채용관련하여 공익감사 청구 상태로 성OO 이사장 박사논문 유사도 검사 실시할 것
4. 학교안전공제회는 인원 추계시 실제 가입수와의 괴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 학교안전공제회는 수업료 자율화학교가 일반 학교와 다른 징수체계를 가지고 있어 공제료 징수체계 일원화 할 것
6. 학교안전공제회는 금년 기금고갈이 예측되는 바 정확한 공제료 추계와 세입세출 계획으로 안정적인 기금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7. 학교안전공제회는 재정결함미지정 학교에도 공제료 지원을 검토할 것

건의사항

889건

1. 운영위원회

37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9건

1. 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이 6월에 통과됨. 시장·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제·개정안을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임. 향후 각 상임위에 놓치지 말고 보고해주시기 바람
2. 직원 체육문화행사에 꼭 연차를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음. 연가처리를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3. 공무원 안전요원 차출 관련, 전문적인 안전요원 용역 투입해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요청
4. 시의회 회의실 부족 관계로 시립미술관 세마홀을 사용하는 사례 다수, 태극기도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음향 시설 및 빔프로젝터 사용 원활치 않고, 유튜브 생중계도 불가 등 문제 발생. 대관시설이라도 꼼꼼하게 시설관리 및 대관 진행 개선할 것
5. '산모신생아지원서비스'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가 첫출산 산모로, 이어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 서울시의회 저출생 특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 점검할 것. 산후관리사 전수 조사 통한 처우개선, 산후관리사와 사모의 안정적 매칭 위한 시스템 구축, 산후관리사전문 교육, 민간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것 (시장비서실)
6.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서울시 합동점검 후에도 바가지 요금 사례가 있음. 가격표시제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7. 을지훈련 기간동안 직장외국인강좌를 비대면 화상강의로 진행함. 내년 훈련때는 가능하면 휴강하여 직원들이 을지훈련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음
8. 서울시는 국외훈련자들의 훈련경비 반납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

음. 보증보험을 통해서 직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람

9. LG트윈스 거리환영회 관련해서 모기업이 있는 구단이고, 서울에 LG말고도 여러 구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에서 축하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음. 여론 잘 살피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람

☐ **시의회사무처 : 28건**

1. (상임위원회 회의장 노후 책상 교체 관련) 언론 부정보도 지속되는데 교체 사유 등 적극 해명 필요
2. (상임위 회의장 자료표출 시인성 개선 관련) 상임위 회의장 내 설치된 모니터가 1개에 불과해 자료 표출에 불편, 모니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의사진행, 의원 참고자료 화면 송출시 시인성 개선 필요
3. (2024년 의사일정 수립 관련) 2024년 의사일정 수립시, '24.4월 총선 이후 바로 회기가 시작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람
4.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관련) 의원 개인별 1회 개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총액 내에서 의원간 상호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의원 개인별 맞춤형 위탁교육 지원 관련) 의원 개인별 1인 1백만원으로 예산 책정, 예산 총액 내에서 의원 상호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정책연구개발비 확대 관련) 임기 2년차 이후로는 의원연구실 비품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활용 저조, 해당 예산 일부를 실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개발비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바람
7. (의원 복지에 대한 안내 미흡) 휴양시설, 건강생활 습관개선 프로그램 등 의원 복지 혜택에 대해 주기적으로 홍보·안내 해주기 바람
8. (의정비 및 월정수당 지급내역 안내)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 관련, 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 분기별 주기적으로 안내 필요
9. (건의안, 결의안 관련) 통과 이후 진행경과 및 회신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10. (회의·행사 공간 마련) 공청회·토론회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며, 예결위 회의실 개편으로 매우 제한적인 환경으로 바뀔. 대체 공간

및 관련 방안 강구 요청

11. (크로마키 포토존 관련) 크로마키 포토존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의원회관 이동 설치 방안 검토 필요
12.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상임위 조사관 업무 중복성) 120개 사무중 76개 사무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 힘의 논리로 업무 떠밀려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13. (의원 명의 공문시스템 관련) 의원명의 공문을 수·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시스템 구축 전까지 정책지원담당관을 통해 의원 명의의 공문이 수발신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14. (증인출석관련) 증인 미출석 관련 재발방지 및 기준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심의 처리 요망
15. (직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인사권 독립 이후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의견청취 등 노력해주기 바람
16. (면접심사위원 구성 관련) 면접위원 인력풀 중 대학교수 비율이 높아 시의회 현장 전문성 고려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의회 내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균형잡인 위원 분포가 필요
17. (현장민원팀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관 같은 전문성 있는 대외직명 마련 필요
18. (직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 직원 사용 노후책상 교체 등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19. (의원실 화상카메라 등 활용) 서울시의회가 3,700만을 들여 2021. 2월 구매해 의원실과 상임위에 보급한 로지텍 PC웹카메라는 21년 12월 13일, 15일 단 2회 사용해 예산 투입대비 활용실적이 낮아 예산낭비 초래.
 - 의원실에 비치됐지만 활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음. 홍보가 필요하며 이미 보급된 화상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해주기 바람.
 - 제10대에 구매한 물품 중 노트북, 태블릿PC, 화상카메라 등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0. (예산편성 및 집행) 서울시의회 30년사 발간사업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단일성 원칙 위반, 포괄적 편성 등 세밀하지 못한 방

침 및 계획으로 사업이 결국 중단돼 예산 낭비 초래함.

-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주문.
- 21.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내년 하반기 정책지원관 신규채용 대비하여 임기제 공무원 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대비책 요청
- 23. (퇴직 직원 예우 관련) 퇴직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 및 퇴임식도 퇴직자에 대해 예우해줄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청
- 24.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관련) 현장보고서 발간 연1회에서 분기별, 월별 발간 검토 필요
- 25.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사업 관련) 임기제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계약학과 등 대학원 위탁교육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자부담도 고려)
- 26. (정책지원관 전문성 확보 관련) 국회 등과 같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 요청
- 27. (의원 교육 참여율 제고 관련) 의원 교육 만족도는 높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분석 필요하며 이후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8.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 관련) 현재 정책지원관 배치 형태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타 지자체 사례 등 조사하여 지원관 배치 형태를 현 사무처형 외 위원회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2. 행정자치위원회

69건

□ 비상기획관 : 8건

1.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연도별 보상금 지급 비율 살펴보면 시비와 국비 차이가 매년 커져가고 있고 갈수록 시비 부담이 큼. 사회복지무요원 급여 등 보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부담을 많이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 건의 노력이 필요함.
2. 지난 9월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 할 것.

3. 예비군 수송 버스 지원 관련하여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당부하며 조례 미제정 자치구의 입법조례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줄 것.
4. 동 방위협의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 실제 상황 발생시 동 방위협의회 역할이 큰 만큼 지원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함. 2024년 부터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람.
5. '안보정책 자문단' 위원구성을 살펴 보면, 출신과 성별이 편중되어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중장년층으로 청년세대 구성원이 없음. 자문단 위원구성 시 다양성을 고려해 줄 것.
6.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업무공조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좀 더 견고한 서울시 통합방위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할 것.
7. 안보 뿐 아니라 기후위기 등 생활재난에 대비하는 훈련도 중요하므로 불안감을 조장하기보다 실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추진할 것.
8. 청와대 인근 통제구역을, 시민들을 위해 좀 더 개방하는 것에 대해 비상기획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8건

1. 직무교육 결과 보고 내용 중 교육생 건의 사항이 다수 있음. 교육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직무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반영할 것.
2. 공익신고 포상금 실적이 저조한데 포상금 신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제보, 신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2018년에 비해 직원 보호장구가 줄어드는 등 수사를 위한 직원 보호 장구가 부족해 보이므로 보호장구 재정비 및 철저한 관리를 요함.
4. 식품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보다 서울시 ATP측정기 등 수사장비가 부족해 보임. 적극적 수사를 위해 수사장비 확충을 요함.
5. 민생사법경찰단 구성원들의 재직기간은 짧고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 조직원들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끌어 낼 수 있는 소신있고 의욕있는 단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머물고 싶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할 것.
6. 사기 등 경제와 환경 분야 수사에 더 집중하는 등 수사에 있어 선택과 집중 노력이

필요함.

7.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보 노력할 것.
8. 화장품, 의료기기 수사실적 한 건도 없음.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의 료기기 판매 단속 노력할 것.

□ 행정국 : 7건

1. 격무기피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
2. 잼버리 지원에 참여한 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될 수 있도록 살 펴볼 것.
3. 조정교부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반 영해주기 바람.
4.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교류 사업 외 신규 사업 등 대안 모색도 필요하니 검 토할 것.
5.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관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배 분을 위한 구체적·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6.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단체의 등록 지역이 아 니라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잼버리 동원 관련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음. 향후 유사한 상 황에서 서울시 의견 반영 필요함.

□ 재무국 : 6건

1. 지방세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편. 타 연구원에 비하여 이직율이 높은 편으로 안정적인 연구원 되도록 노력해줄 것.
2. 지방세연구원 직원들에게 인재개발원 교육 훈련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해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3. 세입 감소에 따라 향후 서울시 재정 관리가 필요함. 학령인구 감소와 1인당 교육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과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조정에 대해 고민하길 바람.
4. 재산세·조정교부금·지방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부서별 TF를 구성

바람.

5. 김포시 편입 이슈가 외형적으로는 서울시 세수 증가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포시 편입으로 사실상 재산세 공동과세 및 지역균형발전 목표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재무 건정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재무국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
6. 인쇄비의 경우 소액이라도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않도록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 평생교육국 : 5건

1.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지원 예산 삭감은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서울린은 실적에 대한 조급성으로 인해 수시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어, 목적과 사업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이 요구됨.
3.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성지식을 얻어 갈까 걱정되니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해주시기 바람.
4. 서울린 플랫폼 오픈 계획 관련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하였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음. 추후 서울린 사업 운영시 차근차근 안착이 된 후 사업 확대를 했으면 함.
5. 청소년센터의 시설 대관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정치·종교적 행사 등 편향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인재개발원 : 8건

1. 임용후보자의 75%가 발령 대기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동점자의 급증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 이후 면접 시험 방식의 간소화 등이 그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동점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시험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할 것.
2. 지난 5월, 5급 승진시험이 당일 취소·연기된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필요함.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및 관리를 강화할 것.
3.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정책리포트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방안'을 참고하여, 제시된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 필요성과 정

책 제언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의 HRD 역량강화 등 혁신방안 검토해볼 것.

4. 특정강사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 있으며, 직원들의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증진을 위해 시의원 등을 강사로 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바람직함.
5. 퇴직공무원들을 강사로 활용한 강의 프로그램 개설 검토해 볼 것.
6.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 발전에 대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 검토해 볼 것.
7.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수직렬이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 확대 필요함.
8. 관련 실국과 연계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함.

□ 감사위원회 : 7건

1.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활성화 필요.
2. 50플러스재단 감사에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부가세 환급 미이행을 지적했으나 국세청의 최종 결론은 오히려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정리되었음. 결국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권위적인 자세로 지적을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3. 평생교육진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을 서울시와의 협의·승인, 이사회 승인·결재 없이 진행해왔다는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있음.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주의'는 부적절함. 오히려 이런 중대한 지적에도 서울시 출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이 출연기관 관리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이사회 13명 구성 중 7명이 공식으로 이사회 성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기관감사는 기관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진행해야 함.
4.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인권관련 담당 부서의 독립 기구화 고민 필요
7. 기강감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내부고발 활성화 필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3건

1. 위원회 고유업무인 고충민원처리 중 이송, 이첩 비중이 높고 직접처리 비중이 매우 낮음. 민원을 분류하고 배분하는 단순 사무에 치중하느라 위원회 고유업무인 고충민원 해소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시민의 고충을 직접 해결하는 직권감사 등의 제도 활성화에 보다 집중해 주기 바람.
2. 민원, 감사, 갈등 조정 등 서울시 타 부서와 중복된 기능이 많아서 방만하고 중복되는 역할만 있을 뿐인 조직 자체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지속적인 지적과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필요.
3. 홍보가 될 만한 수범사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자치경찰위원회 : 5건

1. 자치경찰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올해도 동결. 타 시도와 비교하여도 턱없이 낮은 금액. 경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상향 검토해주길 바람.
2. 유관부서(통합방위태세 관련한 비상기획관, 민생치안 관련 민생사법경찰단)와의 협력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직의 역할 설계가 필요.
3. 지하철경찰대 감축과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찰청 조직개편은 자치경찰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
4. 범죄발생 및 실종 등의 현황을 자치구별 서울시 지도로 맵핑하여 자치구마다 필요한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고도화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6건

1. 홍콩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봉사자들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실적이나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이를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하면 허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고민해주길 바람.
2. 자원봉사센터 사업 중 외래어로 표기된 사업들이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3. '이웃간의 정'을 주제로 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처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주민들 간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도 센터 사업으로의 연결 방안 마련 건의.
4. 자원봉사 20년 평가를 통해 센터의 정체성, 나아갈 방향 등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체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5. 공무원 등 직장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6. 자원봉사센터의 지향점과 가치를 명확히 마련하여 분야별로 사업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서울장학재단 : 2건**

1. 재단 재산의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 누락 되어 있음. 다시 제출 바람.
2.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의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적절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3건**

1. 중복·유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심을 잡고 기관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 추진했으면 함.
2. 50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등 기타 평생교육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감사 지적에 따른 기관 차원의 충분한 의견 개진 필요.
3. 감사위원회가 정원 증원 및 직제 개편 절차에 대해 부적정으로 지적한 사안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리할 필요 있음.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1건**

1. 2020년 이후 이행실태감사, 특정감사, 기관운영감사 등 크고 작은 감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음,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잦은 감사로 인해 업무 지속성이 유지 가능할지 우려됨.

3. 기획경제위원회

----- 103건

☐ 기획조정실 : 19건

1. (고향사랑기부제 관련)경복궁 쌀, 황실 배 같은 상품은 계절별로 수량 차이가 심함. 품질 표시 대신 구매 가능 시기나 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 답례품이 여러 종류 있는데 일부 품목은 인기가 거의 없음. 품목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ESG 촉진 관련)공공기관 ESG 확산과 관련해 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ESG 관리 목록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모색 바람
4. (마을변호사·법무사 관련)대한 법무사 홈페이지에 마을법무사 배정현황 기준이 21.5.31.임. 현재 기준으로 현행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필요
5.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얻은 기관들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6.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대외협력기금의 국제계정과 국내계정을 분리해 각각의 조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8. 서울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비용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에 비해 과도해 보임. 적절한 표본 기준 고려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적절한지 살펴봐주기 바람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부실화 우려됨.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기금 사업 관련 대책 마련하고, 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상환 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람

10.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 재단 경영혁신 관련)통폐합은 보류되었지만 이후 혁신안 추진에 대해 기초실 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11. 서울시 및 산하기관 유튜브의 가성비가 떨어짐. 민간 방식 채용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유튜브 채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 바람
12. 임용대기자가 오랜 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향후 채용에 있어서 정원 규모 등 예측을 정교하게 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 바람
13. 투자·출연기관 노조사무실 제공 관련 시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노조사무실 사용조건 및 기준 마련되면 보고해주기 바람
14.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연간한도초과로 고발조치되고, 과도한 징계 건수 발생 등 기강해이 심각해보이는데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음. 교통공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 바람.
15. 창의 행정의 개념에서 조직문화의 자유롭고 유연성 있게 변화되도록 노력 바람
16. 투자사업은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이므로,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의 구간 또는 예산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바람
17.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 필요
18. (서울시 세입전망 및 예산편성 관련)급변하는 대내외적 정책환경 속에 서울시 행정인력만으로 세입 예측 어려운 것 이해하며 서울시 예산편성권한 존중. 그러나 현재 서울시만의 세수전망 또는 관련된 경제상황 예측이 없음. 외부의 경제·세수 전망에만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의 행정과 서울시민을 위한 편익을 고려한 종합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음

19. 기존 예산에 일률적인 감액편성 기준만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 내외부 자문과 기준을 평가하는 체계도 없음.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 및 자문할 수 있는 부분 마련 바람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포함) : 11건**

1. (테스트베드 확장 관련)인천 등 인근 지자체와 테스트베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2. 동행일자리 사업 기존 참여자(저소득층, 장애인) 외에도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중류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 할당을 검토하기 바람.
3. 출연기관에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 동일업종 3년 이상 임대료 감면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향후 임대료 감면 상황 발생 시 고려하기 바람.
4. 스마트앵커 사업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비 분담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전략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던 스마트앵커 사업 추진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 제출해주시기 바람.
5. (서울형 R&D 관련)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라 풍선 효과로 인해 부실 R&D 사업들이 지자체 R&D 사업 쪽으로 흘러들어올 우려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 서울콘
 - 부산 EXPO 개최 확정시 서울콘과 콜라보레이션 고민 바람
7. 친선도시 관련
 - 유럽의 수도 중 규모가 큰 베를린, 바르셀로나, 런던 등이 우호도

시로 남아있는데 친선도시로 격상하려는 노력이 필요

8. SBA 사업부문(국제유통센터 및 서울메이드스트리트 운영) 등 감사 필요

- 국제유통센터 및 서울메이드스트리트 운영 관련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및 감사요구

9. 드론교육 시 사생활침해, 범죄 등 단점에 관한 교육 추가해줄 것

10. 취약계층 취업 지원 대상자 기준(보훈처) 확인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일 경우 취업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11.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관련

- 예산투입에 비해서 이용자 사용이 적은 문제

- 사용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풍물시장,

먹거리창업센터 포함): 17건

1. (반려식물 관련)반려 식물 병원 개원하여 진행 중인데, 홍보 진행 정도나 클리닉 센터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함

2. 어르신에 대한 보급상황(자치구 보조금)은 목표치를 초과하였으나, 청년 보급은 서울시 직접 사업으로 3곳에서밖에 진행되어 미달 우려가 높는데다 청년분포도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내년 계획 수립 시 조치 필요함(청년 분포도 고려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 전환 등)

3. 아동보호시설 자립준비 청년에게도 확대 필요함

4. (지역사랑상품권 관련)경기, 인천 같은 곳은 카드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디지털 약자들은 접근이 어려움. 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건의함

5.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위·수탁 협약 해지 이후에도 관련 업체가 무단 점유 후 사기 행각을 벌인데 대해 서울시의 책임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6. (서울풍물시장)서울풍물시장 임의증축 공사로 상인들이 영업하지 못하고 있음. 사용료 내지 관리비 면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심도있게 보기 바람
7. (서울풍물시장)전통문화체험관이나 관리실은 내부로 들어가야 함.(2층으로 올려주기 바람) 그렇지 않을 경우 통로를 막아 풍물시장 돌아다니는 분들이 답답해 함
 - 스타벅스 유치를 위해 2층 피난구 계단을 정상적인 계단으로 피난구를 쓰시지 말고 바깥쪽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것이 맞음
8.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체납 문제에 대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액의 회수조치를 하기 바람.
9. 서울풍물시장의 폐쇄 및 재정비 방안 검토하기 바람.
10. 수탁기관 선정 시 과도한 정치편향성 있는 단체는 지양해주시기 바람.
11.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경우 ‘감정노동’의 개념정의가 불명확하고, 사업대상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음. 시행한 사업들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향후 통합 운영 시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 수립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12. (서울배달플러스)서울배달플러스가 6개 앱 컨소시엄으로 운영 중인데, 땡겨요 제외한 나머지 5개 앱은 점유율이 낮음. 왜 6개사를 고집하는지?
13. 실적이 저조한 기존 6개사와의 협력보다는 대형 3사와 협력하여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14. (서울페이)제로페이, 서울페이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15.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전수조사 및 환수조치 필요.
16. 내년 광화문 푸드트럭 운영시 관할 구청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미신고 불법 푸드트럭을 단속하고 고발 등 강력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17. (서울노동자복지관/강북노동자복지관 관련)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지관 공간을 무단사용이 아닌 사용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며 공간을 사용해왔음. 노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단체가 입주하고 있었던 것임. 이미 나갈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공간을 알아보는 중이므로 너무 재촉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2건

1. 시립대 정문 상징조형물이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빠르게 추진하기 바람.
2. 대기업이나 첨단산업 기업과 MOU 등을 체결해 학교 발전을 위해 기자재 등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시립대의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젊고 유능한 교수의 영입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휘카페를 통해 청년 자립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 지원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5. (등록금 논의 관련)현재 등록금 관련 논의가 인상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구성원 간 갈등이 우려됨. 결과별 세부 플랜 구축 필요
6. 등록금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서울시 학생 장학금 확대 등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

면 적극적으로 힘써주기 바람

7. 시립대 교수는 공무원이자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육자임. 품행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람
8. 초빙교수 제도가 서울시 간부 퇴임 전 피난처 용도나 특정 정파인물 채용 등으로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노력바람
9. (강사 재임용 평가항목 관련)강사 재임용시 평가항목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업평가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등 평가항목 기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 강의평가 항목 강화 등 인적 자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바람
10. (시립대 반값등록금 관련)반값등록금 시행과 서울시립대 대학경쟁력 약화와는 관계없음. 지나친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 학생 부담은 연간 6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음.
11. 서울시의 역할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부담 가중이 아니라 연구비 증액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에 있으므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등록금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 바람
12. 대학평가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 등록금 외에도 여러 부분이 포함되는 사안. 반도체학과나 의료보건대학 같은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과 신설 방안도 제안을 한 바 있음. 대학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 연구해보아야 함. 서울시립대가 국내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람.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서울농수산물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17건**

1. (밀키트 사업 관련)대중성을 고려한 밀키트 사업 메뉴 확대 모색과 동시에 판매처 확대도 고려 바람

2. (강서시장 관련)대법원 판결 이후 주차장을 격리한 상태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판단함. 지금의 격리 구조 개선 검토 바람
3.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관련 하절기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가락시장 대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대파 거래 허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가락시장 외곽이 환경정비를 통해 많이 개선됐지만, 과일나무 식재 등 담장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람.
6. 전자송품장 도입 관련 고령층인 출하 농업인의 적응을 위해 신경써주시기 바람.
7. 중도매인 개별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정착 방안 마련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8.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관련 유통 및 물류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9. 기존 자치구 중 공사 친환경유통센터로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통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10. 강서시장 구역 분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각의 시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1. 안전성검사 관련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및 유해성분 등에 대비한 안전검사체계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2.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도입 관련 고령층 생산자 및 법인 종사자들의 활용이 우려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람.
13. 먹거리 안전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먹거리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4. 행정사무감사 기간 종료 후 시의회에서 경매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15. 강서시장 구역 분리와 관련하여 두 시장 모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6. 강서시장에도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7. 온라인 마켓 증가 등 향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연구원 : 10건

1. (서울연구원 온라인 콘텐츠 홍보 관련)원더풀 4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및 차별성, 성과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2. (김포시-서울시 편입 관련 연구 관련)김포시-서울시 편입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요망
3. 통합과정에서 소외당했을 기술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포용과 배려를 통해 진정한 통합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람.
4.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및 보고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5. 경영평가 '다' 등급을 받았음. 경영시스템, 사회적책임 등 부진한 지표 관리방안 마련하기 바람.
6.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통합 관련)통합연구원 출범 후 미해결된 쟁점에 대해 노무법인 검토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 노조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발생한 기술연구원 노조의 원장 고소·고발 건에 대해 서울시, 연구원 모두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서울시, 연구원 모두 통합과정의 쟁

점에 대해 책임 회피 없이 관리해주길 바람

7. 지나친 외부용역 의존 및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도록 연구관리를 잘 해주길 바람.
8. 통합연구원의 성별임금 격차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9. 정보자료실 어플의 접근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10. 경영평가 결과가 "가"에서 "다"로 하락함.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서울경제진흥원 : 5건**

1. (중장년 1인 미디어 교육 관련)교육 대상 및 공모전 수상자 선정 등에 있어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많았음. 향후 추진 시 문구 등 심사 숙고하여 진행 필요
2.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된 자료 오기된 부분 있으니 신경써주시기 바람
3. SBA에서 디지털전환(DX) 관련 선도적인 역할 하며 적은 인원으로 고무적인 성과 내고 있는 부분 칭찬하며, 지속적인 노력 바람
4. 서울콘 1차 라인업 아쉬운 부분있음. 향후 진행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람
5. 약자 기술 개발지원사업 관련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8건**

1. (저신용자 지원 관련)경기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으로 재단

- 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저신용자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바람
2. (순대위변제율 관리 관련)순대위변제율 관리가 비율(%)로만 추진되다 보니 체감상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향 존재. 보다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나 적용 통해 세밀한 관리 필요
 3. 골목상권활성화사업 내실화 하기 바람
 4. 기획이사의 미흡한 업무숙지 개선바람
 5. 악성민원으로 인한 조직차원의 직원보호 방안 강구바람
 6. 채권추심 민간 위탁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
 - 민간위탁 입찰 시 이전 실적 반영하여 실적 저조할 경우 입찰 참여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7. 소상공인연구센터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 격려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연구수행토록 노력 바람
 8. 경기침체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선제적으로 각 지역의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복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2024년 사업구상 노력 바람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 2건

1. (주얼리랑 놀자 프로그램 관련)대시민 관계 확장 프로그램인데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축소 기조임. 예산 문제라는 이유를 넘어 공간 활용 극대화 측면에서 적극적 기획 바람
2. 뷰티 패션 분야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건

1. (사회적 경제 기업 가치 확산 관련)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보여 주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 제고 바람
2. (홍보 관련)SNS 담당자 1명으로 센터 여러 홍보 채널 전담 운영하는 것은 무리. 이로 인해 센터 홍보 사업이 인스타그램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및 보완 필요

4. 환경수자원위원회

----- 89건

기후환경본부 -26건

1. 신규 자원회수시설 추진 시 해당 구민들과의 소통 및 혜택 제공 필요.
2. 4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시공자가 노인·비전문가로 이루어져 5인 1조로 운영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필요.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관련 할당량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
5. 한강 불꽃축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와 독성물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6.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건의 필요.
7. 태양광 사업자 부조리를 해소 후 서울시가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8. 다회용컵 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은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방향 재설정 검토 필요.
9. 오존 농도가 지속 증가하는 반면 대책은 미흡한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10.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통계수치 이상, 자료오류 등 문제에 대해 수정·보완할 것.
11.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의무화에 대비하여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필요.
12.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평가 관련하여 2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므로 방식 및 대상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 할 것.
13.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 후 주차에 대한 벌칙 부과 등 기술적 방안을 고려 바람.
14.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기후환경본부 외 타 실·본부·국 에서도 잘 이행되도록 노력 필요.
15. 내연기관차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차없는날 기획하여 시행 할 것.

16. 환경부와 서울시의 폐기물 통계가 상이한바 통계관리를 철저히 할 것.
17. 개인컵 더블할인제 시범사업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카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것.
18.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증가하나 참여율 저조 문제 지속. 플랫폼 개선을 통해 시민 이용 편의 제고 및 기부처 확대, 모바일 앱 개발 등 적극 행정 요구.
19. 생활환경교육을 위해 기초환경교육센터 중요. 25개 모든 자치구별 기초환경교육센터 구축 및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해야 함.
20.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하므로 계획 수립 및 보고.
21.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운영 업체의 운영실태 관리감독 철저 요청.
22. 자치구 쓰레기통 확충과 관련하여 시민인식 개선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자치구 환경공무원 예산지원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23. 미세먼지 관련 예산 편성 시 배출원별 기여도를 고려할 것. 자동차 예산 편성 비율이 매우 높으나 난방 등의 분야 배출량도 이에 못지 않음.
24. 자치구 단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 필요.
25. 폐의약품 수거는 약국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민 편의 및 효과 측면에서 우수.
26. 지열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확대방안 추진 필요.

푸른도시여가국 등 : 19건

[푸른도시여가국] - 11건

1. 경춘선숲길 내 소나무숲길 답압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유지관리 등 모니터링 필요
2. 서울둘레길 2,0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네 개 거점 휴양시설 위치 중 봉산이 있는데, 연신내역이나 불광역에서 구기터널로 이어지는 위치도 접근성, 이용성, 경관성 등을 고려할 때 산림휴양시설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됨.
3. 외국인을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바람
4. 서울둘레길 자원봉사아카데미를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서울둘레길 데크 청소 장려 바람
5. '서울의 달'의 설치위치가 기존 시설물과 기존 이용객들의 활동과 방해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건물들과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주민들은 여의도공원에 맨발황토길을 요청하고 있으니 반영하기 바람.
7. 자치구별 공원녹지면적이 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탁 드림.
8. 서울 창포원 재조성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9. 가로수 낙엽 청소는 청소과, 도로과의 문제이지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음.
10. 어린이공원 안전 경계부에 거주자 주차구역이 있음. 자치구에서 만들었지만 대안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

11. '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위해 교통대책, 침수대책,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해 줄 것을 요청

[서울대공원] - 8건

1. 거리가게 단속 용역비는 매년 비슷한데 단속 건수는 매년 차이가 없고, 단속의 내용도 굳이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2. 외국에서는 동물원을 지양하고, 기존 동물원도 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공원도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3. 캠핑장 업체에서 운영하는 카트 이용 시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던데 키오스크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4. 청계저수지 사용료에서 감면 적용이 안되는 필지에 대해 사유(영리목적 사용)가 불합리하니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조정 하기 바람.
5. 관광취약계층 동행투어는 올해 다른 협회를 통해 진행했으나 내년에는 MOU 등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6. 식음료 매장의 서비스 품질이 낮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니 개선하고, 음식점 위치가 산발적이고, 정문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하니 편익시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늘리기 바람.
7. AZA인증 2025년 연장 준비 철저히 할 것.
8.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사육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물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길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5건

1. 디지털 계량기를 적용한 원격검침 운영 방식에 대한 서울시와 타 지자체와의 차이 등을 보고하기 바람.
2. 아리수 음수환경 개선을 위해 자전거 도로 주변에도 음수대 설치를 적극 고려하기 바람.
3. 아리수 서포터즈 참여 대상에 초·중·고생도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열난방 검침기 조작 사례 보도를 참고하여 서울시에 납품하는 수도계량기에도 조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학교 아리수음수대와 양치대의 설치와 관리 운영 주체가 혼선됨에 따라 이를 통합 운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 바람.
6. 상수도 시설 공사나 정수센터 약품 투입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방지책 또한 마련하기 바람.
7. 해외도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개도국 지원 사업 추진시 도시 선정, 사업내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8. 최근 신설된 안전조사와 주요업무가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편중되고 있어, 당초 신설 취지인 내부견제를 위한 감사 업무도 충실하기 바람.
9. 신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시 서울물연구원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10.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양주 지역에 도입 예정인 활성탄 재생 시설을 서울시에
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검토하기 바람.
11.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부 주관 음용물 실태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주관 음용물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12. 아리수 음수대, 이용률 제고 위해 시민 친화적인 디자인 도입하기 바람.
13. 노후옥내배수관 교체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정에 깨끗한 수도물 공
급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4. 추후 들어설 시계외 지역의 수도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각 지자체의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15.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시 철저한 관리 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 위해 노력하기 바람.

미래한강본부 : 14건

1.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식별가능한 분리선 표시,
자전거 안전교육실시, 속도제한 및 자전거등록제 제도 개선 바람.
2. 늘어나는 낚시 인구를 위해 피싱 허용 구역 확대 및 스포츠 처럼 인프라 등
관련 시설 확충 검토 바람.
3. 현재 운영 보류 상태인 뚝섬 반려견 수영장 동물복지 측면에서 보류 재검토 바람.

4. 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안전관리 및 장애등급에 따른 이용 매뉴얼 제작 바람.
5. 한강 흡연부스 개수가 너무 적어, 이용시 찾기 어려우므로 개선 방안 마련 바람.
6. 리버버스 관련 의정모니터 결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간담회, 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바람.
7. 뚝섬 한강공원 황톳길 조성 관련하여 위치가 적정한지 확인 바람.
8. 암사초록길 준공 일정 차질없이 진행 바람.
9. 한강공원 사용허가 장애인단체 민원 해소 방안 검토 바람.
10. 드론장 없는 뚝섬 한강공원 보다는 드론나이트쇼는 광나루드론장을 적극 활용할 것.
11. 미래한강 아카데미는 시민참여 가능한 시민교실로 확장 필요.
12.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은 만족도 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 필요하며, 뚝섬 눈썰매장, 스타숲과 연계한 시민숲관리 등 활용 방안 다양하게 검토 할 것.
13. 밤섬 유지관리 방안으로 마포구 의회 밤섬 관련 실행민 의견 등을 검토 바람.
14. 서울항 조성 대신 여의도 선착장을 확장 사용 검토하고, 여의도 선착장에 협약서 22조의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24년 용역 마무리 이후 사업 진행 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5건

1. 서남 사업부지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미활용열 공급원인 GS파워(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기간 동안 公社 열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바람.
3. 서남 건설사업 관련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기 바람.
4. 서남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적극 건의하기 바람.
5. 보고자료에 정확한 예산 집행률 기재하기 바람.
6. 노동이사 연간 근무시간 300시간을 감안할 때 별도 사무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7. 내년도 산업부 열요금 인상 건의시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함께 고려하기 바람.
8. 과거 신규 사업 입찰 탈락 원인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향후 신규사업 입찰 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시민과 밀접한 에너지 복지사업 예산 축소는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10. 공사가 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소 중단사유, 가동중지업체 관련 자료를 市에 공유하여 전기차 구축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것.

11. 동북권 누수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수송관 선제교체 예산투입 등 겨울철 누수사고 없도록 관리 잘할 것.
12. 관계 지자체에 열수송관 매설 관련 GIS 정보를 공유하여 타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3. 재정관리 및 향후 수익창출 계획에 대해 정리하여 추후 보고하기 바람.
14. 미활용 열연계에 따른 열원가 등 재정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15. 여주태양광 1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운영비용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12건

☐ 대변인 : 5건

1. 신문 등록업무를 대변인 업무임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되며, 타 지자체에서는 대변인에서 주로 맡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 요망
2.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도 반박 및 해명자료 내는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언론과 지원이 필요함
3. 오보 등이 언론중재위까지 가서 수정되기 전에 언론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함
4. 각종 민원으로 들어오는 시민의 제보 등을 처리할 때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히 해명하는 등 합당하게 조치하기 바람
5. 대변인 지출 내역을 보면 품목을 잘못 기재하여 투명 하지않는 결제로 오인할 수 있음. 지출 시 정확한 품목을 명시하여 지출할 것

☐ **홍보기획관 : 11건**

1. 지자체 운영 박물관에는 기념품이 있으니 신규브랜드 확산을 위해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2. 지역신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 33년간의 주요 이슈 등을 모아서 행사하는 방안 검토
3. 토너구입 시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통합발주 하는 등 고민 필요
4. 홍보대사별로 활동 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활동 지침을 마련하거나 활동 내역이 저조한 분들의 임기는 만료를 앞당기는 방안 필요
5. 명예시장 선정 심사 시 검증 절차 필요하며 개혁 필요
6. 해치 캐릭터 리디자인에 예산 3억이 투입되므로 다양한 콘텐츠로 쓰일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시킬 것
7. 해치 리디자인 용역에 세금이 투입되는데 상상의 동물이니, 관광객·시민에게 와닿도록 개발 요청
8. 세입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9. 서울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구독을 홍보해서 이북 이용 활성화 필요
10. 신규 브랜드 관련, 1년간 3억을 투입해 발표한 브랜드가 기존 관광브랜드의 변형 수준으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사업으로 홍보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예산 사용은 지양하기 바람

☐ **문화본부 : 16건**

1.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공모 신청자가 없을 경우 종목 해제가 검토되는 것을 재고 바람
2.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트박스 인재들이 잘 육성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비트박스 대회 개최 및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요청
4. 노들섬 동·서측 연결 등 접근로 개선
5. 윈터페스타 관광재단 주도적 참여
6.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7. 청년 문화패스 부정 신고 사용내역 모니터링 필요

8. 서울 청년 문화패스 홍보 부족에 따른 집행률 저조 문제 개선을 위해 홍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문화예술 향유 접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다자녀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서초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건립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신경 쓰도록 하고, 수장고 건립 시 전시공간을 법적 최대치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전시 기회가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음
10.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종묘대제 어가행렬 재현 행사에 예산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역사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11. 템플스테이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들과의 원활한 통역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4개 사찰에 상시 영어 활용 가능한 인력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함
12. 문화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당일 휴관이라 하여도 행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3. 조례에 따른 문화본부 소관 위원회 정비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람
14. 데이터베이스 구독 서비스를 통합구독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15. 이순신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공유 요청
16.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누락 건에 대해 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

□ **관광체육국 : 11건**

1. 드론 라이트 쇼 콘텐츠 기획 시,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콘셉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기를 바람
2. [체육회] 체육회 사무국에 35개 단체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연간 임차비가 5억이 사용되고 있음. 시급히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송파구 풍납동 빈 토지, 건물 등이 많은 만큼 사무실 사용 및 관광객 유치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전 고민 요망
3. 핫돌핫돌 유아스포츠단 사업은 '24년 확대 예정인데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나가기 바람
4. 취약계층 가족 체육활동은 일반가정과 수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유형별 별도로 운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5.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와 재단이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6.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 체육회가 없는 곳이 용산, 서초, 동작 세 곳인데 창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7.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량비가 차이가 있음.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도 수당 등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8. 장애인체육선수 포상 관련하여 금메달을 4개나 획득하고도 포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포상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안 검토 필요
9.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시 차원의 관광특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국회 등 건의를 통해 상위법을 만드는 등 다각도 검토 바람
10. 의료관광에서는 환자 맞춤형 숙박 시설이 중요함. 맞춤형 숙박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11. 서울 기념품과 관광상품을 만들 때 타 부서의 관광상품과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의 협의하고 협업하기 바람

□ 서울역사박물관 : 8건

1. 서울학 연구(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편찬원-한성백제박물관 공동)에 대한 포럼이나 학술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서울학을 실 활용 가능한 사회학 및 사상으로 발전시키기 바람
2. '21년 대여 유물이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유물 손상이 심한 경우 외부 대여에 신중해야 하며 손상된 유물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해외 미공개 서울 연구자료 조사 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전문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조사에 참여할 필요 있음
4. 역사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유료 멤버십 회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필요
5. 뮤지엄샵에서 '서울마이소울 굿즈 티셔츠' 판매 가능 여부 검토
6. 메타버스 관련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콘텐츠를 잘 구성할 필요 있음
7. 세류TV 강의 내용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 시민들에게 유용하므로 통합하여 운영 필요
8.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본관/분관 안내 인력에게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주 시행하기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9건**

1. 전시 정보에 주요 작품 영상 시간 등을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람
2. 특정 여성기업과 반복 수의계약, 법인카드 반복 결제 등 유의하여 주기 바람
3. 뉴딜일자리 관련 계약기간 2개월 공고 팽배, 경력 및 전문성 향상 목적 사업인 만큼 향후 고용에 대한 예측성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 요망
4. 부대시설 대관은 문화예술 관련 등 허가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 주기 바람
5.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작품의 관람 통제, 약자를 고려한 작품 배치 등 모두를 위한 관람 환경 조성에 고민해 주기 바람
6. 외부강의 관련, 미술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람
7. 비엔날레를 ‘국제미술전’ 등으로 명칭 변경이나 부제로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8. 행정사무감사의 중요 자료가 누락 되었음, 제출자료 관리에 철저하기 바람
9. 미술관 특별전 등 전시품 개수, 양질의 작품 전시에 있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높은 입장료 받아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망

☐ **세종문화회관 : 10건**

1. CEO 핫라인 신고센터 답변을 CEO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고 및 의견 개진에 참여하기 바람
2. '22년에 비해 '23년 후원금 실적이 저조함. 보다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배네핏을 주어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할 것을 당부드림
3. 현재 차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음. 관리 용이를 위해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할 때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시스템화 시키길 바람
4. 노사협의회 제85조에 ‘힘희롱’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문서에는 공식 언어를 사용하기 바람
5. 후원회 라운지 사용 등 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길 당부드림
6. 행감 요구자료 제출의 경우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자료까지 인쇄하여 제출한 건이 있음.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자료나 목록 자료의 경우 파일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만 책자로 제출하기 바람
7. 서울시 예술단의 공연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8. 관리하지 않는 악기, 악보가 있음. 악기 악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9.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역량 강화를 통해 공연시장 티켓 판매 현황 개선 등 기관 수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원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기 바람
10. 발레단 설립 관련 예술단 조직진단 진행해 다각적으로 발레단 설립 및 향후 조직적인 개편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서울시립교향악단 : 13건

1. 기업후원 유치를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해주시기 바람
2. 서울시 시정운영 상 키즈 콘서트의 중요성 대두, 서울시 정책상 많이 보급 필요하며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함
3. 한빛맹학교와 서울시향의 협연 추진 검토 요청
4. 권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
5. 후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깊이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람
6.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7. 휴직과 관련한 명칭 통일해주시기 바람
8. 근로시간면제 사용 사유 중 노조 유지관리 업무가 실제 조합원을 위해 일한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9. 규정집 여비 규정 별표2 제목은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이나 내용은 국외 여비 기준표임. 재단 규정 관리 신경써주시기 바람
10. 3년간 표창 현황 전무함. 좋은 성과 창출한 직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창 부여해 주시기 바람
11. 악기 수리 비용을 지출하거나 관리할 때 체계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니 자료 누락이 발생함. 시스템을 마련할 것
12. 시향의 인권위원회 회의록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으니 향후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
13. 병가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간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요청, 병가 공가 등 출입국 증명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서울문화재단 : 2건

1. 기부 및 후원 문화 확산과 적극적인 기부 유치를 위해 노력 바람
2. 서울예술인 희망캠페인 사업 관련,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접속 및 홍보, 광고 노출도 등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바람

☐ **서울관광재단 : 10건**

1. ‘서울과자’ 단가 파악 결과, 소비자 책정 가격이 높게 측정된 경향이 있음. 원산지 역시 국내 생산 극히 일부로 대부분 중국, 캐나다, 브라질, 파라과이 등 수입 원재료 사용. 서울의 ‘맛’ 을 대표해 계속해서 민간협업 사업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재단에서도 적정가격 추계 노력 필요, 원산지 역시 서울을 대표한 기념품이 될 만큼 신경써주기 바람
2. 에어비앤비 프로모션 참여업체 중 현재 폐업한 곳이 있는데 확실하게 관리해주기 바람
3. 여행바우처 사업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1년에 몇 차례 모집 중인지? 중도 포기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4. MICE 산업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사업 관련해 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홍보가 부족해 해당 사업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홍보 사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 바 있음. 추후 별도 홍보단을 선발해 운영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5. 의료관광 관련하여 자체 데이터 생산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KTO 자료 등을 참고하여 미리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맞춤형 숙박 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함
6. 광화문광장 마켓은 전년도와 동일한 컨셉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매력적일 것 같으므로 이 부분 고려해주기 바람
7. 무슬림 관광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 방안 연구해주시기 바람
8. 서울시 등록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등록업소 1,300개 정도인데 에어비앤비 등록 수는 13,000개임. 약 90%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9. 서울 관광지도 요청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음.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주기 바람
10. DSP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에 따라 외국인들의 서울 체류 기간도 길어질 것 같음. 해외 유사 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제휴 시설 확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5건**

1. 김어준씨 출연료 공개 관련하여 법적 검토 완료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2. 이벤트 당첨 및 상품 제공 불편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기 바람

3. 김어준씨 출연료 공개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률 검토 받았으니 TBS의 답변을 기다리겠음
4. 희망 퇴직 관련하여 재정적 가능 여부 및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와 빠르게 소통해 주길 바람
5. 노조 활동이 재단 혁신보다는 반대만하며 발목만 잡고 있는 형국임. 남은 시간 한순간이라도 노조와 협력해 혁신을 이뤄내길 바람

□ 120다산콜재단 : 12건

1. 상시 재택근무 실시 이후 청사 근무자 실적은 감소하였는데, 재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여 발전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충분히 논의 바람
2. AI 콜센터 구축에 있어 요청 증원인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상담직의 직군 전환을 고려하는 등 인력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구상을 요구함
3. 120다산콜재단의 현행 중인 ‘강제 종료’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려할 필요가 있음. ‘무제한’ 체제 도입으로 교체하길 바람
4. 메타버스 서울 120민원 서비스 유형 중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로 진행된 상담 건수는 9개월 동안 95건으로 현저히 적을뿐더러, 오류 건수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5. 자기개발, 수업, 재해구호 등의 휴가제도 사용을 독려하기 바람
6. 재해구호 휴가 관련 복무규정 내용 변경 검토 요망
7. 복리후생 관련 업무 협약들에 대한 활용도·만족도 파악하여 존속 여부 검토 바람
8. 인공지능에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전화 상담이 시민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이며 상담의 주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재단의 방향성 검토 시 고려 바람
9. 직원 건강과 복지를 위해 난임휴가 지원 등 관련 사내 복지에 신경써주기 바람
10. 통화량이 몰리는 프라임시간 대 전화 상담에 임하는 상담사들의 대시민 통화 응대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11. 디지털 건강관리 업체 이용 건강검진 관련 직원 만족도 조사 등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12. 디지털 콘텐츠 관련 축제의 민족 쇼츠 등 누적 조회수 83, 지금 지구는 79 등 실적개선 방안 마련

◆ 여성가족정책실 : 14건

1.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전면시행,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조정을 건의함.
2.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관련, '19~'22년 4년 동안 예산 동결로 제대로 된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음. 인상 검토 바람.
3. 약자와의 동행지수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지수 평가대상 사업 추진 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기 바람.
4. 거점형 키움센터 센터장 자격요건 중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하고 어린이집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회계도 사회복지시설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해 검토 바람.
5. 2021년 기준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중 15.9% 정도가 연락 두절 상태임. 연락 두절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함.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관리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자립지원 기관(아동복지협의회,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이 흩어져 있어 기관 간 연계 조정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임.
6. 민간어린이집 폐원을 줄이기 위해 운영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형키즈카페가 자치구별로 불균형 하게 설치되어 있음. 굳이 설치비를 많이 들여서 큰 놀이기구를 놓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설계하여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면 함.
8. 엄마아빠택시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1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제 운영하는 차량은 비싼 대형택시 밖에 없고 단가가 너무 높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음. 중형택시로도 시트를 놓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가를 낮추거나 작은 택시로 변경할 계

획은 없는지 건의함.

9.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내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정확한 진단이라 볼 수 있는지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0. 우리동네키움센터 출석 인정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유에 대해서는 공결 인정을 해주면 좋겠음. 신규센터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도 임원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음. 지역아동센터와 상생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길 바람.
11.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시 기후동행카드 활용 제안함.
12. 저출생 대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제안함.
 - 자녀수, 소득수준, 주거형태, 가족형태 등 현황 조사
13. 경제전망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은 이미 구축된 체계가 훌륭하니 전달체계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편성으로 이루어지기 바람.
14.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퇴근 후나 주말 등 이용시간의 다변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주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 6건

1. 2020년도에 재단에서 진행한 성평등 언어사전 중에서 유모차 용어를 유아차로 바꾸도록 한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음. 시민들의 논쟁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낮은 편임. 이와 관련한 서울시 어린이 행복도 조사 연구의 정책제언은 참신성이 떨어져 아쉬움이 있음. 향후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람. 서울시 어린이 행복도 조사 연구과제에서 추진한 면접조사 결과들을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 활용하도록 공유해주시기 바람.
3. 우먼업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80.7%의 높은 취업률 사례를 분

석하고 취·창업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 바람.

4. 서울공예센터 더 아리움 위탁사업 관련하여 공예 창업 관련한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약 11만 명이고 매출액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여성창업을 유인하는 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보임. 재단이 위탁을 맡은 만큼 더아리움 사업을 잘 홍보하고 창업을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여 여성창업 허브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람.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민간위탁을 받는 것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지방자치법상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구분되어 있는데 조례의 모호한 규정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태임.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요구됨.
6. 2021년도에 진행된 채용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받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본보기로 삼고 채용 관련 제도가 적절하게 잘 되어있는지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을 규정으로 명시하여 관리하기 바람.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2건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북부 여성발전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부 아동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1. 취업률로 기관의 운영평가 기준을 삼고 있는데, 취업률뿐만 아니라 교육생의 자격증 취득률도 평가 기준 마련할 것.

<서울시 북부 여성발전센터>

2. 북부센터는 자격증 취득률과 구직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률은 낮아 보임.

여성친화 직종 교육과정을 트렌드에 맞게 개설 등 노력하고 있음. 복지직 관련업체 MOU 체결 이외 미용, 요식업체 등의 직능 단체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으로 연계하기 바람.

교육생 만족도 평가에 의하면 시설낙후 등 의견이 나오는데 예산상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3. 서울시에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해 대학교와 접촉면을 늘려 청년 의견청취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대상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 바람.

카드 뉴스의 전파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월 1회 공무원 포함 공공기관 대상 뉴스레터 발송을 건의함.

명절을 주제로 양성평등 강좌, 인문학 강좌나 양육자 대상 강좌나 상황극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며 일방적 방향의 강의식보다 쌍방향 방식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4. 서울시 기관인 센터 홈페이지에서 성 소수자 소식이 자주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함. 양성평등기본법이 성 소수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기관과 홈페이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5. 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종사자 중 노동가 출신도 많은데 그 개인의 생각이 업무에 투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람. 서울시 사업이 노동운동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람.

6. 수탁법인 노동희망의 대표가 SNS에 정부 퇴진을 언급함.

법인대표의 정치적 성향, 사고가 직장맘지원센터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우려되며 재발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여성보호센터>

7. 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복잡한 처리절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어려움,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에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8. 입소기관에서 성장한 초등학생 아동의 정신과 약물 복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기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 형성 때문임.
연두꿈터 생활지도원의 짧은 근속연수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불안정한 정서 유발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의 근속연수를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필요함.
9. 타 시설과 다르게 꿈나무마을은 연령, 성별로 분리하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인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성장을 위해 여러 연령이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형태가 바람직한지, 연령대별로 시설을 분리하여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동의 눈높이에서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함.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학대 예방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데, 보고 자료에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내용이 부족함.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보완이 되기를 요청함.

<동부 아동복지센터>

11. 동부 아동복지센터 수용 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이 69%로 상당히 높는데, 그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하며 모래놀이 치료를 통한 상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관의 차별화된 전략이 확대되기 바람.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 증인 요구 기관>

12.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고 있음. 개선 위해 자구책 마련 필요함.

◆ 복지정책실 : 18건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중 AI 안부확인서비스 관련 의견을 참고하기 바람.
2. 안심소득을 신청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담아 홈페이지에 기

재하는 것을 건의함.

3. 안심소득 홍보를 위해 지면광고, 인터넷광고 등에 많은 예산을 썼는데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안심소득 인지경로와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 보고 예산을 집행하길 바람.
4.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해 빌라 내 등 이웃 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5. 스마트 경로당에서 기기 사용법 교육받고 상담받는 사람들 비율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 필요함.
6.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니트족이라고 함(전체 청년의 약 2배).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시도별, 세대별, 유형별 일자리 분포도 현황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의원에게 공유해주기 바람.
7. 안심소득 처치 레벨을 2~3개 정도 나누어서, 즉 안심소득처럼만 돈을 주지 말고 좀 다른 유형으로도 돈을 주는 것을 제안함.
8. 키즈카페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비싼 놀이기구만을 갖다놓지 말고, 미디어아트나 모션플로우 기법 등을 활용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 해당 방식으로 게임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105개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부담스럽게 할만한 기구보다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적용하는 방법 고려해보기 바람.
9. AI 안부서비스의 실질적 기능이 떨어짐. 응답하는 입장에서도 복잡하여 제대로 된 자료수집이 힘들어 보임. 처음에는 신기성 효과가 있을 듯. 소셜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며, 너무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함.
10. 용역비 편성해서 실태조사 진행해야 함.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서울형 경로당을 만들어야 함.
11. 스마트 경로당 보다 열린 경로당 조성에 예산을 더 쓰는 건 어떤지 건의함.
12. 장애인 보조기기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기기 공급을 공적 측면에서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보며, 시급하게 조치되길 바람.
13. 서울형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을 건의함.

14.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80명의 대상자만 특별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함.
15. 지역사회 내 고독사 방지 위해 야쿠르트 배달 연계사업을 제안함.
16.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홀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풀 확보 방안을 제안함.
17. 장애인 관련 예산은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특정 대상에 집중되어 있어 유형별 인원에 비례한 형평성 있는 배분과 대상자 전체의 포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15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예산 분배 현황을 분석할 것.
장애인 복지의 경우 노년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임. 생애주기별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18. 제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한 시립 브릿지종합센터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법인도 연대책임 있다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 선정 시 중대한 잘못이 있는 법인을 제척하면서 신설 법인에도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척기준 등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할 것.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11건

<서울시 복지재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소득기준 초과 등 자격변동 여부에 대한 중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재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재원 확보 방안 및 가입자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매칭금 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중간소득조사를 통해 (자격기준을 넘어선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검토할 것.
2.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연구로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매년 평가결과 보고서 발간하는데 해마다 내용이 똑같고, 복지관 개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해 내기 어려움. 평가결과에 복지관 개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할 것.

3. 복지재단은 800억 예산 들어가는 거대 조직으로서 설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연구와 위탁사업을 구분하고, 대표이사 아래에 총괄본부장 등 직책을 신설해서 조직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방안 검토할 것.
4.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사업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하고, 로드맵 그리기, 평가하기, 피드백 등을 해주길 바람.
지자체 사업들의 평가 툴을 만들어주기 바람. 객관적으로 어느 자치구가 더 잘했는지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툴 제시 바람.
5. 안심소득도 종류를 2~3가지 처치 레벨을 나눠보자고 제안하며 연구진에게도 의견전달 요청함.
6.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 2023년 실적이 40명임. 2024년 300명 모집 목표가 가능한지 의문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7. 어린이집 위탁 해지 후 타 기관에서 운영할 때에도 이용자나 영유아에게 피해 없도록 조치 바람.
 - 장애아 통합 보육 지속.
 - 안과검진,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8. 서사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할 때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람.
 - 서울시내 가족돌봄 청년이 약 900명 정도 추산되고, 그 중 약 30% 지원이 필요해 보임.
9.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이후 보육교사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보육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를 건의함.
10. 정부는 정원 5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으며, 300명 미만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동이사제 적용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조례안 발의된 상태임. 개정안 통과될 경우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노조에도 노동이사제 개정사항을 사전에 설명해 주기 바람.

11. 혁신안에 가족요양보호사,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업이 담겨 있는 점에 찬성하며, 민간에서 자리잡은 사업은 축소하고, 최종증 장애인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추진하는 등 돌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2년 12말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전국 94,000명으로 전체 재가요양보호사의 28.9%를 차지함. 가족돌봄청년도 월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청년들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 복지 관련 시설 - 18건

(시립 고덕양로원, 시립 평화로운집, 서울시 동북, 서북, 서남 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 남대문 쪽방상담소, 시립 은평의 마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시립 고덕양로원>

1. 입소자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입소자 가운데 72%가 기초 생활수급자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운영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양로원은 저소득 수급자가 입소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으로 판단됨. 양로원에 대한 이미지 쇄신 등 일반입소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급식비, 불용예산 관리 등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함.

<시립 평화로운집>

3. 탈시설 장애인 지원
 - 일상생활, 거주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필요함.

- 보호 중심주의가 아니라 존엄과 헌법상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함.
- 자립을 원하지만 자립지원 시스템, 임대주택 마련 등 정책 때문에 자립을 못하는 경우 서울시에 적극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 보조기기 센터 전체>

4.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는 각 센터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신청 편의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아 매우 잘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센터에서 발굴한 전동칫솔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진하길 바람.

<서울시 동북 보조기기센터>

5. 국산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필요한 부분은 평소 의원에게도 건의를 해주기 바람.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6. 장애유형별로 보조기기들이 내구연한 대비 사용연한이 굉장히 오래됨. 고장난 것도 많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기들도 많다는 제보를 받음.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를 대여하실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써주시길 바람.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

7. 보조기기센터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홍보를 강화해야 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8.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바람.
센터의 이용자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위원회 위원 6명 중에 1명만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비장애인임.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람.

<시립 남대문 쪽방상담소>

9. 희망온돌긴급지원사업과 쪽방상담소 소액대출 사업 운영 관련 둘러막기하며, 실적부품

리기를 한다는 제보가 있음.

시설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비취지면 일부 주민들은 상처받는 상황들이 생기므로 세심하게 살피 주시기 바람.

<시립 은평의 마을>

10. 생활인 고충처리 현황 보니 통장 개인소유 요청이 있음. 통장의 경우 기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개인이 소유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지, 자치위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지에 대해 규정이 있는지 보고할 것. 가급적 개개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개선할 것.
11. 병원 진료 시, 혼자 들어가서 진료받고 싶을 때도 꼭 동반해서 들어가는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가급적 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고, 1인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할 것.
12. 기관 인력 및 운영에 대한 평가(리더십 진단 등)를 외부기관에 맡겨 실시하고 장기 비전, 자립지원 강화 시행계획을 문서화 하여 보고할 것.
13. 자료집에 노숙인을 생활인으로 표현하는 인권 감수성을 칭찬함. 노숙인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설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재배치를 고민해 보기 바람.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시도를 제안함. 예를 들어 인근 주민들이 싼 값에 노숙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지역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일반인들과 함께하면 노숙인들도 세상에 나서기 위한 두려움이나 주저가 줄어들 것임. 노숙인들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경험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함.
14. 노숙인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프로그램도 그렇고 복지부 프로그램도 그렇고 노숙인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지양하고 은평의 마을에서 꽃 박람회 같은 사업을 지역통합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고민해 주셨으면 함.
15. 노숙인들이 재활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표가 필요함. 몇 명을 어떤 유형에 취업시킬 것인지, 그러기 위해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

할 것인지, 각 직업교육과 문화생활에 대한 경로 등을 정확하게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계획을 세우고 매월 추진사항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6. 서울의 돌봄종사자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데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고 있음.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구심이 듦. 돌봄노동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센터의 실질적 노력들이 보이지 않음. 가장 필요한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안 하고 있음. 센터에서 훈련받은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가 인증한다는 믿음을 주고 서울시 기관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해야하는데 10년 이상 운영해 온 센터가 아직도 공공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
17. 서울시 어르신 종합보호센터의 운영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의 운영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음. 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권익옹호, 역량강화, 요양 인력지원이라는 법과 제도에서 명시한 형식에 맞게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함. 요양보호사의 권리증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궁극의 목표와 미션을 잘 지켜나가기 바람.
18.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함. 중증, 경증, 외상환자, 치매환자, 남성, 여성 등등 다양한 대상자에 맞춘 돌봄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함. 이런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 시민건강국 : 13건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24년 5월부터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제 실시 예정임. 서울시 산하 병원은 이용 대상자가 주로 의료급여 환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어려움을 겪음. 신분 확인을 못해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충분히 안내 후 진행하는 것을 건의함.
2. 우리아이 안심병원 홍보물을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맘카페 등 어린 자녀 부모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홍보하기 바람.
3. 마약 익명 검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 검사

율도 높이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을 서울의료원 외 다른 기관에서 수탁할 여지도 있음. 서울의료원 재정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다른 공공의료기관 조례도 미리 검토하여 위탁기관이 바뀌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5. 독감은 발생위험은 낮아도 걸리면 합병증이 심해서 사망위험이 크므로 보육교사 등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6.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대상에 교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7. 반대도시 프로젝트 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바람.
8.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제약 사항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9. 민간 산후조리원이 강남권에 편중되어 있음. 서남권과 동북권에 가깝게 이용할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B/C 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에 초점을 맞춰 주기 바람.
1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관련. 2022년과 2023년 신규 아이존 1개소 확충을 목표로 예산 편성했지만 확충하지 못하고 불용액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8개소만 설치·운영되어 자치구 간 서비스 이용 형평성 문제와 장기간 대기 문제 발생하고 있음. 공모와 예산편성 절차를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 문제의 경우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보조사업 중 환수조치 된 사업자에 대한 공지,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
12. 마약 관리센터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장 등 기존인력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마약 관리센터와 어린이 환자와의 동선을 분리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13.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지만, 사업내용이 부족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센터 간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2022년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서울시 자립지원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환경연구원 : 1건

1.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실시간 제공,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2건

(어린이, 은평, 서북 병원,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 병원, 장애인치과 병원, 고양, 백암, 축령 정신병원)

<시립병원 공통>

1. 시립병원의 수어통역서비스 지원 현황 및 확대 계획 관련,
농아인들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립병원 채용의 수어통역 지원이나 수어통역 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함.

<서울의료원>

2. 공공의료추진단의 서울의료원 산하로의 편입 관련,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많았음.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재단은 내부 내규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재단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내규의 재정립이 필요함.
3.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사직률 감소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서울의료원은 타병원 대비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편임.
고객 감동은 1차 고객인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사람중심 경영에 더욱 신경 써서 직원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임.
5. 서울의료원 및 동부, 북부, 서남병원의 낙상환자 수가 공통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낙상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건강국에서도 획기적으로 낙상 예방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어린이병원>

6. 서울시를 대표하는 어린이병원이 이번 시민건강국 우리 아이 안심병원 사업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람.

<보라매병원>

7.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보호에 대한 사내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8. 영상의학과 촬영실 앞 탈의실 4개 모두가 남녀공용이어서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사용 중 표시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탈의실 내부 정리 정돈 및 위생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 2015년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 이후 철저한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됨. 탈의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9. 의약품 1원 낙찰 관련하여 시장의 교란을 줄 수 있는 방식에 서울시 산하병원이 동참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해 보임. 약품 구매자로서 바른 선택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고민해 보기 바람.

<서남병원>

10. 시립병원의 노후 의료장비가 시민의 건강과 질환의 예방, 질 높은 의료 제공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므로 노후 장비의 교체와 필수 장비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적극 노력하기 바람.
11. 간호사 이직률이 타 시립병원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동부병원>

12. 알코올 해독클리닉을 통한 문제성 음주를 치료하겠다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함. 청소년 대상 문제성 음주자들을 위한 치료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건강 관련 기관 : 9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 하여 전체 64억 예산 중 35억 집행으로 집행률 (54.7%)이 저조함.

'2023년도 주요 사업 실적 달성률은 70% 이상으로 훌륭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사업이 많아 각각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한 것임.

시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 취지는 좋으나 중복적이고 유사한 사업구성이 문제로 보이기에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여 중복을 줄이도록 구성하여 계획하기 바람.

<서울 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2. 서울시 반기별 지도점검 시 회계 관련 지적이 4회 연속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3. 시설이 낙후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염려됨, 문제 없도록 시설 보강할 것을 건의함.
4. 위탁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5.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위탁 법인의 수탁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는 무책임하다고 보이며, 서울시가 위탁법인에 유감을 표명해 주기 바람.

<서울시 통합건강사업지원단>

6. 보건소 기술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과 공유대회 등에서 참여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게 사업내용을 가다듬기 바람.

금연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금연예방 캠페인, 토론회 등이 더 적절하며, 지원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청년들은 만나서 아이디어 창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임. 지원단, 운영위원회 등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등의 길잡이 역할이 없음.

청년 대상으로 소소하게 걷기 사업은 맞지 않다고 봄,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람.

7. 금연캠페인 중 이모티콘 배포와 같은 형식적인 캠페인은 지양하기 바라며,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키트를 제공하는 등 기존 사업 방식의 틀을 벗어난 기발하고 색다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8.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청년 대상 사업을 하는데, 자립준비청년 사업과 중복되어 보임. 어느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기 바람.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9.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알레르기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 함. 해당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함.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27건

[재난안전관리실] : 6 건

1. 평창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차량정체, 환경개선, 역사문화지구 훼손 여부, 성북구민의 안전을 고려할 것.
2. 자치구에 위임중인 가로수 관리를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코로나19 방역물품 중 체온계는 육아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정부 예산이 13% 가량 삭감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재난발생 시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중랑천 제1체육공원과 동부간선도로 간에 연결되는 통로 일부가 별도의 통제 없이 개방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일반 시민의 통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전자식 차단기 도입이나 감시소 배치 등 시민의 통행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7 참조)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준비와 홍보, 소통과 음식부족 등으로 불만과 아쉬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예산과 행정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폭을 확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8 참조)

[물순환안전국] : 10건

1. 대림3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된 유량계 교체와 함께 신기술이 적용된 유량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우천 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화 빗물받이 등 신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적극 도입해 주기 바람.

3. 물재생센터 직원 관사(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4. 현재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침수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5.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6.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7.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주기 바람.
8.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해제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이 감면사유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감면대상이 감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9. 안양천에 추진 중인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10. 행정사무감사 자료(공사계획평면도) 제출이 미흡하므로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주기 바람.

[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물재생센터 직원 관사(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니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람.
2.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 건

1.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구로구 주민 등 주변 주민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추진할 것.
2. 신림봉천터널 공사 시 스마트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7 건

1. BIM 적용지침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내 과업이 서울시 실정에 맞도록 과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함에 있어 보다 많은 기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신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소개의 장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람.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수요가 점

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력 및 장비 확충방안을 철저
히 수립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 등의 동향 파악을 수시로
해주기 바람.

4.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실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5. 올해 택시미터기 검정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세입 예측
액 대비 적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세수를 산출함
에 있어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해주기 바람.

6. 외부전문가 기동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위반주체에 대한 벌점 부
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바람.

7. 공무원 직접감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업체의 반발이
심해 사업추진 내용을 전면 수정한 바, 민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사업은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른 협의 후 시행하기 바
람.

8. 주택공간위원회

----- 111건

[주택정책실] : 45 건

1. SH 임대주택 전기차 주차장 관련 일반차량도 주차 못하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는 많이 비어 있음. 대책 마련해서 보고 바람.

2. 개최 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 검토 필요.
3. 결로 등 하자보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 공공임대 보증금 인상 관련 위원회에서 인상분 납부유예 연장 방안 검토 요청.
5. 공동주택 택배 대란 관련 지하주차장 높이 법령 개정 필요하고, '19년 이전 인허가 건도 심의과정에서 개정된 규칙 따르도록 독려.
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임시주택 공급 관련 강서구 등 피해가 큰 자치구에 임시주택 추가 확보 필요.
7.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관련 기존 임대주택 세대보다 준증이 많은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8. 녹색건축 인센티브 강화해서 활성화 노력 바람.
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새로 위촉할 때 리모델링 전문가 위촉 필요.
10. 도심복합사업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필요.
11. 리모델링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대책도 필요.
12. 리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13. 매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활용하기 힘든 재산은 매각 등을 고려해주기 바람.
14. 면목행정타운 관련 재정적 문제 해결 바람.
15.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이 동참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영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6. 반지하매입 실적이 너무 부족함.

17. 서울시가 자문위원을 앞세워 시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18.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확보 시급함. 승강기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 위원회 주기적 개최 필요.
19.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등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칙 수립 필요.
20.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분형적립주택 사업도 추진 필요.
21.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은 그 구조상 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음. 또한 정비사업 예비신탁사 선정이 사업주도권 선점을 위해 악용됨. 구체적 법적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함.
22. 신통기획 입안동의서 관련 추진주체가 마련한 3가지 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람.
23. 신통기획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4. 신통기획 추정분담금 올라가고 감정평가액 낮으면 동의율 낮아짐. 입안절차 변경 필요성 의회 보고 요청.
2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 개정 관련 과소필지, 저밀이용 기준 완화 등 기준 신설 요청.
26.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수가 너무 적음.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작연도, 가입기준, 가입한 주택수, 과태료 부과건수 등 보고 요청.
27.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관련 유예기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했는데 심각하게 고민 바람. 관련하여 보라매역, 동대문구 용두동, 영등포구 도림동, 연신내 관련 보고 바람.

28. 재건축 시 학교부지를 공공부지로 지정하는 결정을 시장방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 필요.
29. 전세사기 피해조사 관련 임대인 사기의도 미비로 인해 부결되어 구제 못한 부분 보완 필요.
30.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구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제도개선 필요.
31.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세사기 상담 요청 많은 지역이나 연령대 등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 고민해야 할 것.
32. 제도 미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관리사각지대 발생으로 피해 우려됨.
33. 조합설립 중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토지소유자 아닌 외부인으로 임명하여 주민 의사 반영 안되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진행.
34. 주거약자 지원방안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포럼, 안전 인증제,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등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안을 만들어 보고 바람.
35. 주택공급 통계 관련 언론에서 부정공 보도가 많은데 긍정적 시그널을 줄 필요 있음. 국토부 통계와 충돌되는 점 등 고려하여 다른 방향으로 통계를 제공하는 등 신경 써주기 바람.
36. 청년안심주택을 SH공사가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바람.
37. 콤팩트시티 현재까지 진행상황 보고바람.
38.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전세가구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10가구에서 4가구에 불과함. 경매, 최우선변제 등 구제에 사각지대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함.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사기와 기망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완 필요.

39. 하계5단지 영구임대 세대수 더욱 늘리는 방안 검토 요청.
40. 해체공사 감리비 갈등 문제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41. 행감자료 연도별 공급실적 숫자 안 맞음. 정확한 실적 보고 바람
42. 향후 주택공급 급감 전망되며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큼. 서울시 대책 마련 필요.
43.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필요.
44.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필요하며, 시공업체들 중 만족도가 낮은 업체들은 교체 검토.
45. 희망의 집수리 지원액 상향해서라도 충분한 보수 필요. 반지하의 경우 환풍기를 필수적으로 설치 검토.

[미래공간기획관] : 19 건

1. 9월말 기준 미래공간기획관 집행율 30%미만 세부사업이 13개로 집행 관리 미흡, 연말까지 집행가능여부 예결위원회 전까지 보고 바람.
2. 건축공간과 주변 산업과 주변을 지나는 주민과의 연결, 건축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자와 근무자의 이용방안 등 100년을 내다보는 대개조의 개념으로 동서울터미널,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상가 등 사업추진에 미래공간기획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함.
3. 공공건축가 미활동 80명과,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 행정처분 대상자 2명도 해촉으로 정리하시기 바람, 집행률이 부진한데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편성하시기 바람.

4.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까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5. 내년 6월 이후 조직개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이번 조직개편을 미룰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6. 내년 6월 정례회 때 조직개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이번 조직개편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임.
7. 방치되어 있는 지하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8. 사전협상 공공기여 실태조사 '해당없음'이라는 답변 대신 구체적 답변을 해주기 바람.
9. 송파전파관리소부지 개발시 송파구와 협의하여 송파대로변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바람.
10.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던데 열린 녹지공간 만들기로 했던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살펴 봐주기를 바람.
11. 수익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대관람차 입지 제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이니 고려 바람.
12. 집라인 검토 용역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람.
13. 집라인 검토 용역은 포괄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포괄예산으로 집행한 근거나 방침자료가 있으면 별도 보고 바람.
14. 청담공원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고 시대에 맞지 않는 청담공원 내 전두환 전 대통령 청송비 철거 희망.
15. 포괄예산 집행현황 상세내역에 대해 별도 보고해주기 바람.

16. 포괄예산을 사용하는 신규사업은 미래공간기획관 결재로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17. 포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해 주길 바람.
18.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19. 혐오시설인 성동구치소로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개발되는 휴식, 녹지 공간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송파 창의혁신 공동주택 설계 공모가 개방형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디지털정책관] : 12 건

1.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 확충 및 지능형 CCTV로 조속한 전환 요망.
2. EMP 공격에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통신시설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급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3. 각 지역 CCTV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책관에서 신경써 주기 바람.
4. 공공예약시스템 매크로 사용 등 부정 예약에 대한 처벌 강화 당부.
5. 디지털플랫폼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함. 특히 공간정보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들을 행정에 접목시켜 활용해주시기 바람.
6. 메타버스 3D가 필요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 그레이트 한강, 세종문화회관, 빌딩 고도화 제한 해제, 리버버스 사업 등을 메타버스에서 가상으로 체험/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지?

7. 앞으로 무인시설 및 어플활용시설(주차장 등)이 활성화될 것인바, 디지털안내사들이 주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음.
8. WeGO 사무총장 업무평가 시, 만점을 준 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 보고가 어려우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9. 엠보팅, 마이티사업 다운로드수는 있는데 활용이 낮고 평가점수도 낮는데 국비투입으로 폐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 공공앱의 개발 이후 불필요한 앱은 폐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10. 장애인 단체나 경로당 등에서 사랑의 PC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구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직위 해제자가 메신저 접속했는지 본청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바람.
12. 키오스크가 확대 및 다양화되는 반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키오스크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키오스크 UI 통일화 방안 마련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 30 건

1. '23년도 신년 업무계획 중 공정관리계획 12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게 거의 없음. 반지하 주택 매입, 신내4, 세운4 등이 지연되고 있음.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은 이유를 파악하여 재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LH에서는 입주민이 원할 경우 아파트 외벽 LH로고를 지우고 희망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이에 대한 SH 의견은? 임대주택 입주민 차별 문제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SH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
3. 가상화폐도 입주자 선정시 자산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국토부에

건의해야 함.

4. 건설현장 법규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9건, 하수도법 위반 1건이 발생됨.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주기 바람.
5. 공공한옥 공동체주택의 경우, 활동실적을 보니 쿼어 초보반이라는 운영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성소수자를 위한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됨.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취지에 맞는지 의문. 입주 취지에 맞지 않은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 있음.
6.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공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타 기관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주기 바람.
7. 그레이트 한강 관련, 이사회 부의 외 안전장치가 없어 보임. 민간투자 요건에 대한 기준, 매뉴얼,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8. 리츠 관련 '17년도 조례개정 이후 부동산 개발업이 리츠가 아닌 그레이트 한강 등 민간투자사업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바람.
9. 매입임대 대안으로 전세임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생각인 듯 하나 매입임대도 일부 해주기 바람.
10. 매입임대 예산 2차 정산금은 얼마인지? 빠른 시일 내 2차 정산금까지 처리하고, 반복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11. 매입임대의 관리부실 문제와 활용하기 힘든 임대주택도 처분을 고려하는 등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임대료 등의 문제로 저층주거지, 다세대·다가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필요하다고 봄.

12. 부적격 입주세대 사유를 보면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 세대가 많음. 올해 9월 기준 임대주택 대기자가 8천명이 넘는데, 부정입주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3. 신규아파트 라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공사가 공급한 위례 포레샤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으나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음. 라돈은 측정방법이 건설사마다 상이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일부 단지 선정하여 라돈 측정 예정이므로 준비해주기 바람.
14. 역세권활성화 사업 관련, SH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는데,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주기 바람, 어려우면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주기 바람.
15. 임대료 인상 관련, 영구임대 1인가구 소득은 2023년 기준 62만원임. 24년부터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고려하여 보증금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람.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됨.
16. 임대료 체납으로 자진퇴거, 소송진행 세대수가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음. 정말 상황이 힘든 세대는 소송 대신 조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17.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기 바람.
18. 임대주택 사용과 관련, 임차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임. 향후 더욱 늘어날 수선유지비를 고려하여, 임차인도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아주기 바람.

19.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람.
20.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업체 의무구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고용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21.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자의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종교부지를 없앴. 교회 3개 중 1개는 존치를 원하는 상황임. 재개발이 능사는 아니며 약자의 편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지분소유로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부정입주세대로 걸리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음. 실태조사도 자주 실시하고 불합리한 규정 바뀔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람.
23. 지원주택 하자보수 및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들이 부족함.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람. 지원주택에 AI 등 음성지원, 경보알림 등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이 많음.(예: 성남시)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지원주택에 휠체어가 지나갈 곳에 문턱이 있거나 문 폭이 좁고, 비데가 미비하는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미비함.
24. 직원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이 적은 것 같음. 많이 줄 필요가 있음.
25. 콜센터 정규직 전환문제 추진 현황은? 자회사 등도 고려하는 만큼 노조가 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조속 처리와 연내 노사전회의를 개최해주기 바람.
26. 한강 관련 국외출장이 있었는데, 올해 말 그만두는 임직원이 출장감. 출장 보고는 받았는지, 출장 경험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함.
27. 한강 리버버스 관련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개선 방안은? 리버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신경써주기 바람.

28. 한강 리버버스 관련, 내년 9월부터 운행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음. 선박 건조 대금은 SH가 지급하는 것인지, 선박 매각 주체는 누구인지, 관련 논의가 끝나면 보고해주기 바람.
29.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회와의 충돌, 의원 지적사항 등은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이 필요함. 사업별 예산도 착오 없이 사업 유지 및 집행해 나가기 바람.
30. 현재 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지하주차장 높이가 법정 최저수준으로 확인됨. 고품격 백년주택이 목표라면 지하주차장 층고, 경사로폭 등 기준을 개정해주기 바람.

[서울디지털재단] : 5 건

1. 어디나지원단 교육 자치구 지역별편차를 줄이고, 내년에는 강사 조기모집을 통해 좀 더 일찍 교육이 시행되어 더 많은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2. 어디나지원단 등 재단 사업이 있지만 사정이 더 열악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디지털약자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 하길 당부함.
3.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어디나지원단의 홍보를 강화해야 함.
4. 키오스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므로,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재단이 디지털 정책관에 제안하고, 연구도 해야 함.
5. 퇴직자들이 공적마일리지를 갖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 등 공적마일리지 관리가 미비하여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안 필요함.

[도시계획국] : 23 건

1. 고도지구 열람 공고 이후 자치구, 주민, 시의회로부터 수합된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람
2. 신당9구역 등이 포함된 신당, 다산동은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높이 완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 바람
3. 남산 고도지구 지역 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의 중첩지역도 고도지구 해제에 대해 검토 바람
4. 높이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 바람
5. 해방촌 등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재정비안을 검토 바람
6. 경관계획상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치 바람
7. 북한산 고도지구 내 높이초과 건축물이 최대 완화 높이기준(45m)과 비슷하므로 재건축 등 사업성이 나오도록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 바람
8. 「경희궁지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 관련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해 합리적인 공간개선 방안이 도출 되도록 검토바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 이행 및 용역 준공 시 별도보고 바람
9.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관련, 중간단위계획인 생활권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변경 검토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중랑천 공간구상 용역 추진 필요

11.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어도 현재 특별한 혜택이 없으므로 다양한 혜택을 검토 바람
12. 고도지구 재정비안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내 높이를 유연하게 평균 15층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3.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된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은 지역 현안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재검토 바람
14. 가재울 뉴타운 3,4 구역 사천교 확장비용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공공기여의 방식 부담하라고 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볼 것
15. 균형발전측면을 제외하면,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실현 시 장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
16. 한강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
17.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국철구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구간도 포함하여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등을 추진 바람
18. '23년 9월 보고 이후 용적률 체계 개편 관련 추진 현황을 별도 보고 바람
1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간 현황(윤종복의원 요구자료 5번) 중 최소 심의기간이 2일인 건이 있는데, 상정 기간과 안전검토 기간을 포함하면 이렇게 짧을 수가 없다고 생각함. 어떻게 산정된 결과인지 보고 바람
20. 더 케이 호텔 부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으로 특혜 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함
21. 월계2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가 나갔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보고

바람

22. 친환경 인센티브에 대한 효과와 탄소저감의 기여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할 것

23. 정부에서 매각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는 정부의 신뢰성 측면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등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검토해 볼 것

[균형발전본부] : 9 건

1. 세운상가군 재생사업(공공공간 조성공사)관련하여 하자가 많고 보행량 또한 적음으로 철거하기 바람
2. 세운지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재정투자와 순환정비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이주자대책을 면밀히 세워주기 바람
3. 서울혁신파크 공사 시행 전까지 약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이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4. 영동대로 지하화 복공판 관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5. 광역철도 GTX 노선 개통시기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시기의 상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 바람
6. 녹지생태도심 조성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함. 민간에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바람
7.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상인들은 시에서 개발업체와 상인 간 조율 역할을 원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 바람
8.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예산 반영이 안된 사유 및 영등포 거점시설(2호) 조성사업 중단 사유와 향후계획 보고 바람
9. 곤돌라사업이 산림과 토양 등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 곤돌라 운

영 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 본부에서 자체적인 여론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바람

[디자인정책관] : 24 건

1.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빛 미디어아트 정책 철학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2.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선정과 관련, 범죄 및 도덕적·사회적 물의 등 리스크 여부에 대한 필터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 바람
3.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시 특정 제품에 편중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잘 선별하기 바람
4. 서울빛 신규정립 관련하여, 빛의 활용이 공간의 의미나 목적에 맞게끔 적용되어야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하면 안됨
5.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해 좋은간판이 많이 발굴 했는데, 파급효과가 부족함. 종로 한옥 거리 간판개선사업처럼 지역 특색에 맞게 파급력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바람
6.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 관련, 러너스테이션 공사가 완료되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바람
7.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안전상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예산 증액과 주거 안심 지역 이외에 확대 설치하기 바람
8. 홍체천 사천교 주변 야간경관 개선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9. 소울 드랍스(Soul Drops) 벤치를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서울지하철 내 유희공간에 설치 검토 바람
10. 소울 드랍스(Soul Drops) 벤치가격이 과다하고, 불편하며 관리가 잘 안되므로 조치 바람. 또한 시민 만족도 조사도 필요함

11. 시장 요청 사항의 이행은 중요하므로 앞으로 DDP 유구전시장 디자인개선 계획의 추진경위, 추진경과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 바람
12. SBA의 DDP 관리위탁 면적을 당초 37%에서 13.5% 낮추어서 보고하였는데, 행안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결과 관리위탁 불가규정이 없다고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됨
13. 디자인정책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개발·배포와 신규사업 발굴을, 서울디자인재단은 확산으로 역할 분담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상위법 부재로 강제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우나 시 전체 사업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4. 약자동행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디자인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용어의 명확한 정의 확립 필요
15.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 굿즈 특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에 포함된 서울색 사업 내용이 의회에 사전보고가 안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되지 않은 용도로 예산 사용시 의회에 사전보고 해야함
또한 서울색 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 바람
16. 관광특구 지역에서 정당현수막과 시위현수막 게시를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17. 서울도심 미디어아트 서울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업체 선정 계약일체 서류 보고 바람
18. ‘디자인 행정서비스,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울디자인 X’ 사업의 차이점과 중복성이 있다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방안 보고 바람
19. 서울을 상징하는 빛은 무엇인지 검토 후 보고 바람
20. ’22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지하철 캐노피) 시공시 처짐이 발생하여 디자인 수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 바람

21. 서울빛 신규정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관해 보고 바람
22.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 보고 바람
23. 서울도심 미디어아트 서울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계약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일체(사업자등록증 등) 보고 바람
24. 2040 서울시 경관계획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바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6 건

1. 약자동행위원회가 현재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동행위원회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약자집단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약자동행지수가 100으로 산정되면 50개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2%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지표별 경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약자동행지수 지표의 가중치 부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약자동행지수가 양이나 규모에 치중되어 있음, 규모 증대가 반드시 성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듯 세부지표 개선 및 새로운 제도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임
4.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5.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대부분 수의계약 체결. 약자불편문제 발굴에 이어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동일한 곳과 여러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6.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선정시 접수현황 및 예산범위내 지원 규모 확대 필요

[미래청년기획단] : 12 건

1. 청정넷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수당이 부족하여 자비를 활용하고 있다하므로 예산을 일부 지원 가능한 지 검토 바람
2. 청년센터 임직원 경력의 객관적 자격 기준을 마련 바람
3. 자치구별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자치구 서울청년센터 설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주기 바람
4.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사업의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다자녀인 경우 소득기준 고려없이 모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하여 사업을 재설계해주기 바람
5.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참여자 우선 선정 기준에 ‘부모 청년’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할 것
6. 청년센터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홍보, 연구, 교육분야 경력인정도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볼 것
7. 미래인재DB에 전문성을 가진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할 것
8. 청년인생설계학교에 현재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국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이므로 검토할 것
9. 미래청년일자리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것
10.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센터 역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방법을 모색할 것
11. 시구 청년센터의 대관료 기준이 다름.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 청년센터의 대관료를 없애는 것을 검토 바람
12.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동절기 접수일정 추가 및 기본 상담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디자인재단] : 7 건

1. 재단이 재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이유는? 설립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음. 단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함
2. DDP 정체성 정립이 확고하게 필요함. DDP 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디자인재단의 고유역할을 찾아서 집중하기 바람
3. 우일티에스 소송 건 관련하여 명도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바람
4. 직원 공무출장 시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 바람
5. 현재 제로마켓 소상공인 지원이 250만원 일회성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또한 지원 후 지도점검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6. DDP 임대시설 관련 편의시설 및 식음시설이 더욱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바람
7.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10. 교통위원회

----- 70건

[도시교통실] 건의 : 34건

1. 버스전용차로 출퇴근 시간제를 검토해보면 어떨지?
2. 택시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운전자격 시험없이 신고제로 전환 필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히 자원으로 쓸 수 있을 것
3.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하는 것은 어떤지? 지방에 무료 버스를 보면 만족도가

높음

4. 혼잡통행료를 계속 부과한다면 지금처럼 사람을 통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태그리스(하이패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것임. 서울시로 진입하는 모든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민 필요
5. 사모펀드사에 투자유치 사업제안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자료 제출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6.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실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람
7.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 택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추정 택시경영평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15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교통위원회에 서면 답변 바람
9. 기후동행카드 관련
 - 여러 서비스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65,000원 카드를 상용화하려면 전산 개발비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관련 예산 부분은 자료에서 찾기 어려움. 막연한 추정치로 65,000원 산정한 건 아닌지 우려
10. 9호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관련(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시 발언)
 - 도시교통실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비용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22년 9호선 1단계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를 안했음
 - 앞으로 공기질 개선에 더욱 신경 쓰길 바람
11. 기후동행카드 세입 마련 방안 제안
 - 기후동행카드 준비 철저하게, 예산 투입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 다만 더 성공적이고 시민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 예산 사업이 아닌 세입 창출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예컨대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장기 렌터카 규모는 100만대 수준으로, 차고지가 대부분 지방에 등록돼 있음
- 교통 혼잡, 탄소 배출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은 서울에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세입, 취득등록세는 모두 지방이 가져가는 상황
- 서울수도 다양한 유휴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차고지로 활용해서 업체들을 유치하면 약 2천억~3천억 규모의 추가 세입 예상
- 시민의 혈세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도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편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검토할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회적 문제〉

12. PM을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무게 센서를 이용한 제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것
13. PM 전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업체와 서울시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14. 서울시에서 설치한 PM 전용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업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15. 이용률 데이터 활용하여 이용률이 적은 곳과 PM 주차금지구역 설정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 도로상에 PM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전면 재조사 할 것
16. 버스총량제에 서울시 부족 노선 확보

- 버스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계획들도 손볼 것인데 자치구별 버스노선 비교 자료를 준비할 것
17. 9호선 공항시장역의 영문 표기를 외국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개선할 것(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시 발언)
 18. 1역사 1동선 관련
 - 대홍역은 물론이고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 챙길 필요
 19.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4개 이상 중복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하고 마을버스 환승 요금제를 조정 검토할 것
 20. 택시 운행 2년을 추가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21.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서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22. 성과지표에서 공무원청렴도 목표는 100점으로 설정 필요
 23. 기후동행카드에 따릉이 편입 시 요금인상 검토 필요
 24. 보행로 없는 통학로에 대해 안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5. 전기버스 브레이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반영 검토 필요
 26. 9호선 1단계 2021년 12월 자금재조달 합의서에 변동금리 비율이 높아졌는데 고금리 시대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 바람
 27. 카카오택시 수수료 관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람
 28. 현대자동차 독과점 체제에서 기존 계약자와의 계약 해지하는 등 일방적인 소

나타 LPG(택시) 단종에 대한 문제점 지적

29.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준공영제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서울시가 일부 버스회사를 매입하여 공영제 버스 운영의 사례를 만들어 운영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기하고 노선 조정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단계별 공영제 전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0.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일부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의 10년 역사와 경험, 사회적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31. 서부선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지연 상황 타개책을 마련하여 11월 내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2. 마을버스와 일반택시는 업체의 경영난과 함께 기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민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33.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진행 과정(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 등)을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 바람

34. 9호선 등 민자철도 운영 관련 도시교통실이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건의 : 4건

1. 동북선 공사 소음 관련

- 동북선 공사 관련 여러 민원이 있었으나 많이 해소된 거 같음. 그러나 소음 민원은 다수 있음
- 특히 복공판 등과 같은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 공사에 소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민 안전과 편의 배려하면서 남은 공정 해주기를 바람

2. 동북선 환승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관련

- 환승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가 많음(약령문 앞으로)
- 본 의원이 예산도 반영했지만 남은 기간 주민 협조 속에 용역도 잘 진행되길 바람

3. 서울시 공공감리단 신설되고 공공공사 직접 감리한다고 발표한 만큼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도 적극 협조 바람

4. GTX - A 개통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으니 약정 날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건의 : 17건

1. 우진산전 지체상금 관련 및 적시 납품 당부

- 다른 제작사들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우진산전만 지체상금 부과 금액이 큰 건 기술 부족이나 계약이행능력 부족 문제는 아닌지 우려
- 전동차 제작 7차 계약도 우진산전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2. 부정승차 방지 음성송출 관련

- 어르신 카드 태그 시 음성송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민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정승차 방지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

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치의 설치를 계획에 맞게 설치할 것

4. 철도차량 제작업체 3사가 하청업체들로부터 지체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

5. 안전발판은 효율 대비 설치비용이 과도하여 기존 고무발판으로 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

6. 지하철 내부 출입문과 개찰구 출입구가 장애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지하철 내부 와이파이 장치가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8. 예비 전동차를 혼잡한 시간 때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근무자들이 휴가를 가기 위해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
10. 창동민자역사 진행 상황 수시 공유 바람
11.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제13조(생리휴가보수)를 (여성보건휴가)로, 만나이 폐지에 따른 정비 필요
12. 외부강연 예산편성 기준 준수해 집행할 것
13. 전동차 담합 관련하여 제조사 관계자 및 서울교통공사 인식 시정 필요
14. 추후 부품수급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및 향후 입찰시 개선 필요
15. 사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 및 변화, 개선이 없음
 - 감사실 인원 및 기능확대 필요
16.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규정 내에서 효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17. 9호선운영부문의 조직진단과 적정인력 산정 연구 진행 과정(연구 설계,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시의회 교통 위원회에 보고 바람

【서울시설공단】 건의 : 15건

1. 따릉이의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배송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따릉이 운영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따릉이 광고 사업진행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의 자문 등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것
3.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적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4. 장애인 버스 운행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분들 및 장애인 가족 포함들이 편안하게 장애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5. 제설 장치 설치를 통해 울겨울에도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6. 추모시설 근무자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특별수당이나 근무지 로테이션 등을 통해 근무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7. 승화원 사무실 공기질 개선을 추진할 것
8. 생활임금제도 정착에 서울시설공단이 앞장서 줄 것
9.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의 지하차도 차단 시설물 등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 줄 것
10. 따릉이 정비센터가 지역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고민해 볼 것
11. 기술공고 사전예약제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활성화 필요
12. 새싹따릉이 이용률은 전체 3% 수준으로 양적 확대는 지양 필요
13. 병가 중 해외여행 건 적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4.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등 과태료 납부 없도록 개선 필요
15.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이후 입장료 도입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1.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참 시 부교육감이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장애인 교원의 교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 장애친화적 플랫폼 마련, 장애인교원의 업무지원 인력 추가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장애인교원이 뉴쌤3.0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것
4. 건강장애학생이 서울런 콘텐츠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학교 도서관의 방문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므로 OTT서비스 도입과 같은 학교 도서관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지원 사업이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사업 개선을 위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할 것
7.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고교학점제 시설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8.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해도가 낮으므로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9.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많은 학생들이 신장 질환,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교육청의 지원사업 중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안이 없으므로 관련 정책 마련할 것
10. IB교육은 혁신교육과 토론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실시해온 혁신교육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 IB교육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11. 학생인권센터는 학교폭력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12.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3건을 재의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은 의회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치임을 인식할 것

13. 학교 구성원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마음건강이 점점 중요해지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규 교육과정에 마음건강 교육을 포함할 것
14. 학교장 및 교사의 겸직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가동할 것
15. 기초학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초학력 수업방법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지도방법을 찾을 것
16. 과정중심 평가 시 교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와 소통할 것
17. 교육정책국은 정규 교육과정에 마음건강교육을 편입시키는 것을 고민할 것
18. 복합화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교육감의 인사 관리 책임, 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연수 과정을 마련할 것
19.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련 입찰담합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권 발행 중단 등 가처분 신청을 할 것
20. 공유재산 감독 체계 개선, 종합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할 것
21. 교육청 내에서도 부서간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2. 통학로 보차도 분리 및 일방통행로 구성에 있어 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할 것
23. SNS 등 숏폼 콘텐츠 활용에 있어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할 것
24. 학교 공유재산 연수 시 이론과 사례 중심의 매뉴얼 및 교육자료 마련할 것
25. 기초학력평가가 상급 학교로 갈수록 평가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할 것
26. 사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책의 하나로 방과후학교 내실화 추진할 것
27. 비장애학생에 비해 제약이 많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할 것
28.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학교 디지털 기기의 물품 관리 대책 마련할 것
29. 늘봄교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증가 예정인 복합시설 관리 철저할 것
30.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를 폐지할 것
31. 공익제보센터장을 정규직으로 개편 추진할 것
32. 지역 학교의 통학로 미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
33. 시설안전과의 급식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해당 사업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
34. 학교 선호도 격차와 서열화 해소 방안을 수립하고 보고 자료로 제출할 것

35. 유아교육 내용 중 평화통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할 것
36. 학부모회 공모참여사업의 폐지를 검토하고, 학부모회 공모참여사업 진행 시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회계 관리가 소홀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37. 초등학교 앞 통학로 미설치에 대한 전수조사 뿐만이 아닌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
38. 재개발공사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순환버스나 다람쥐버스와 같은 대비책을 교육청에서 마련할 것
39. 통학시간대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급증했고 보차도 미분리 지역학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통학로 전수조사 외에 구체적인 실행지침과 계획을 제시하여 보고할 것
40. 통학로와 보차도 분리를 위한 예산지원책을 마련할 것
41. 초·중·고교 통학거리 측정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근거에 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보고할 것
42. 중학교 배정 시 학생 자율성 보장 및 고교 배정 시 단계별 선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3.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시행할 것
44. 산업안전보건법 상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를 섭외 또는 외주 의뢰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확충할 것
45. 학교 방과후과정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
46.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공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개선대책 마련할 것
47. 교육감 등 인사관리자는 안전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안전 분야의 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4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 등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은 강남서초지원청 위센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 교육위원회 증인 신청 사안(11.13.)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 후 관련 대책 및 향후 처리방안을 보고할 것
50.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정책국장과 더불어 학교문화 속에 타지역에서 온 학생에 대한 배척,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할 것
5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유치원 돌봄시 전일제 급식 도입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방안을 찾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52. 참여협력담당관은 거점학교제도의 선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학생비율로 변경하여 제도의 장점을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것
53.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을 부서에 배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발생한 인사 관련 현안에 대해 향후 조치방향을 정하여 보고할 것
54. 교육행정국장은 흑석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와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2026년 3월 개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5. 부교육감은 11월 13일 증인 질의 관련된 학교폭력심의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6. 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수를 늘리거나 1교 1변호사제도에서 활용하는 변호사가 학교 폭력문제도 일부 담당하여 업무과중을 방지하고 정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57.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되거나 잘못된 심의로 피해학생의 구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체 등 다방면의 조치를 마련할 것
58. 교육정책국장은 65인치 이상 TV 설치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부분에 대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보고할 것
59. 총무과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정원관리 방안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60. 교원4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
61. 교원4법 개정내용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 뿐 아니라 학원강사들의 교원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면보고 할 것

62. 저경력 교직원의 퇴사율 증가가 심화됨에 따라 퇴사율 감소를 위한 교육청의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63. 탕후루, 마라탕, 카페이용 등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식품이 유행되고 있는 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64. 유아모집정지 행정처분을 위반하여 유아모집 실시한 사립유치원이 유아학비 지원받은 근거 보고할 것
65. 용산구는 관광특구로 인하여 교원 외 인력,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강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고시(교육부)의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활동보호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어 교육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법령, 고시 개정 추진할 것
66. 급식 업무가 4개 조직으로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급식영양, 급식종사자, 급식시설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
67. 교육부에서 수능 후 “학생안전특별교육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마약 등을 계도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예방사업을 검토할 것
68.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 교육사각지대 청소년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률도 증가하는 바 적절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69. 2025년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에 앞서 재원 조달 방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이 해소, 유아학교 체제 확립 등 선결과제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70. 행감시 일부 출석대상자가 동일한 해외연수를 사유로 이석을 반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반드시 참석하도록 조치할 것

교육지원청

■ 중부교육지원청

1. 중부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부정 채용에 대한 사항 조치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1. 남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 교사의 행정자산 (CPU 26개) 절도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

1. 교육연구정보원은 홈페이지 중단 시에도 학생과 교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일 중단을 최소화하고 홈페이지 개선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

도서관 · 평생학습관

■ 정독도서관

1. 정독도서관은 최근 3년간 공사현황과 공사로 인한 휴관일수, 이용현황을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을 증원할 것

기타(자료제출 등)

884건

1. 운영위원회

21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14건

1. 2021년 11월 11일 이건희 기증관 건립 협약식 관련 협약서, 추진내용,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일체
2. 이승만 기념관 건립 관련 시장님·건립추진위 면담 내용
3. 윈터페스타 관련, 총감독 선임 근거 및 기본 현황
4.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추진 관련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현황, 임신, 출산 결과
5.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내역(22,23년)
6. 사단법인 어린이 창작영화 예술협회 문제 관련 조치 진행상황
7. 11월 13일(월) 시장님 동선
8. 교통방송 관련 시장 주재 회의, 논의사항 및 TBS와 홍보기획관 사이 수·발신 문서
9. 그레이트 한강 관련, 투자심사 결과서
10. 친선도시 우호도시 협약서(22년도 시장님 취임이후)
11. 지방자치단체 친선우호도시 협약 체결 관련 법령
12.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 방침서
13. 신년 해맞이 행사 계획서
14. 행감 자료 제출 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 추가제출

☐ 시의회사무처 : 7건

1. 세월호 기억공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2. 관용차량 의원 대상 배차 기준
3. 채용 면접위원 명단 미제출 관련 법률 자문 결과
4. 예산 성과지표 오류 수정하여 제출

5.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못한 사유 및 관련 조례나 규정
6. 관용차 관련 사용기준, 구입시기 및 가격, 내구연한 등 현황, 정비현황, 정비에 따른 렌트 사용현황, 운행일지 등
7. 의원수첩 등 제작 사업 관련 현재까지 집행 세부내역

2. 행정자치위원회 ----- 87건

□ 비상기획관 : 5건

1.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구성명단, 안보의식 함양 등 기념행사.포럼 등에 대한 시의원 참석여부 등 안내 전달사항 내역.
2. 업무보고 p46, 비상대피시설 점검 결과보고서가 매우 형식적이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있었음, 서울시-자치구 대피시설 점검 관련 수발신 목록(자치구의 결과보고서 회신 내용 포함)
3. 실제 민방위교육 운영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와 실제 운영 내용(영상과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요청
4. 민방위 6종 장비 종류별, 자치구별 확인한 편차 및 과잉 보유 장비 추가 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을 조사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출 바람
 - 각각의 구청별로 품목당 보급률이 높게 편중된 사유와 내용 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보유현황에 잡혀 있는지 재조사하고 예산편성시 과잉보유 품목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사내용과 개선방안을 별도 제출 및 보고하기 바람.
5. 대피소 시설 면적, 수용인원 등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부현황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출 바람

□ 행정국 : 12건

1. 잼버리 지원 관련 산하기관 동원된 직원 보상내역.
2. 풍수해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3. 서울시 연수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자부담 투자내역.
4. 특별조정교부금 산정식.

5. 남북교류협력기금 특별감사 관련 재발방지 대책
6.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선발인원 및 유관부서 배치현황
7. 법정단체 카드사용 비율이 적은 이유
8.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예산 집행현황
9.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구미경 의원 요구자료 5번(용역 관련) 확인
11. 최근 2년간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 사례(일별, 사용시간별)
12. 후생관 가격 조정 및 관리계획

□ 재무국 : 3건

1. 자치구 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등 부과 현황
2. 서울시가 점유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부과현황
3.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차이가 큰 원인 파악해서 보고 요청.

□ 평생교육국 : 3건

1. 서울형 교육플랫폼 오픈계획서 및 사전테스트 명단.
2. 서울연구원 서울런 성과평가 결과 자료.
3.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인재개발원 : 4건

1. 직원 교육수요조사 자료 및 전문자격증 과정에 대한 계획서 내역 등
2. 5급 승진시험 연기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3. 교육만족도 설문지 문항 샘플
4.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의 용역계약서

□ 감사위원회 : 8건

1. 인권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및 4회 회의계획서.
2.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2달 이내 각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보고 및 사후처리.
3.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개발 내용.
4. 인권지킴이단 관련 현재까지 현장방문 추진실적 내역 및 각 기관별 요

양보호사 및 입소자 1명당 요양보호사 현황(성별 구분)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6. 스마트밴드 사업(서울형 헬스케어) 감사결과보고서.
7. 안전감사 추진실적(업무보고)에 대한 사후조치
8.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신규 코스안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5건

1.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참관감시 조치실적 24건에 대한 세부내용.
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한 고충민원 접수 및 현황
3. 민원배심제 운영실적 건수에 대한 설명
4. 2022년~2023.9월까지 전직원 급여 지급내역
5.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이송·이첩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 10건

1. 자율방범대, 시민정책자문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치구별 현황
2. 여성 안심 휴대용 비상벨 지급 대상 관련 자료(계획서)
3. 고령자용 야간지팡이 등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예산집행을 관련 자료
4. 업무보고 p3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안심보안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심마을보안관 실제 협업 내용이 담긴 수발신 문서 일체 및 안심마을보안관이 함께 활동한 내역(자료 및 사진).
5.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p39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관련 수발신 공문.
6. 2023년 1월 이후 자치경찰위원장 출장 기록 일체(일시,장소,목적 포함).
7. 실무협의회 회의 안건별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자료 요청
8. SPO 청소년범죄예방 교육자료 요청
9. 가출패 관련 단속, 발견, 접수 실적·현황 요청
10.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현황 - 시설물 현황, 예산 내역 요청(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1건

1.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구체적으로 상세하고, 사업내용 포함)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법정 의무교육 이수현황 설명 자료
3. 자원봉사센터 통합 매뉴얼.
4. 최근 1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현황 및 내용.
5. 서울동행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6. 재능기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7. 기부금 부진 관련, 모금활동 금지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의 법정 근거, 지침
8. 자원봉사캠프 신규 설치 관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및 자치구자원봉사센터 간 업무분장
9.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교육 현황
1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11. 캠프에 대한 자원봉사 관련 교육현황(개요, 프로그램, 인원 등)

□ 서울장학재단 : 7건

1. '선순환인재장학금'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정량적, 정성적).
2.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장학사업 성과평가 개편사항.
3. 최근 5년간 기관/기관장 평가, 평가기준.
4. 2016~현재 월별 직원보수지급내역, 휴직현황(직급, 사유, 휴직기간, 복직일 포기). 복귀전/후 보직.
5. 최근 5년간 노조위원장 현황(근무형태, 직급 포기).
6.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자료.
7. 최근 5년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직급 포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4건

1. 최근 5년간 기관/기관장 평가, 평가기준.
2. 2016~현재 월별 직원보수지급내역, 휴직현황
(직급, 사유, 휴직기간, 복직일 포기). 복귀전/후 보직.
3. 최근 5년간 노조위원장 현황(근무형태, 직급 포기).
4.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자료.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15건

1. 4050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 세부내역서(연사 강의료 등 포함)
2. 50플러스재단 정원 중 휴직자 8인에 대한 직급, 직전경력, 휴직기간, 복귀 시기
3. 경영기획본부장(1급)에 대한 병휴직 기간, 현직급, 직무
4. 급여 기준표, 복무기준, 22~23 재직 임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현황(퇴직자 포함, 사전신고서, 사례금 지급 기준/내역/초과 사례금에 대한 반환 내역)
5. 도심권 50플러스센터 직원 8인(정원외 8인 무기계약직) 고용승계 관련 사전협의 내역(문서 수신,발신), 8인에 대한 보직
6. 올해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지적사항 22건에 대한 현재 진행 사항.
7. 최근 5년간 기관/기관장 평가, 평가기준
8. 2016~현재 월별 직원보수지급내역, 휴직현황
(직급, 사유, 휴직기간, 복직일 표기). 복귀전/후 보직
9. 최근 5년간 노조위원장 현황(근무형태, 직급 표기)
10. 3년 동안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교육사업 관련 부가세 납부 미이행 관련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부분에 대한 감사위원회와의 소통 내용.
12.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자료
13. 최근 3년간 50+센터별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사유
14. 최근 3년간 50+센터별 예산, 프로그램, 참석도, 만족도 등 운영 현황
15. 최근 5년간 50+센터별 프로그램 자료

3. 기획경제위원회

----- 100건

□ 기획조정실 : 8건

1.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재무활동 상세내역
2. 공기업 출연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친인척 관계 자료
3. 무기계약 직종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 인원수 등 내역

4. 2023.2. 수립한 창의행정 추진계획
5. 창의행정 개념
6. 불필요한 일버리기 개념
7. 가장 최근에 개최된 일버리기 TF 회의록
8. '서울형 R&D지원' 사업 투자심사 철회 사유 제출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포함) : 16건

1.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 2016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자료 및 조치결과
 - 2018년 건립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자료
 - 2023년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자료
 - 서울영화센터 사업비 증액 상세 내역
2. 최근 3년간 투출 기관 임대료 감면 지원 중 감면 대상 및 사유
3. 창업허브 공덕과 유니콘 창업허브 차이(비교표)
4. (서울형 R&D 관련)SBA로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긴 하나, 최근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합으로 일정 부분 이원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임. 서로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 필요
5. 스마트앵커(제조지원센터 솔루션 앵커) 7개소의 그간 사업평가내역 및 평가서
6. 중구 스마트앵커(인쇄센터) 사업 철회 공문
7. 서울국제금융오피스, 관련
 - 미,중 등 해외금융기관 7개 및 중미경제통합은행이라는데 해외금융기관이 무엇인지 설명바람

8. 국내외 금융기관 집적을 위한 오피스라고 하는데 국내 금융시장과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들에 혜택을 주는데 국내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별도 설명 요청
9. 바이오·의료, AI 산업, 핀테크 등 신기술 관련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 행사
10.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기업 명단
11. 청년 인턴 직무 캠프 인턴십 관련 취약계층의 기준
12. 2023년 서면으로 이루어진 자문회의 현황
13. 로봇과학관 운영방안 용역보고서
14. 로봇과학관 운영계획 수립보고서(최신 것)
15. 경제정책실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전수조사 필요
16. 뉴딜 일자리 관련
 - 2015년 처음 실시할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 뉴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해 다른 기업과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있음.
 -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품물시장,**

먹거리창업센터 포함) : 27건

1. 서울품물시장 홍보물 제작 및 문화공연 행사 및 체험존 운영내역 (최근 3년)
2. 중소유통물류센터 수탁기관 해지 및 명의도용 등 사기사건 관련 소상공인 피해현황, 피해발생 및 조치 진행과정
3. 마을기업, 협동조합 신청 현황(2021~2023년)

4. 전통시장 판매대(안심디자인) 관련 지원 후 시설 존치여부 확인 자료
5. 사회적가치창출 위해 소셜벤처 사업계획서, 예산, 입주조건, 입주기업 성과, 졸업기업의 현황
6. (한강달빛야시장 관련)하반기 처음으로 다회용컵 도입했는데 시민 반응이 어떤지 체크 필요. 다회용컵 회수율도 점검 바람
7. 코로나 이전에는 야시장 입점 경쟁이 치열해 동일지역 연속참가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22년부터 해당 언급이 없음.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고려 필요
8. 단기 행사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참가비를 받지 않았는데, 추후에 받을 의향이 있는지 정리 필요
9. 협약서상 협찬금 중 50% 이내 범위에서 수탁기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익금 및 협찬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점검 필요
10. 밤도깨비야시장에서 한강달빛야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한강으로 축소된 느낌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이름이라는 생각임. 브랜드 확장성 고민 필요
11.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내역,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2. 서울풍물시장 관련
 - 풍물시장 9개 임의증축 관련 서울시 보고 공문서
 - 풍물시장 9개 임의증축의 공사주체
 - 풍물시장 임의증축을 소장에게 승인 받았는 내역
 - 풍물시장 임의증축 공사 비용부담 주체
 - 풍물시장 임의증축 복구예산 관련 주고받은 공문서
 - 풍물시장 소장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계획

- 풍물시장 손해보험 가입 여부, 보험증권
 - 풍물시장 임의증축 철거지시 공문서
 - 풍물시장 9개 동 건립 시 소요 예산
 - 풍물시장 수탁기관인 백상과 수탁계약 전 했던 평가서 전체
13. 서울노동권익센터 최근 3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4. 노동자 참여 플랫폼 사업 운영내역 및 성과내역
 15.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최근 3년)
 16. 가장 최근에 나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17.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16개 자조조직 참여자 명단(이름 (홍0동, 직업, 소속명시) 및 자조조직별 지원금액, 자조조직별 활동내용보고서
 18. 감동런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교육 영상별 교육 신청자수
 19. 센터 콘텐츠 캐릭터 개발 비용 및 굿즈 제작비용, 굿즈 배포처 명단
 20. 센터 직원별 월별 급여대장
 21. 22년, 23년 풍물시장 관리비 연체를 3회 이상 한 업체 명단
 22. 천원의 아침밥 관련, 진행 학교들이 쓰고 있는 예산과 서울시 지원예산 등 기초실태
 23. 풍물시장 관리비 연체 관련 체납 점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향후 별도 보고하여 주기 바람
 24. 최근 3년간 풍물시장 정기지도점검 자료, 풍물시장 위수탁 협약서
 25. 서울풍물시장 소송관련 자료
 26.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27. 노공상 산하 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내용(회의록 관련된 회의결과 보고 문서 제출)

☐ **서울시립대학교 : 4건**

1. 명예교수 명단
2. 누수공사 현황 관련 추진내용 전반 등(계약금액 및 업체선정 과정 등)
3.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 설계 관련)연초 실시한 설문조사 모집단 구성이 객관적이지 않아 결과의 공정성 담보 어려움. 비판적 주장에 대한 해명 필요
4. 석좌교수 명단

☐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10건**

1. (하역노조 소송 관련)하역노조 하나가 없어지면서 근로자들과 소송 진행 중. 공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기 바람
2. (채소2동 현대화 사업 관련)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건설 및 공사 관련 업체들과의 문제 상황 등 공사비 산출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 의회에 미리 보고 요망
3.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자료
4.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출퇴근 자료 및 수당지급 자료
5. 노조 설립 후 현재까지 노조위원장 현황
6. 하역노조 현황(역대 노조위원장 포함)
7. 강서시장 소송 관련 자료(개요 및 진행사항 등)
8. 자회사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회사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9. 중도매인 행정처분 현황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최근 3년)
10.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조정 현황(최근 5년) 및 시설사용료 개선을 위한 검토 자료

☐ **서울연구원 : 없음**

☐ **서울경제진흥원 : 12건**

1. (CES 관련)내년도 서울시 독자적으로 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자치구(관악구)도 처음 함께 하는 만큼 좋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2. 창업허브(공덕) 입주 졸업 이후 SBA 추가지원 사항
3. (서울콘 관련)1차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다소 무게감 떨어지는 느낌임. 기대 섞인 우려가 행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람
4. 콘텐츠와 수출 경제효과 관련 자료
5. 국제유통센터의 협약을 통해 지원한 특정 2개 기업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
6. 베트남 서울메이드스트리트 운영관련 성과 증빙자료
7. 2023년 R&D지원사업 관련 환수 내역(1장이내)
8. 서울콘 참여 인플루언서 확정 명단 (윤리적문제, 선정성, 범죄이력 등 포함)
9. 최근 3년 SBA 임대료 관련 증감현황
10. 기부금 관련 세부내역(수입, 지출)
11. 중견기업(베어로보틱스, 큐어스트림, 다자요)으로 추정되는 업체 어플라이 관련 세부 심사자료
12. 최근 3년 SBA의 창업지원시설 입주업체 입주 심사기록 일체

☐ **서울신용보증재단 : 8건**

1.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현황(원금감면 포함)

2. 청년 골목창업학교 교육생의 창·폐업 현황
3.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매출 증가율 조사 내역
4. 2023년 경영전략부문 회의 내역
 -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안정화 방안
5. 복리후생제도 및 경영권 침해요인 개선계획
6. 임원 채용 관련 공고문
7. 출연금 확대 방안 구체적 계획 나오면 자료 제출
8. 2023년 악성 민원 사례 및 불친절 응대로 인한 직원 징계 내역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 8건**

1. (멜레 다이아몬드 선별 분석 장비 관련)고장으로 사용 불편 의견이 있음. 조치 바람
2. (자료 제출 관련)처음 받는 직접 감사이다 보니 오탈자 등 허술한 제출 다수 발견.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3.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45개 업체 선정기준, 매출 등 현황자료 및 월별 성과보고서
4. 센터 사업별 시민·일반사업자, 수출업자 수혜비중
5. KS링봉게이지 보급관련 오차발생 건 민원내역
6. 새활용 주얼리 및 파라미드 기획전 실 방문객 수와 판매 수익 내역
7. 국제주얼리컨퍼런스 예산은 늘어나는데 참여자가 줄어드는 이유
8. 주얼리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줄어드는 이유와 유료화한 이유
 -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7건

1.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업체와 지원 내역
2. 가락먹거리 융합클러스터 6개 기업 지원내역
3.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 관련)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생존 기업 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계통이 많은 사회적기업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센터의 판로 개척이 공공판로 중심에서 민간판로 확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ESG 확장 전략 등과 연계한 설계 필요
4.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업체와 지원 내역
5. 가락먹거리 융합클러스터 6개 기업 지원내역
6. 센터 창립기념일 행사 업무추진비 집행이 여러 건인데 쪼개기로 집행한 이유 소명바람
7. 올해 마을기업 예산 중 5천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마을기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와 전용 이유

4. 환경수자원위원회

----- 121건

기후환경본부 - 29건

1. 2023년 생활악취 저감시설 지원현황
2. 자치구별 환경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내용

3. 자치구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현황
4. VOCs 저감 친환경세탁기 지원 목록
5. 베란다 태양광 고발 진행현황
6. 녹색기업 투자사 선정 관련 현황
7. 오존 월별 농도 자료
8. 도장시설 VOCs IoT 측정기기 설치 결과
9. 강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협약서
10. 녹색기업 창업펀드 관련 현황
11.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업체명, 업체별 설치대수, 업체별 보조금 지원금액, 3년간 고장대수 및 비율, 고장대응 및 조치일수
12.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활동내역(최근 3년간)
13. 전기차 충전 방해전수 민원 현황
14.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2021년 아카데미 행사 세부내역
15.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관련 종이사용량 감축 세부내역
16.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감축 세부자료

17. 수의계약 계약서류(친환경건물과, 차량정비센터)
18. 에너지드림센터 종합성과평가의 배점표, 심사기준, 심사의원 검토의견 일체
19. 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업체간협약서
20. 서울에너지플러스 채용 과정(공고문, 채용계획서)
21. 365 청결기동대 운영 현황
22.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선도 사업내용
23. 1회용품 감축 시민실천홍보, 다량사업장 점검(34천 개소) 결과,
1회용품 줄이기 서울형 자율협약 추진 내용, 신성통상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내용 및 성과
24. 지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침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예산 투입내역
25.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모니터링 대상 구별 자료 및 해당 시설 모니터링
데이터(3~5월)
26. 녹색건축물 관련 자문위원 6명 직책 등 내용
27. 다회용 컵 회수기 정산 내역, 증빙자료, 현재 회수기 설치현황 (SK와
이후 설치회사 구분), 실적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1달간 컵 생애주기
관련 자료, 미반환보증금 예치 내역
28. 더블할인제, 개인컵의 날 보조사업자 계약서류
29. 보증금 반납받을 수 있는 기간 자료

푸른도시여가국 등 : 27건

[푸른도시여가국] - 16건

1. 서울둘레길 2.0 추진 용역보고서
2.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인력 활용 현황 및 구체적 자료
3. 서울둘레길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현황
4. 성산, 계남근린공원 사업 세부진행현황
5. 유기동물 응급치료 사업 집행내역 세부자료
6.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리공원 유상사용 내역
7. 서울로7017 조성 용역내용, 총 투입예산, 연간 이용객수
8. 북부/서부 캠핑장 이용객수
9. 23년 중부/서부 자원봉사 계획
10.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료
11.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자료

12. 가로수 트리맵 진행단계 및 계획

13. 시설녹지 보상 감정평가(이촌동, 개봉동) 자료

14. 최근 3년간 맵꽂이 차량 실적(월별), 협약서, 운영계획서, 정원박람회
기간 중 운행일지 및 탑승객 수

15. 한강공원 반려인반려견 임시쉼터 운영사업 및 우리동네 펫위탁소 시범운영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16. 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내용

[서울대공원] - 11건

1.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 조건 상세내역

2. 종합안내소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및 재무능력 제출 자료

3. 2023년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현황

4. 서울대공원 전략기획 관련 연구 용역

5. 2020~2023년 코로나19 관련 사용수익 허가시설 임대료 감면 현황

6. 사용수익허가 시설 현황(계약기간, 업체명, 사용료)

7. 협약서, 사용료 산출내역(2021~2023년)
8. 운영실적(2022년 3,5,7월, 2023년 3,5,7월)
9. 코끼리열차 운영계획서
10. 운영실적 및 매출(18~23년)
11. 2021~2023년 입찰공고 현황(입찰공고문 15건)

상수도사업본부 - 17건

1. 디지털 계량기 자기장 강도기준 및 시험성적서
2. 최근 3년간 아리수 홍보 실적
3. 학교 음수대, 양치대 설치현황 및 최근 3년간 음수대 철거현황
4. 노후밸브 구경별 정비계획 물량
5. 관사 장기거주자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내역
6. 아리수 코디 사업소별 목표, 신청수, 수질검사 실적
7.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형식별 교체 목표 및 실적
8. 최근 5년간 수도관 세척 입찰방식, 입찰참가업체 점수내역, 선정업체명

9. 수도요금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자 행정처분 현황

10. 최근 3년간 아리수 TV 예산 및 집행내역

11. '24년도 현장실습장 운영 예산

12. 최근 3년간 아리수 TV 예산 및 집행내역

13. '24년도 현장실습장 운영 예산

14. CI 개발 용역 과업 결과

15. 최근 3년간 계량기 구매 계획, 내역, 재고량 / 계량기 형식별 교체 목표 및 실적

16.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계량기 교체 실적

17. 서울물연구원 특허 출원 내역

미래한강본부 : 24건

1. 자전거안전교육 실시내역

2. 페트로 봉사단 운영내역

3. 3년간 쓰레기 처리내역3년간 쓰레기 처리내역
4. 최근 1년간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대책
5. 광나루, 난지 자전거공원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내역
6. 공원별 자전거사고 발생현황
7. 한강매점 3년간 대차대조표
8. 한강매점 cu, 이마트24에서 파는 품목 중 잘 팔리는 항목 위주로 가격 비교
9. 큐브인사이트와 맺은 협약서 자
10. 한강르네상스2.0 관련 한강유역청과 협의 내역(참석자, 주제 등)
11. 노점상 및 낚시 단속 실적자료
12. 수상스포츠센터 조성공사 계약서류
13. 여의도 눈썰매장 운영계획
14. 각 매점별 전력 용량 현황(증설포함/증설사유)
15. 23년도 매점 불법영업 행위(외부테이블 설치 등)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

16. 슈퍼트리 관련 심사위원, 심사표 등 자료
17. 밤섬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18. 관공선 운영 3년간 예산 상세집행 내역(각 선박별)
19. 추경으로 진행한 리버버스, 부유식 수영장, 여의도 접근성 개선 용역결과 내용, 결과 예정일, 향후계획
20. 리버버스 총투자비 산정 상세내역 (관계사 차액, 증자계획 120억 등)
21. 슈퍼트리 당선작, 2등작, 입선작 고화질 사진파일, 처음제시 사진파일
22. 서울함공원 공모절차 결과 및 내용
23. 리버버스 관련 sh공사 행감 답변자료 확인, 리버버스 관련 자료 일체 (제안서 원본(원본대조필), 감가상각 관련 판단근거 등)
24. 서울항 용역 과업지시서

서울에너지공사 : 24건

1. 목동 테니스장 민간업체 위탁 관련 자료
2. 최근 3년간 열수송관 누수사고 현황

3. 동북권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설치 현황(공급세대, 부지)
4. ODA 사업 관련 5년간 사업보고서, 출장보고서, 기부내역서, 항공권
5.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발주현황 (계약날짜, 설치완료 예정일 등)
6. 집중형 충전소(설치위치, 수량, 운영현황(구축중, 운영중)) 현황
7. 여주태양광 부지 주소별 면적, 임차료 산정근거, 업체 입찰내역, 입찰업체 세부평가내역(평가점수 등)
8. 가동중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명 일체
9. 현금성 기부 세부내역
10. 고척스카이돔 전기차 집중형 충전소 시운전 현황
11.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생 선발기준, 소재지
12. 노동이사 회의비, 업무추진비, 업무성과 자료
13.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한 물품, 기부처(지정기탁자)
14. 최근 3년간 가족수당 환수 내역

15. 2020년 이후 용역 관련 감독자 수당지급 현황
16. 상암수소충전소 폐쇄 대체부지 관련 서울시 협의내용, 회의록, 대상자 등
17. 태양광 SPC 출자 배당현황
18. 공사 성과급 지급내역
19. 물품 기부 지정기탁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2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활용열 연계 효과
21. 가로등형 전기차충전기 연도별 설치대수, 설치장소, 설치비용, 계약내용, 향후 설치계획
22. 여주 태양광 예산집행내역, 업체개요, 부지용도(부지지목), 부지선정사유(여주시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경우), 태양광 사업부지 계약서(합의서), 임대료 산정근거, 수익분배 내용, 마을발전기금 등 관련 내용
23. 대륜발전 열연계사업, 도봉차량기지 열연계 사업 추진현황
24. 여주 태양광 사업 관련 경제성 재검토 결과(실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등 반영)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3건

☐ 대변인 : 8건

1. 최근 5년간(2018~2023) 공무국외출장 현황
2. 코로나 이전 외신 보도자료 건수
3. 2천만원 이상 지출 및 급량비 증빙서류
4. 민원 중 보도자료 외래어 수정 관련 답변자료
5. 백남준 기념관 해명자료
6. 2020~2023 직원 휴가(병가) 내역
7. 2022년 유럽 국외출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지출자료
8. 최근 뉴스 스크랩 자료

☐ 홍보기획관 : 8건

1. 응답소 민원 제출 시 기피 부서를 지정했는데 답변 못 받고 종료되었다는 시민 제보가 들어옴. 앞으로 기피 요청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를 잘 안내하길 바랍
2. 서울시 힐링센터 최근 3년간 이용 실적
3.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및 서울브랜드위원회 회의록
4. 2023년 시정 정기여론조사 과업 지시서
5. 법인카드 추가 보완자료 : 멀티지엔에스 100만원 이상 결제건 건적 / 비교 건적 / 매출전표
6. 최근 3년간 유해사이트 차단 신청 목록
7. TBS 관련 : 임원 교체명단, 조직개편 내용, 퇴직자 명단
8. TBS 관련 : 1월 1일부로 지원이 끊기게 됐을 때 TBS의 법적 지위, 주파수, 내부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 문화본부 : 10건

1. 서울윈터페스타 개요 및 세부 일정
2. '19~'23년 청춘극장 예산 집행 내역
3.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비치 도서 목록, 대여 도서 목록
4. '23년 노들섬 세부공간별 대관 및 대관료 현황
5. '22~'23년 역사편찬원 전문가 답사 결과보고서
6. '22~'23년 청춘극장 영화내역 및 구입내역

7. 노들섬 접근로 개선 관련 자료
8. 서울윈터페스타 축제별 예산 세부 내역, 축제 운영방식
9. 서울윈터페스타 준비회의 결과보고서, 총감독 프로필
10.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안전 규정

☐ **관광체육국 : 10건**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예산 소계 추가 제출
2. 창의사업TF 계류식 가스 기구 계획 수립 및 진행현황
3. 최근 3개년 직장운동경기부 하위 10위 선수 연봉(종목, 연봉, 장애/비장애 구분)
4. 구인 구직 온라인 협력사이트 세부 내역
5. 서울페스타 2022, 2023 결과보고서, 행사 대금 지급 내역서
6. 외국인단체보험 지원 사업 지원실적
7. 환승 관광 세부 운영코스, 통합쇼핑 세부 방문지
8. 잠실야구장 헬멧 대여존 개수 및 보유 수량 등 현황
9. 챔버리 관련 인력, 장소제공, 예산 등 자료
10.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참여업체명, 선정평가지표, 선정위원회 명단

☐ **서울역사박물관 : 12건**

1. 역사박물관이 운영 하고 있는 시설 13개 서울시 지도에 표기 및 A3 출력
2. 유물기증자에 대한 혜택 및 기증 내역
3. 조직개편,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현황 자료(최근3년)
4. 5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전자 인수인계 현황 자료(최근 3년)
5. 서울학 심포지엄 자료집
6. 내용 연수 지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
7. 전체 분관에 대한 인력, 예산, 사업 프로그램 정리 자료
8. 외부강의 연 25회간 직원의 승인요청서
9. 안전 점검 계획 및 점검 결과 보고서
10. 나눔 계층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11. 분관 전체 안내 인력 현황 자료
12. 전시 만족도 조사 주관식 자료 정리해서 자료 제출 요망

☐ **서울시립미술관 : 11건**

1. 미술아카이브 배움동 앞 표지판 설치 검토, 배움동 사용 민원 대응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
2. 서소문 리모델링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3. 시립미술관 예술서점에서 서울시 굿즈 판매방안 검토 보고
4. '23년 국외 출장 보고서 일체
5. '23년 샤르자 비엔날레 국외 출장 업무 관련성 자료
6. 시립미술관 분관 내 안내 인력 배치현황
7. 미술아카이브 필사 참여자 신상 내역
8. 미술관 20대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국회의원 제출자료
9. 에드워드 호퍼전 전시장 지킴이 추가투입자료, 최종정산서, 회계감사 결과 자료
10. 비엔날레 작품 <오렌지 그리드> 작품 훼손(낙서) 경위
11. 에드워드 호퍼전 정산 내역, 걸작전 운영방식 법률 자문 결과

☐ **세종문화회관 : 11건**

1. 법인카드 관리부서
2. '19년부터 노동이사 현황 및 임기
3. 노동이사 카드 내역 적요 확인
4. 기관지 세종문화N 배부 내역
5. '23년 직원 국외 출장 보고서
6. 유급 노동조합 활동 내역과 '23년도 2명 이상 참여한 간담회 회의록
7. 전시 <스니커즈 언박스트> 공동주최 협약서
8.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과업 지시서 3건
9. 여비 규정 제출
10. '23년 뉴욕 이사장, 담당직원 항공권 바우처
11. '19년부터 현재까지 단체협약 105조에 근거하여 지급된 근무복 사진 제출

☐ **서울시립교향악단 : 4건**

1. 단원 연차 휴가 관련 규정
2. '23년 단원 연차 휴가 사용 내역
3. '21년 퇴사한 직원 연차수당 산출 내역

4. 지난 3년간 더블베이스의 잦은 수리 사유

☐ **서울문화재단 : 4건**

1. 조례에 제정된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성 이유는? 청년 의무 고용률이 계속 달성 안되는 이유는?
2.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는 공간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가 아닌 경우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3. '17~'23년 2월까지 노동이사 회의비 집행내역
4. 서울문화재단 소관 위원회 관련 내규에 있는 위원회 포함하여 자료 추가 제출

☐ **관광재단 : 2건**

1. 현행 노조 단체협약서
2. 창지사업TF 계류식 가스 기구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10건**

1. 해고와 관련된 주체와 타임라인, 해고 이유
2. 직위가 사원인 가급 직원의 업무 증빙
3. 민방위 문서 공개기준 및 대외비 기준
4. 비공식적이라도 내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 지원 예산 산출 자료
5. 보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자치구 단위의 취재계획
6. 허위문서 작성자, 심의팀장 징계 인사위원회 기록
7. '24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8. '22~'23년도에 수립된 업무계획 및 방침서
9. 김어준씨 출연료 미제출 관련 법률 검토 결과
10. 김어준씨에게 지급됐던 출연료 내역

☐ **120다산콜재단 : 13건**

1. 디지털건강관리 업체 업무협약 실적
2. '23년 국외 출장 2건 출장신고서, 출장복명서 등 포함한 결과보고서
3. '23년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및 사용 내역
4.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집단 치유 프로그램 중단 사유

5. 마음버스 운영 관련 자료
6. 최근 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단가 산출 내역
7. 최근 3년 악성 민원 강제 종료 건수
8. '22년 12월 수의계약 3건 공사 진행 사유
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 세부 내역
10. '23년 노사협의회 안전 및 회의록 일체
11. 최근 강제 종료 건수
12. 최근 3년 노동쟁의 발생 시 근무 인원, 인입률, 응대율 현황
13. 최근 3년 시간대별 상담사 수, 인입콜 수, 응대율

6. 보건복지위원회

----- 110건

◆ 여성가족정책실 : 31건

1. 데이트폭력 지원 관련
 - 한국다문화건강지원협회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사업추진현황
2.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 녹색병원과 체결한 의료지원 사업, 공동 캠페인, MOU 현황
3.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 2019년 구립 돌봄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및 2023년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계획
4.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 거점형 키움센터 차량일지, 유류대금, 기사 인건비 및 보험료, 계기판 사진
5.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관련
 - 꿈나눔하우스 이용 현황 자료, 연도별 예산
6. 자립준비청년 주거 관련
 -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7. 2021~2023년 9월 청소년 한부모 월별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아동수
8. 안전도어지킴이 관련

- 안전도어지킴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여부
- '21~'23년 집행내역, 구별현황, 대상자 등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관련
- '21~'23년 계획서 및 예산 집행내역
- 예산 증액 근거 자료

9. 안심장비 구별 지원 현황

10. 5자녀 이상 가족 별도 향후 지원계획

1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시설 유모차 보관소 비치 현황

12.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 최근 3개년도 강의 프로그램

13. 아픈아이 일시돌봄서비스 관련

- 키움센터별 올 한해/월/일시별 이용자 수(중복인원 제외)

14. 육아지원코디네이터 관련

- 현재까지 집행 세부내역 및 서울시 120명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월 평균 상담건수 및 자조모임 실적(최근 2년간)

15. 29개 서울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 이용 현황(학년구분, 참여프로그램명, 이용자 수(중복인원 제외))

16. 외국인가사도우미서비스(2개 업체) 협약서, 계약내용, 소요예산 현황

17.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관련

- 1인가구 지원사업 대학교 등 홍보 부스 설치 사진
- 홍보 부스를 통한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18. 서울시가 설치한 임옥상 작품 관련

- 설치일, 작품명, 장소, 설치사업 및 예산, 유지비용, 철거현황 및 비용

19. 성희롱을 포함한 성범죄자 작품의 설치 및 철거 가이드라인

20.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관련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무지개길잡이,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한 가이드 만들기 사업결과보고서

21.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조치사항

22. 여정가족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 현황
23. 찾아가는 안심상담실 관련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정산 시 문제되었던 정산자료 샘플
25. 나만의 결혼식 협력업체 4곳의 2022년 재무재표 및 진행 횟수
26.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조사 결과
27.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
 - 업체 제안요청서(RFP), 공고문, 사업계획, 최종 선정된 후 사업계획
28.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
 - 사이트 장애 일지
 - 운영 시 초·중·고급 인력, 이력서 및 역할 분담
29. ‘엄마아빠택시’ 관련
 - 승하차 일지, 재무제표, 승하차 비용(요금)
30.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증금 지원현황
31.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
 -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이용자 수 및 현황

◆ 여성가족재단 : 2건

1. 2022년도 신규 채용 인력 친인척 현황
 - 소속부서, 직급, 입사일자 등
2. 연구과제 착수자문회의 수당 관련 예산집행 근거
 - 연구과제(3건) 착수자문회의 참석자 및 수당 지급 내역
 - 연구과제 설문 조사비 산출 내역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6건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꿈나무마을 초록, 파란, 연두 꿈터)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1.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자료
 - 첫 위탁했을 때 지원서류와 심사결과
 - 인사 채용 절차 방침서, 최근 3년 채용심사위원 구성현황, 최근 3년 채용 결과내역
 - 최근 3년 임직원의 수당 지급내역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3.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조치내용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4.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조치내용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5.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조치내용
6. 현재 재직 중인 생활지도원 근속기간 및 직책별 평균 근속기간

◆ 복지정책실 : 16건

1. 안심소득 신청 링크 관련 홈페이지 유지비용
2. 국제 안심소득 포럼 관련
 - 국제안심포럼 사이트 개설비용, 홈페이지 관리업체 계약서 원본
3. 스마트 경로당 동행단 모집공고, 선정기준, 자치구별 배치인원, 명단(연령, 거주지역만 기재)
4. 장애인일자리 관련
 - 최근 3년간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시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등록장애인수, 성별, 유형별, 세대별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직종별)
- 5. 인문학 강좌 운영 실적(회수, 일시 기재)
- 6.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경로당 이용률, 전체 인구수 대비 이용률
- 7. 스마트경로당 구별 추진 현황, 우수사례, 미흡사례
- 8. 노인지원주택 도우누리와 참사랑복지회 지원예산 제출
- 9. 노인지원주택 서비스 제공현황
- 10. 소아마비협회 관련
 - 한국소아마비협회 수발신 문서 현황
- 11.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의 관련 자료
- 12. 스마트경로당 관련 현황
 - 기구 설치업체 목록, 업체 선정과정, 도입되는 기구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여부
- 13. 돌봄로봇 관련 논문 자료
- 14. 빈대관련 자료
 - '23년 소관시설 방역실시 건수 중 스팀살균 건수
 - 현재 빈대관련 민원 1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오는데 접수경로
 - 빈대 제균방법/지침 등 노숙인 대상 교육실시 여부
 - 서울역, 남대문 쪽방상담소 빈대 관련 4건 접수되고 방역조치 완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방역방법, 방역사용균제 등 방역 상세 내용
- 15. 노숙인 인문학 강좌 관련 자료
 - 어떤 과정을 통해 강좌 이수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 예산·편성·집행내역, 강사경력, 참여자현황
- 16. 자활근로 관련 자료
 - 조건부 수급자/자율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별 현황
 - 소속 기관별 현황
 - 탈수급률 현황, 탈자활 통계, 자활사업에 참여한 지속년 수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4건

<서울시 복지재단>

1. 서울시복지재단 검직 관련
 - 2014~2023년.9월 서울시복지재단 검직 현황
2. 서울시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원 현황('23. 10. 31. 기준)
(성명, 연령, 소속부서, 직급, 직위, 근속연수, 담당업무)
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축탁계약직 노조가입 현황('23. 10. 31. 기준)

◆ 복지 관련 시설 - 11건

(시립 고덕양로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광역),
서남, 동북,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시립 평화로운집,
서울시 서남, 동북, 서북 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 은평의마을, 시립 남대문 쪽방상담소)

<복지 관련 시설 전체>

1. '22 ~ '23년 추진사업 사업목록,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 (교육의 경우) 강의계획서, 수강 횟수, 수강 인원
 - (사업의 경우) 이용인원, 사업예산, 집행률

<시립 고덕양로원>

2. 고덕양로원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및 만족도 조사
3. 고덕양로원 식자재 납품계약서 및 예산 총괄표 (인건비 구분)
4. 9.1.~9.30.까지 식자재 발주서, 검수조서, 영양사 식단표, 월 발주 총금액, 결재선, 영수증, 결품 일자, 결품 내역, 결품 비율

<시립 평화로운집>

5. 입소자 장애유형별 구성인원
6. 식자재 공급계약서(9월 검수지, 오더지, 결품율), 2023년 근무연한

<서울시 보조기기 센터 전체>

7. 보조기기 센터별 목표인원 실적 달성률(최근 3년)

<서울시 동북 보조기기센터>

8. 동북 보조기기센터
 - 뇌병변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 국산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

9. 보조기기 시험적용 제공 현황(이용 현황표)
 - 보조기기 교부사업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 현황표)
 - 서비스에 대한 이용사례 월 1건씩(보조기서비스 사례회의록)

<시립 은평의마을>

10.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법인 전체)
 - 연혁, 위탁실적, 고소고발현황
11. 식자재 공급계약서, 검수조서, 발주서, 결품률, 영양사 근무연한

◆ 시민건강국 : 18건

1. 25개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 (표로 기재)
2. 방사능 검사 관련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액
(올해 대비 증감액 규모 기재)
3. 백일해 관련 신고 현황(건수 및 자치구)
4. 금연 관련 홍보자료 제출 요청(온라인 2억원, TV 1.4억원)

5. 누리봄·늘푸른집·새오름터 위·수탁 관련 내용
(지정/공개위탁 여부, 대상자 수, 3년간 행정조치 결과표)
6. 은평병원과 위·수탁 계약 체결한 가온 관련 현황자료
(어떤 곳인지, 사용허가 근거기준이나 법령 포함)
7. 식품정책과에서 내부거래 금지 위반명령 내린 사항과 관련된 상세 자료
(상세 내용, 보조금 예산액 등 포함)
8. 청년 마음건강 검진 연계 관리 현황
9.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전체 현황
10.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1:1 상담 게시판 내 비공개 상담내역 게시물별 출력
자료
11. 시립병원별 불납결손액(건수, 액수, 사유) 및 법인 기본금과 결손금 대조 자료
12. 시립병원 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 수, 주당 외래환자 진료시간, 병상가동률 및 의료
수입(외래와 입원 구분)
13. 4급 암모늄 관련 2023.6.8. 질병청·지자체 합동점검 결과자료(점검지 및 결과)
14. 우리아이안심병원 6개소 병원별 내원환자 수(총계 포함)
15.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 추진실적이 있는 48개소 목록과 병원별
병상수
16.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 현황 (지난 추경 이후 변화된 사항)
17. 서울의료원·서남병원 간호사 이직률, 고충상담접수센터에 접수한 상담 건수와 내용, 심
리상담프로그램 운영 현황
18.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기관별 직원채용 자격 규정 관련 서울시 지침 및 3년
간 임직원 이직률

◆ 보건환경연구원 : 1건

1. 성희롱·성폭력 등 재발 방지 교육 관련
 - 보건환경연구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교육 실시 현황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9건

(어린이, 은평, 서북 병원,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 병원, 장애인치과 병원, 고양, 백암, 축령 정신병원)

<서울의료원, 직영, 위탁 병원 공통>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관련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및 지정요건

<서울의료원>

2. 서울의료원 행감자료 관련
 - 내부감사(23.3.9-4.14) 진료기록 열람 관련 조사 내부감사 결과 원본 (개인정보 삭제)
3. 서울의료원 징계규정
4. '23년 서울의료원 욕창환자 발생건수 및 환자 상태(연령, 중증정도) 자료

<보라매병원>

5. 보라매병원 2023년 의식 없는 입원환자를 동의 없이 촬영한 징계 건과 관련하여 민원내용, 민원답변,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시 이름 삭제 후 제출)
6. 보라매병원 징계 규정
7. '23년 보라매병원 욕창환자 발생건수 및 환자 상태(연령, 중증정도)

<동부병원>

8. 불납결손액 조서 관련
 - 동부병원 불납결손액 조서 통계자료 재확인 후 제출 요청(동부병원)
9. 외주용역비 관련
 - 동부병원 외주용역비 상세내역

◆ 건강 관련 기관 : 12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 제2권역(동북), 제3권역(서남), 제4권역(중부) 센터,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2021~2023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 현황
(연도별 예산 편성액, 집행액 등 포함)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2. 서울자살예방센터 관련
 - 최근 2년간 상담기록 및 상담사이력서(이름 삭제)
3. 서울자살예방센터 관련
 - 2021년 11월 이후 채용위원회 위원명단
 - 채용공고문(5회), 지원자 이력서(채용된 사람 표기)

<서울 심리지원 1,2,3,4 센터 공통>

4. 심리지원센터 4개소 연도별 자부담내역, 법인전입금, 집행계획, 집행계획 승인, 집행내역(세출항목, 세목명)
5. 권역 심리지원센터(4개소) 관련
 - 직원 현황(전체)
 - 사업별 인건비·사업비 세부적으로 구분한 자료
6. 권역심리지원센터(4개소) 관련
 - 법인 정관, 연혁, 수탁기관 위탁현황

<서울 심리지원 제1권역(동북)센터>

7. 객원상담사 이력서

<서울 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8. 객원상담사(9인) 이력서 및 상담 결과 통계 자료

<서울 심리지원 제4권역(서남)센터>

9. 메타버스 사업 관련 자료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10.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위·수탁 계약서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 제출

<서울시 통합건강사업지원단>

11. 직원현황, 급여현황(호봉 포함), 사업별 사업비·인건비 구분한 자료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 증인 요구 기관>

12. FGI 진행 연구자 관련 신규 채용절차, 심사위원 구성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56건

[재난안전관리실] : 16 건

1. 투수블록 성능회복사업 장비확충계획, 정비물량을 포함한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
2. 송파안전체험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참여조건 등 계약 제반사항 검토 자료
3. 평창터널 관련 연구용역보고서(PMAC 22년)
4. 평창터널 관련 2022년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수정제안서

5.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명회 시 평창터널 재추진 요청 민원 관련 세부내용
6. 평창터널 설치 반대 민원내역
7. 시민안전보험 사업의 2022년도 홍보비 미편성 사유
8.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보험료가 매년 과하게 증가한 사유
9. 고성능 CCTV 설치계획(지역별) 조사 자료
10. 터널별 방재시설 현황(미비점 포함) 자료
11. 지하철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계획
1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업체의 대표이사가 사업책임기술자가 아닌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유.
13.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의 입찰공고가 '긴급'으로 공고된 사유.
14. 최근3년간 긴급복구 기동반 공무원 근무(처리내역) 일지(도로관리과)
15.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16. 금천구 시흥동 건립 청사 중 주민편의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의 건립 경위, 조성 경과, 운영수입, 임대료에 대한 정산자료

[소방재난본부] : 11건

1. 특수방화복 세탁기 현황 및 '24년도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매 추진계획
2. '24년도 특수방화복 관리 방안(전용 세탁기,외부 위탁 등)
3. 서울시 119구급차 현황 및 최근 2년간 신고 접수 및 소방관서별 구급 출동 현황
4. 최근 1년간 응급실 이송 현황 및 이송 거부 사례 현황(발생 장소 및 사유 포함)
5. 서울시내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대상 현황
6. 한강안전시스템 유지 관리업체(IT 지원기술자 포함) 현황
7. 근무체계 개선에 대한 현황과 기대효과 자료
8. 소방서 초도방문 시 청취한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비율 관련 소방노조 요구에 대한 대응 및 협의 자료
10. 구급차 내부 CCTV 운영의 문제 현황
11. 관용차량 사용 내역 중 지적사항(목적지를 숫자 등으로 입력, 용무 기타로 기입 후 목적지를 노래방 등으로 입력, 운행시간 1,620시간 입력)에 대한 해명자료

[물순환안전국] : 12건

1. 도림천 관련 자전거 도로, 조경, 화장실, 유지용수 현황.
2.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 관련 굴착, 비굴착 예산편성 현황.
3.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횟수, 방법, 항목, 기준, 절차 등 관련 자료.
4. 지하공동구 노후시설 조사 후 보고 자료.
5.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 징수방안.
6. 하수관로 준설 관련 설계물량과 정산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처 계획.
7. 용산역 일대 유류오염정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누락된 연도 자료 제출.
8. 중랑물재생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3처리장 초침 슬러지 계면층 정기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 과정 및 결과 자료.

9. 하수관로 보수보강 '23년 공사 시행현황, 신기술 등 심의 개최 계획 및 도입현황.
10.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용 중인 관용차량(61우 8102) '21년 사용내역.
11.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자료 및 주민 의견 취합 자료.
12. 서울시 하천 조경석 주변 공기측정 및 하천별 검사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3 건

1. 월드컵대교 북단 접속교가 제작장 도장 후 거치까지 17개월이 소요된 사유
2. 개통 예정 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모니터링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실시한 사례 제출.
3. 도기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중 철거공사 하도급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유.

5.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실시설계 완료 후 단계별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제출.
6. 2016년도 이후 서울시 청림건설행정시스템 추진현황(지원국가)
7.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진행 상황 및 준공계획 자료.
8.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의 온도측정 자료.
9. 신림-봉천터널 공사지연 세부 사유.
10.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출.
11.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관련 현장조사 없이 실시설계자에 대한 처벌조치 후 결과 제출할 것.
12. 신림봉천터널 공사 관련 주민 민원 내용, 조치 결과, 향후 처리 계획
13.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각 터널 화재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기준

[기술심사담당관] : 4 건

1. 품질시험소의 가설기자제 품질시험 능력 확보 방안
2.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주요 계획 및 성과 내용

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건설현장 점검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선 방안

8. 주택공간위원회

84건

[주택정책실] : 12 건

1. 국토부 전세사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강서구 등 가결건수 적은 이유, 부결사유.
2. 금년도 개설한 위원회 2개 자료 누락.
3. 리모델링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거 자료.
4.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 관련 석관동 일대 내부 검토자료.
5. 안심집수리 지원내역.
6. 월곡동 청년안심주택 공사기간, 시공사 관련 자료.
7.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련 연도별 정확한 집행액 리스트.
8. 주차장 높이 규정 관련 개정 현황 등 자료.
9. 청년안심주택 유사 사행성시설 입점 관련 조치현황 자료.
10. 최근 10년간 서울시 녹색건축물인증 실적 데이터.
11. 휴먼타운 관련 모아센터 부시장 방침 자료.
12. 희망의 집수리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하반기 가구당 지원내역.

[미래공간기획관] : 21 건

1. 국제설계공모인데 해외 건축가 당선내역이 없어 취지가 무색함. - 국제설계공모 시 해외 건축가 당선작 내역 보고.
2. 대관람차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전성, 사업성 문제 답변 바람.
3. 대관람차 조성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공모 절차, 안전성 등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임.
4. 대관람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늘공원 입지 검토 결과가 노들섬보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왜 하늘공원이 선정되었는지 설명 바람.
5.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관련 임차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임차상인 요구사항 등을 간략히 설명해주고, 향후 조치 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입장 답변 바람.
6.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민원 관련 상생방안의 명문화와 고령 임차상인에 대한 임차권 상속 요구에 대해 공공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람.
7. 마포농수산물시장 건축혁신 추진은 대관람차 조성 사업과 연계된 종합구상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8. 사전협상 통합 상담 및 사전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협상까지 진척된 대상지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추후 자세한 보고 바람.
9. 성대야구장, 한국감정원부지 등은 대상지 선정 이후 10년 정도 경과했음에도 진척이 없으므로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검토 후 별도 보고 바람.
10. 여러 작가의 일부 제안만 모은 노들섬 기획디자인 공모가 온전하게 작가의 의도를 구현할지와 제안된 설계금액을 감안할 때 3천 억원으로 작가가 의도한 예술성과 작품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재정확보 방안이 궁금함.

11.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관련 '24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 설명 등 최선 다하기 바람.
12.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관련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내년도 예산이 미반영 되었는데 예산 반영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 바람.
13. 제2세종문화회관의 미래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은 무엇인지? 평면의 이미지로 홍보하기보다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면 좋겠음.
14. 한강철교 남단 수변복합개발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서울시 정책이 SH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조인지?
15.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공사비가 크게 변경(증가)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16. '23년 미래공간기획관 추진용역 건별 집행현황 및 이월예산금액.
17. '23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예산 집행 건별 상세내역.
18. 국제적 도심문화공원 재편을 위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계획.
19.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변경 방침서.
20. 제2세종문화회관 문화본부 편성 예산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예산담당관과 협의시 예산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
21. 최근 3년간 미래공간기획관 기술용역 제경비, 기술료 등 지급내역.

[디지털정책관] : 3 건

1. WeGO 회비 수입에 대한 보고가 불투명함. 관련 자료 제출바람.
2. 각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예산 집행률 자료 요청.
3. 메타버스 일별 이용객 자료 제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 : 38 건

1. 가든파이프 공실이 약 6%이고, 공실관리비가 17억임.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과 공실관리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2. 가든파이프 층별 대표자 선정 후, 관리단 대표를 선정하는데 SH퇴직자 출신이 많아 SH 입맛에 맞는 대표자를 선정한다는 민원이 있으며, 설계업체 등 공사와의 계약체결 업체 중 전관업체도 다수 발견이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3. 공기업은 자산매각보다는 보유를 해야한다는 소신,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은 없다는 소신도 변함 없는지? 사장은 임대주택을 진짜(건설형), 짝퉁(매입형), 가짜(임차형)로 분류한 바 있는데, 진짜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소신에 변함 없는지? '23년도 SH 공급 임대주택 중 가짜는 67%, 짝퉁 32%, 진짜는 0.1%에 불과함.
4. 내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변경됨.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제출자료 관련, 1/3의 사업이 집행률 50% 미만으로 저조함. 9월 말 기준 17개 사업 317억원이 집행률 0%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신경 쓸 필요 있음.
5. 디스커버리 등 매입임대사업 관련 어떤 문제가 있던, SH업무에 특혜가 있었다면 큰 문제이나 그것만으로 매입약정방식에 문제를 삼는 것은 오류임. 공사 내부적으로 매입임대사업 추진계획도 세웠고 정부

정책을 사장 개인의 소신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됨.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추진해야 함. 결정된 사항은 이행하고 나서 건의 노력은 별개로 해야 함. 공사 내부 방침 상 신축약정방식 매입임대는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장의 문서화되지 않은 의지는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의 혼돈이 있음.

6. 매입약정주택 관련 부서 인력도 줄일 계획인지? 구축매입과 신축약정 공고 계획이 있는지? 구축 주택의 시설보수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7. 매입예산이 약 6천억 규모 삭감됨.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매입하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의 미지급 정산 때문인지?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음.
8. 매입임대 출자금 정산 관련, 1,180억원 상계 처리된 부분이 의회에 보고되었는지? 의회 보고도 없이 단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9. 반값아파트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분양주택 아닌지? 해당 발언의 파장이 우려됨.
10. 사장 취임 후 1달만에 사장 방침으로 대외협력고문을 선정함. 5개월만에 고문을 그만두고 주택정책실장으로 간 뒤 4개월 후 부시장으로 취임함. 부시장이 되기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었는지?
11.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공급이 저조한 상태임. 공약이 유효한 건지?
12.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임차형은 어려우니 매입형이라도 공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있는지?
13.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시설보수 비용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매년 동결되었음. 감가상각비 등이 늘어 적자 폭이 연간 4천억이 넘어가

는데 34개 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에만 6천억이 넘게 소요됨.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14. 혼합주택단지 관리업체는 3자 계약선정이 꼭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 입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서센터의 적극 협조를 부탁함.
15. 1구 1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 관련 향후 구체적 로드맵 및 민간위탁 16개소의 구체적 직영 전환 계획.
16. 2023년 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매입형 임대주택 비율이 32.3%인데 이 중에서 매입약정방식이 아닌 진짜 임대주택 비율.
17. SH공사 부서/직원포상금 지급 현황(최근 5년간).
18. 공사의 총 지출예산 중 매입임대가 40~50%비율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서면 제출.
19.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
20. 리버버스 PFV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21. 반지하주택 매입관련, 1. 금년 감정평가 목록, 2. 매입심의위원 명단, 3. 매매협의 중 계약무산된 건수 및 해당 목록.
22. 비디오폰 설치 용역회사의 계약서 제출.
23. 서울투자운용 SH공사 전직 임직원 채용현황.
24. 세운사업 관련 연도별 공사채 승인내역 및 시의회 재보고 관련 규정(관련기관 주고받은 공문, 보고시기 포함).
25. 시설민원 콜센터 운영 현황.
26. 신축매입약정 주택 중 디스커버리펀드가 개입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출바람.

27.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판단하는 근거 및 침수지역보다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
28. 위례A1-14 이익공유형으로 추진하는 사유 및 관련자료 제출바람.
29. 이크루즈가 운영 중인 선착장 자료 제출 요청.
30.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등 제기한 현황이 22년 대비 23년 급증하였는데 임대료 5% 인상이 아닌지 조사하여 자료 제출 요청.
31.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최근 5년간).
32.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로드맵 제출바람.
33. 전세임대 물량확대 요청한 공문 및 회신문 제출.
34. 전세임대 예산이 내년에 줄어드는 데 매입임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35. 최근 3년간 고문업무실적은?
36. 최근 3년간 준공현장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37. 플로팅아일랜드에 파견한 감사의 기능 및 성과 제출바람.
38. 한강 리버버스 관련 선박을 다시 이크루즈에 매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

[서울디지털재단] : 10 건

1.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내역(경비 비중 증가 사유 포함).
2.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인 사유?
3. 국외출장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 .
4. 어디나지원단 운영 필요성, 만족도 조사 결과.
5.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누락 자료.

6. 연도별 CES 서울관 실적(참가기업 실적 포함).
7. 자치구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및 자치구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컨설팅 운영 및 활용 현황 자료.
8. (주)더웰컴 관련 용역계약자료 일체.
9.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 및 자료 일체, 최근 3년간 계약금액 2천2백만원 건 및 계약금액 5천5백만원 건 목록 및 자료 일체.
10. 최근 3년간 해외 전시행사용역에 (주)더웰컴 단독응찰 사유 및 서울시 종합감사 내용.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38건

[도시계획국] : 13 건

1. 신고도지구 용역관련 현재까지 용역보고서 내용
2. 비윤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관련 자료
3. 국가상징공간 관련 자료
4. 한강프로젝트 관련 자료
5. 신속통합기획 관련, 동의율, 추진방향, 이후 계획
6.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관련 자료
7. 남산 고도지구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
8. 비오톱1등급지와 개발제한구역(GB) 중첩 현황자료
9. 최근 5년 연도별 비오톱 등급 변경 내역(유형 변경 71건)
10. '76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건설부 고시자료

11. '78년 국회-서울시 간 건축허가 사전협의제 관련자료
12. 新 고도지구 구상안 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높이기준 산정 관련 자료
13. 기부채납 부지 용도지역 상한 용적률 가중치 적용 산정기준 자료

[균형발전본부] : 8 건

1. 10대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밀어주기식 CRC에 대한 자료
2. 다동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
 - 공공선투자 후회수 제도도입 및 시범사업 계획('22.8.18.)
 - 다동공원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23.10.26.)
 - 최근 3년간 공원조성사업 투자심사 시 B/C 내역
3. 메이커스큐브 입주사 중 첨단산업 관련 입주 현황
4.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도출한 심의 기준과 적용 결과, 용역 중간 보고 결과
5. 한양도성 도심부활성화 TF운영 활동결과 및 서울도심 기본계획 확정·공고 내용
6. 창동차량기지 고가구조물 최적화사업 추진계획
7. 국가상징 가로조성 세부사업계획 내용 보고
8.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공사 안전관리 관련

[디자인정책관] : 3 건

1.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서울라이트 DDP 예산 지출 세부내역

2.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내용과 방향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3 건

1.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관련 자료 제출
2. 약자동행 지표별로 연계된 서울시 사업 목록
3. 2022년 기준 약자동행사업 예산 추이 자료

[미래청년기획단] : 6 건

1. 청정넷 용역 계약서
2. 미래인재DB 선발과정 및 친화위원회에 활동하는 청년들에 관한 결과 보고서
3. 청년 자율예산 관련 자료
4. 세입, 세출예산에서 순증 내역
5.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별 기업현황,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22년 사업 이후 평가 자료
6. 미래 청년 일자리 고용승계 관련 자료

[서울디자인재단] : 5 건

1. DDP 대관률 75.01% 업계 비교자료
2. DDP 혁신안 진행 현황 및 결과 자료, DDP 사업만족도 조사 리스트 및 만족도 결과 및 설문지, DDP 대관률 75.01% 업계 비교자료
3. 고유, 위탁, 대행사업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 및 최근 2년간 DDP 주요 전

시, 행사리스트

4. 소장품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록

5. 서울 굿즈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규모, 위치, 계획 등 현황자료

10. 교통위원회

57건

【도시교통실】 기타(자료요구) 32건

1. 최근 3년간(2021~2023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관련 서울시 예산 투입 현황(국비/시비 구분)
2. 중형택시, 대형택시 전기택시 도입비용
3. 최근 3년간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및 보급 실적
4. 9호선 1단계 금전 대여 관련 자료
5.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별 유보금 총액/배당금 비율/배당금의 성격
6. 사모펀드사에 투자유치 사업제안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자료 제출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출
7.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내역
8.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등 월별 집행내역
9. 주요 플랫폼사 가맹수수료 현황
10. 도시교통실 예산 집행내역
11. 도시교통실 예산 집행 부진한 사업이 많음. 심지어 0%인 건들도 상당함.
11월 말 기준 50% 미만 예산 집행된 사업을 과별로 보고 바람
12. 기후동행카드 시행 시 따릉이, 지하철, 버스 손익예상 분석 자료 제출 요구
13. 최근 5년간 티머니 전체 및 사회환원 관련 법인세 현황
14. GS 강서타워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교통영향 분석 결과

15.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미인증 업체 대상 즉시전인구역 유예제도 배제 후 미인증 업체별 건수 증감 자료(전년도와 비교)
16. 9호선 2,3단계 관련 서울교통공사와 협약 체결한 금액 1단계와 세부항목별 비교
17. 자치구별 버스 노선 통계자료
18.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19. 2023년도 시내버스 회사 평가 매뉴얼
20. 최근3년 버스운행실태 점검자 출장기록
21. 2022년~23년도 신규 전동차 증차 내역
22. 2022년~23년도 전동차 폐차 내역
 - 폐차 규모 : 한 편성씩 했는지 8량, 10량
 - 폐차 원인 : 고장, 노후
 - 전동차 각각의 이력부
23. 코로나 시기 9호선 1단계 관리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사례
24. 티머니 환불 관련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났는지, 판결문 일체
25. 자치구별 온열의자 현황과 고장·수리에 소요된 예산 현황
26. 2014년 시행 버스 컨설팅 용역 제안내용 이행 현황
27.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
28. 최근 5년간(2018~2022년) 버스회사별 배당금 현황(일반회사, 사모펀드회사 구분)
29. 시내버스 회사 배당금 현황, 유보금 현황, 부동산 매각 등 현황
30.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서

31. 명동 입구에서 남대문시장 사이 노선버스 현황

- 버스정류장 02283, 02253, 02681 정차 노선 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김성준 의원 33번 자료 관련〉

32. 버스회사 재정현황 자료 중 (붙임1) 회사별 적자/자본/부채현황 중 태릉교통, 한서교통 부채비율 재확인 후 다시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기타(자료요구) 3건

1. 도시철도 공사구간 소음진동 관련 주야간 허용기준 / 측정결과
2.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이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정산중에 있는데 추후 예산처리 결과를 보고 바람
3. 최근 5년간 공사, 물품, 감리 발주내역 자료 제출

[서울교통공사] 기타(자료요구) 12건

1. 자회사에 대한 영업외수익(이자수익) 감사실시 현황
2.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별 이자수익 운영현황
3. 서울시 지하철 역사별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속도에 관한 평가결과 자료
4. 전동차의 평균 수명 데이터 자료
5. 전동차 정밀검사를 통해 연장 사용하는 데이터 자료
6. 선로시스템 검측시스템과 드론 관제시스템 성능, 가격 등 비교표 제출
7. 2022년 기준 자회사 임원 보수액
8. 자회사별 2018~2023.9월 징계전수 중 '중징계'에 해당되는 건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제출 바람
9. 2023년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문 일체
10. 서울교통공사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보, 면담, 감사 내역
11. 사당, 마곡 지상부지 복합개발 내용 및 기타 유희부지 활용 계획

12. 9호선운영부문의 조직진단과 적정인력 산정 연구의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서

【서울시설공단】 기타(자료요구) 10건

1. 해외파견 지원자 선발 과정 전체자료 제출
2. 서울시설공단 위탁교육 현황, 서울시설공단 지원 사항,
위탁교육 대상 직원 인적 사항
3. SEMBA 졸업자의 교육 이후 업무성과 활용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보고
4. 최고위 교육과정·학위 지원받은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분야에 기여
했는지 자료 제출 바람
5. 자동차전용도로 투명방음벽 설치현황과 버드세이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제출 바람
6. 2023년 풍수해 관련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7. 방음터널 교체 계획(5개소) 관련 방침서
8. '22.11월~현재까지 운전원 음주측정 세부 자료제출
9. 5년간 추모시설 화장로 설비 기능 보강 계약 자료 제출
 - 사업명, 입찰방법, 입찰 심사내역, 입찰기간, 입찰참가 업체수, 입찰참가 업체명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공고방법, 공고일, 입찰일, 낙찰일, 계약일, 공고기간, 계약업체명
 - 편성금액,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및 법적근거
 - 계약업체 선급금 사용내역, 선급금 사용 내역에 따른 참여업체 일체, 집행금액, 준공정산 금액
10. 자동차전용도로 저소음 포장 공사 대비 미비한 효과 관련하여 대책 등 검토
하여 보고 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분기별 점검 자료 및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
2. 2023년 7~8월 실시한 입시,보습학원 및 어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 자료 및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
3.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료를 지원한 현황 제출할 것(2019~2023.10.)
4. 언론사 별 다른 광고비를 책정한 내부기준을 제출할 것
5.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집행현황 및 세부적인 지출 내역 제출할 것
6. 난독, 경제성 지능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및 예산집행현황(2023년 기준) 제출할 것
7. 석면관리 업무가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이관된 사유와 석면 유해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한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된 계약 현황(4곳) 자료, 소규모 석면공사 진행상황과 공사결과 자료 제출할 것
8. 학교내 생존수영교육 관련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것
9. 학교 폭력사안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피의자 관계 조정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제출할 것
10. 학교 폭력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현황 자료 제출할 것
11. 교육청은 교육금고 지정 및 운용 관련하여 법률자문, 전문가·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자문에 참석한 전문가 명단(경력사항 등)을 제출할 것
12.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할 것
13. 안정성이 보이지 않는 동도중학교의 교실 천장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할 것
14.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할 것

15.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는 사유 및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할 것
16. 서울미래교육지구 25개 자치구별 협의체 구성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17.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개설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
18. IB탐색학교, KB 한국형 바칼로레아 추진된 현황을 제출할 것
19. 최근 10년간(2014~2023) 교육전문직원 증감현황(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 유형별로 10년간 정원 증감현황) 제출할 것
20.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제출할 것
21.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출할 것
22. 학교 도서관 내 유해논란 도서(4권)가 학교에 배치된 시기 등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유해논란 도서와 관련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
23. 학교 도서관 내 음란서적(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등 7종)이 비치된 학교의 도서 선정 절차와 경위를 제출할 것, 관련된 학교별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프로필)을 제출할 것
24. 국/공/사립학교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및 급식보조인력 배치 기준 자료를 제출할 것
25. 물가상승률이 급식단가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제출할 것
26. 기숙사형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7. 화변기 교체사업 관련 선호도 설문조사 양식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28. 동자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및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
29. 2021년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에 적시된 하자보수 미조치 3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것
30. 최근 3년간 교육청 자체감사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본청과 지원청 구분하여)
31.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32. 노동조합사무소 지원과 관련 자료에 기재된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할 것
33. 교원단체 등 노조가 보조사업으로 평화통일 등 교육사업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노조의 역할 및 노조가 이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고할 것
34. 교직원 출장 및 휴가기록, 사무국 출장기록부 자료를 제출할 것
35. 겸직허가신청서 및 내부결재 원본 및 붙임자료를 제출할 것

36. 최근 3년간(2021, 2022, 2023 현재기준) 동답초등학교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
37. 2022년 동답초등학교 학교예술교육활성화(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예산 교
부 공문 붙임자료(예산교부내역서, 운영계획서,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8. 2023.11.2. 동답초등학교 특별장학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할 것
39. 2022/3, 2023/3 학교예산 관련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것
40. 학교영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기부등본, 학교영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학교 공
간 사용 허가 관련 서류, 학교영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코디네이터 인
건비 책정 기준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
41. 서울시교육청 소관 노동조합 정관, 노동조합에 지원한 보조사업 및 비품내역을 제
출할 것
42. 초등학교 교직원 겸직신고 여부 확인할 것
43. 학교협동조합 운영 실태(조합수, 조합원의 겸직사항 포함) 자료를 제출할 것
44. 겸직신고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경과 후 겸직신고를 한 교원에 대한 징
계수위 사례 및 징계기준 자료를 제출할 것
45. 학교 내 협동조합의 관리 권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46. 위촉직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출할 것
47. 어린이창작영화제 관련 출장복명 한 근무상황부를 제출할 것
48. 노조 관련 운영비 등 지원 기준을 제출할 것
49. 화양초등학교 내 협동조합지원센터 배치 사유를 제출할 것
50. 학교도서관 자료 선정 운영위 심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
51. 복합화 시설 운영 방안 및 계획 자료 제출할 것
52. 학교 복합화시설 관련 교육연수원 진행 연수 내역 자료 제출할 것
53. 복합시설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즉시 이행 및 보고할 것
54.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 등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 강
화할 것
55. 디벗 관련하여 학부모 민원사항인 사용 제한, 통제 방안에 대해 향후 조치계획 제
출할 것
56. 자유학기제 영역별 활동 모니터링 결과 자료 제출할 것
57.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최근 3년간 주최한 행사 자료 제출할 것
58. 언북초등학교 공유재산허가서 제출할 것

59. 장애인 학생이 포함된 학교폭력 관련하여 가해학생/피해학생/쌍방 책임 여부 자료 제출할 것
60. 교육행정직이 교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하여 자료 제출할 것
61. 전체학교 대상 학교수영장 불법 전대 현황(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현황) 자료 제출할 것
62. 교육감 재산 변동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63. 가공식품 등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64. 배움터지킴이 10년간 인사채용 자료를 제출할 것
65. 징계 양정 절차 및 최근 5년간 징계 현황(배움터지킴이 등 인사채용 관련 전체 및 계약이나 민원 등 학교장이 본청으로부터 각각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66. 학교도서관 유해논란서적 심의기준, 심의내역과 현재까지 학교에 배포된 서적 보유현황을 제출할 것
67.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도박 관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단체 상향 및 근절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68.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69. 고교 배정시 1단계, 2단계 각 지방 학교의 배정여부를 확인하는 정책연구보고서(2015) 및 학생지원 순위별 배정인원 희망배정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70. 교육복지거점학교제도의 선정기준 변경에 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71. 도박 관련 학생생활위원회 징계 단계 상황 및 근절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할 것
72.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유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사유를 보고할 것
73. 학교폭력 관련 비밀유지 의무 위반 건(상담소견서 외부유출 등)에 대해 감사관에게서 취한 조치사항 제출할 것
74. 학교폭력 상담센터 외부 위탁기관 환수조치, 주의조치 등 전수조사 관련 사항, 재발 방지 방안 제출할 것
75. 흑석고등학교 2026년 3월 개교 방안 및 학군 배치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제출할 것
76. 교육청 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

7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과 초과근무기록을 월단위로 기재해서 제출할 것
78.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리 등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79.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사항에 대하여 자체조사 상세 처리결과 내역을 제출할 것
80. 상근시민감사관이 팀단위로 근무한 내역 및 타 팀의 요청으로 감사를 진행한 경우 등 근무 사례 및 결과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것
81. 강남서초통합지원센터 내 심의위원회 운용 관련 교육내용이 담긴 자료 및 교육현황 자료, 심의 판전 근거 및 기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
82. 강남서초통합지원센터 부정수급 사례를 제출할 것
83. 2021년 당시 강남서초통합지원센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 사안 중 2022년 12월 22일 재량권 남용 일탈 판정을 받은 내용을 심의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제출하고 현재 역임하고 있는 그 당시 위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보고할 것
84. 화장실 배관교체 관련 내용연수 및 단가 기준 자료를 제출할 것
85. 화변기 교체금액이 과다한 학교의 화변기교체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
86. 인사모니터링 TF보고서 제출할 것
87.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 운영 현황, 공익신고 자료 및 공익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을 제출할 것
88. 교육감 비서실 내 정책보좌관의 인력(이름,업무,인원)사항을 제출할 것
89. 학교 도서관 서적 심의 기준 및 심의 내역을 제출할 것(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및 내역/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준 및 내역)
90. 생태전환교육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누락사유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의 이자수입 내역을 제출할 것
91.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할 것
92.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93.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10~19세) 통계 자료를 제출할 것
94. 장애인 학생 대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횟수, 심의 위원 현직 등 개요, 심의 안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제출할 것
95. 환기설비 청소, 필터교체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예산추계하여 제출할 것

96.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여부 및 설치 비용 예산추계하여 제출할 것
97. 청구초, 용산초 수영장 전대 관련 조치 결과 사항을 제출할 것
98. 동진학교 건립 추진 사항을 보고할 것
99. 대진디자인고등학교 5월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자료(학교폭력의 위법성, 처벌자료 등) 제출할 것
100. 대진디자인고등학교 학생 현장체험학습 처리 관련하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

1. 교육연구정보원은 뉴쌤 교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제출할 것

■ 보건안전진흥원

1. 보건안전진흥원은 석면건축물학교 현황, 석면 보수키트 학교운영비 가이드라인, 석면보수키트 보급현황(업체 포함), 석면보수키트 학교별 구매제품 및 제공업체 현황 자료 제출할 것
2. 보건안전진흥원은 청소년 도박 관련 사건 자료를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는 성00 이사장 박사논문 원본 파일 제출할 것